
2016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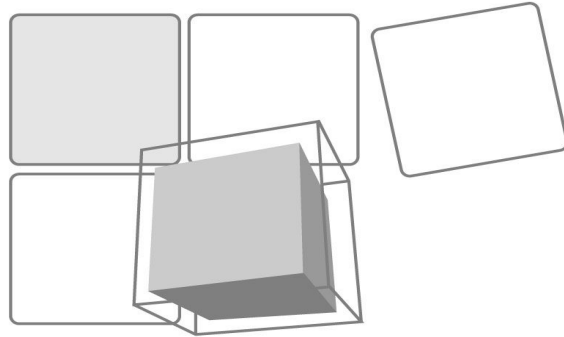
2016.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요약본	1
I.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개요	9
II.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	12
III. '15년 성과 및 반성	21
IV. '16년 추진계획	31
V. 투자계획	245
[붙임 1] 과제별 소요예산	249
[붙임 2]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261



요 약 본

I.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해사안전 여건

II.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III.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IV. 투자계획

I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해사안전 여건

1 '15년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15년 해양사고는 2,012건(어선 1,397건, 일반선 615건), 사망·실종자는 93명(어선 72명, 비어선 21명) 발생(잠정)

- (전체) 전년 대비 해양사고는 51.3%(1,330 → 2,012건) 증가, 사망·실종자는 467명(세월호 304명)에서 93명으로 감소
- (증가원인) '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해경의 사고접수 집계강화로 사고건수 증가
 - 기관고장, 운항저해 등 소형선박(어선포함)의 경미한 사고건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

* (경미사고) '14년 738건 → '15년 1,360건(84.3% 증가)

2 해사안전 여건 및 전망

- 해양수산업 재난·안전관리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 세월호('14.4), 돌고래호('15.9) 사고 등 대형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요구 증대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사고 외 유람선사고 등 모든 선박의 일관된 안전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총괄기능 수행 필요성 증가

- 해양안전정책의 다변화·다각화 필요성 증가

- 기존 대형선박과 선박종사자 중심의 해사안전정책을 낚시어선·레저선박 등 소형선박과 일반국민 대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

* 해양이용인구('10~'14) : '10(3,538만명) → '11(3,387만명) → '12(3,387만명) → '13(3,661만명) → '14(3,051만명)

3 '15년 주요성과 및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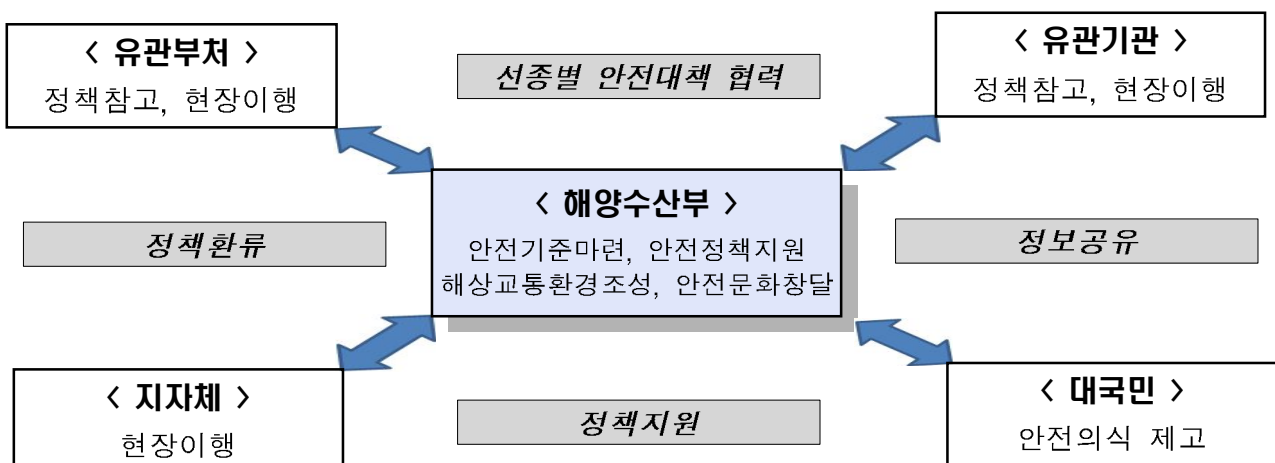
- 선박, 선사 등 민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지도·감독 체계 구축·시행을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도입·시행
 - * 34명 채용·배치(여객선 20명, 화물선 14명), 선박 등 2,037개소 점검(2,827건 시정)
- 전세계 해운·조선 관련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IMO 사무총장 당선('15.6)으로 국제규율을 선도하는 해사강국으로의 도약 기회 마련
- 다중이용선박 인명사고 발생으로 인한 해양안전 신뢰도 저하, 선종별·관리주체별 안전기준 및 관리역량 불균형 등 문제점 노출
 - * 최근 5년간 1,057건의 다중이용선박 사고가 발생(사망, 실종 등 537명)

II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유관부처, 지자체는 물론 해사안전분야 민간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공고한 국가 해사안전관리 체계 구축
- 선종별로 관리체계가 다원화 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혁신대책 수립 및 현장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이행·환류 체계 확보
- 규제기반의 官주도 안전의식 제고정책을 민주도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확대하여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 국가 해사안전관리 체계 】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해양안전체계 정립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 보장

추진
방향

- ① 인명안전 최우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정착
- ②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대형인명사고 ZERO화
- ③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전 략

세 부 추 진 사 항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선원(외국선원, 어선원 포함)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해기면허 취득요건 개선 및 해사전문인력 양성
- 선원(외국선원 포함) 고용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선박 안전성 강화

- 노후선 검사 강화 및 대체 추진
- 중소유조선 등 내항선박 안전점검 강화
-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
- 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제고
-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스마트
해상교통환경 구축

- 항행위해요소 발굴·개선 및 불법어망·장애물 제거
- 항만 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 해상교통 관련 인프라(e-NAV, VTS, AtoN, 해도) 확대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해사안전 국제규범 국가대응력 강화
- 해적, 항로표지 관련 양다자·국제기구 협력활동 강화
- 해양수산업계자 안전의식 제고, 대국민 해양안전 생활화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및 위기관리체계 정비
- 해양방제(HNS 포함)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 해적피해 예방체계 강화 및 선박 보안관리 강화

Ⅲ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1 5대 핵심과제

◆ '16년 해양안전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 '16년 6개 전략 65개 추진과제 중 정책 중요도를 기준으로 5개 과제 선정

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

-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공통 적용

* 안전제도혁신, 안전기준강화, 운항환경개선, 안전문화확산 4개분야 22개 과제 추진

② 대국민 기초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 공익광고 제작·방송, 해양안전 기초 안전체험관 개설 등 스스로 지키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③ 기본에 충실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정립

- 부처간 합동안전점검,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등 안전 제도의 정확한 적용과 지속적 이행을 위한 안전정책 환경 조성

④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환경 개선 및 선박안전성 확보

- 연안해역 해상교통환경 정밀분석, 유조선 통항로 평가와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선종별 안전대책* 이행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등

⑤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 IMO 대표부 설치, 전담부서 신설 등 국제기준 제·개정 논의 주도를 위한 국내·외 기반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 국제해사학회 창립, IMO 모의경진대회 개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 등

2 '16년 주요 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찾아가는 선원교육, 경미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어선사고 저감을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

□ 내항선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소형선 종사자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중점 1-1) 및 어선원 교육 강화(중점 1-7)

* 전국 31개 무역항 종사자, 지역·선종별 순회·방선 교육 실시, 해양사고 사례집, 사고예방 동영상 및 안전 포스터 제작 배포(240백만원)

□ 선원복지증진을 통한 선원직 매력회복 정책* 추진(중점 1-5),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사안전산업 육성 지원(중점 1-8)

* 저소득 선원 자녀 장학금 지급, 해상원격의료지원 확대(6척→20척), 항만-시내 간 이동 교통수단(10개 항만, 차량 11대) 제공, 선원 휴게시설 지원(9개소)

2. 선박 안전성 강화

◆ 해사안전 연구개발 투자확대(248억원), 노후 여객선(25년이상), 어선(20년이상) 안전점검강화, 노후선박 장비계량사업 지원(199억원)

□ 해사안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시행(중점 2-4), 노후 국제여객선, 어선 특별·정밀 안전점검 강화(중점 2-6)

□ 노후 어선 감축 및 기관 대체 등 장비계량 사업(중점 2-6) 및 노후 내항 여객선 선박건조자금 지원 지속추진(중점 2-8)

* '16년 19,904백만원, 987척에 대한 장비개량지원 및 보상 시행(지자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16년 100억원 확보, 화물선 대출 상환기간 연장(10년→15년)

□ 외국선급과 정부검사 대행협정 체결(중점 2-7), 어선안전장비(구명조끼 등) 지원 및 조업 중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추진(일반 2-5)

* 안전장비 지원(210백만원, 5천벌), 어선안전조업법 제정('16.2)

3.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영세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요건 강화,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철저이행, 항만국통제(PSC) 집중실시

□ 영세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등 선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중점 3-1), 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요건 강화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중점 3-2)

* 안전관리, 선원관리, 선박관리에 대한 대행업체 등록기준 보완

□ 여객선 이력관리·안전정보 공개 등 안전혁신대책 이행(중점 3-3)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16.7), 여객선 전용카드 도입, 이동식 계근기 확대 배치, 실시간 여객선 정보 확인을 위한 ICT기반 운항관리체계 구축('16.상)

□ 국적선 사전점검 의무화 등 관리 강화로 선박안전 우수국가 등급 유지, 안전기준 미달 외국적 선박 항만국통제(PSC) 집중 실시(중점 3-7)

4. 스마트 해상교통환경 구축

◆ 항만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해상교통 밀집해역 정밀관제 도입, 불법 설치 어구, 페어망·페로프 제거 추진

□ 항내 불법행위 중점단속으로 쾌적한 항만교통 여건 조성, 해상교통 밀집해역에 대한 정밀관제* 제도 도입·운영(중점 4-1)

* 해상교통 폭주해역의 취약선박 집중 모니터링 및 안전정보 제공 등

□ 입출항 항로, 정박지 내 저수심 구간* 준설·정비, 불법 설치어구, 페어망·페어구 등 항행 장애물 적기제거(중점 4-3)

* 부산항 신항 등 10개 항만에 대한 준설, 증심 공사 시행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시범망 구축 등 한국형 e-Nav 구축* 시행(중점 4-5) 대축척 해도제작 지원, 최신 안전정보 제공 체계 구축(중점 4-7)

* '16년 예산/주요내용 : 85억원 / LTE-M 시범망 구축, 해사클라우드 기술 개발 등

5. 국제협력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 IMO 대표부 설치, 전담부서 확충, IMO 모의경진대회 개최(9월),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지원(75만달러),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조성

□ IMO 대표부 설치, 전담부서 확충, IMO 모의 경진대회 개최, 미래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양성 체계 마련(중점 5-2)

* 대표부 설치('16.12), 전담부서 신설('16.11), 경진대회 개최('16.9), 국제해사학회 창립('16.10)

□ IMO 기술협력 자금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 지원(중점 5-3), 제5차 항로표지관리 기술위원회(ARM) 및 AIS 워크숍 개최(중점 5-5)

*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등 10여개 75만 달러 지원 및 개도국(파나마, 태국, 자메이카) 해사안전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지원('16.5, 약 8억원)

□ “My Life-Jacket 캠페인”, 해양안전 민간 전문강사양성(중점 5-7), 해양안전 공익광고 제작 등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조성(중점 5-8)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 해상 특수구조장비 확충(잠수정 등), 민간구조세력 관리·지원 강화,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적범 발의

□ 해상 특수구조장비* 확충,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강화(중점 6-1), 위기관리매뉴얼 개정(중점 6-2)

* 수중수색구조 잠수지원정 설계('16.6), 다목적 구조보트 도입(2척)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중점 6-2),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매뉴얼 개선(중점 6-3) 및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매뉴얼 개발(중점 6-4)

* 여객선 사고대응, 위성연계 선박정보 수집, 항만위험화물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해적위험해역 모니터링, 아덴만 함정호송 지원, 해적범 발의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중점 6-5)

IV 투자계획

□ '16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전체 투입예산은 약 6,112억원

- 해수부 2,687억원(43%), 지방자치단체 2,474억원(40.4%), 공공기관 703억원(11.5%), 국민안전처 246억원(4.0%) 등

*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상교통환경 구축사업(추진과제 4)에 전체예산의 55% 소요

- '추진과제 1' 선박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 815억원
- '추진과제 2' 선박안전성 강화 : 734억원
- '추진과제 3'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307억원
- '추진과제 4' 스마트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 3,371억원
- '추진과제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122억원
- '추진과제 6'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 765억원

【 과제별, 기관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진 과제 1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 3	추진 과제 4	추진 과제 5	추진 과제 6	합계
합계	81,154	73,406	30,743	337,163	12,228	76,543	611,237
해양 수산부	75,838	53,247	28,726	93,233	12,228	5,497	268,769
지방 자치단체	5,162	19,904	-	222,350	-	-	247,416
공공 기관	100	255	1,765	6,914	-	61,349	70,383
국민 안전처	54	-	252	14,666	-	9,697	24,669

I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개요

I.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개요

- (의의) '해사안전 시행계획'은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제1차('12~'1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연도별 실천계획임

* 「해사안전법」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계획의 범위) 우리나라 내수*, 영해, 항만, 해안, EEZ 및 대륙붕

* 한강 등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있는 강, 하천, 호수 포함

◆ (주요 대상) 우리나라 국민과 국적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외국적 선박 등

- (주체 및 체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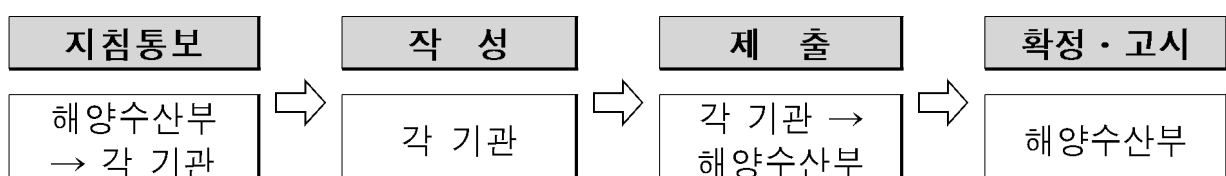
* 국민안전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기상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 (절차) 각 기관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제출
- 해양수산부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각 기관에 의견조회를 거친 후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함

<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Ⅱ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

1. '15년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2. 해사안전 여건



II.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

1. '15년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15년 해양사고는 2,012건(어선 1,397건, 일반선 615건), 사망·실종자는 93명(어선 72명, 일반선 21명) 발생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15년 통계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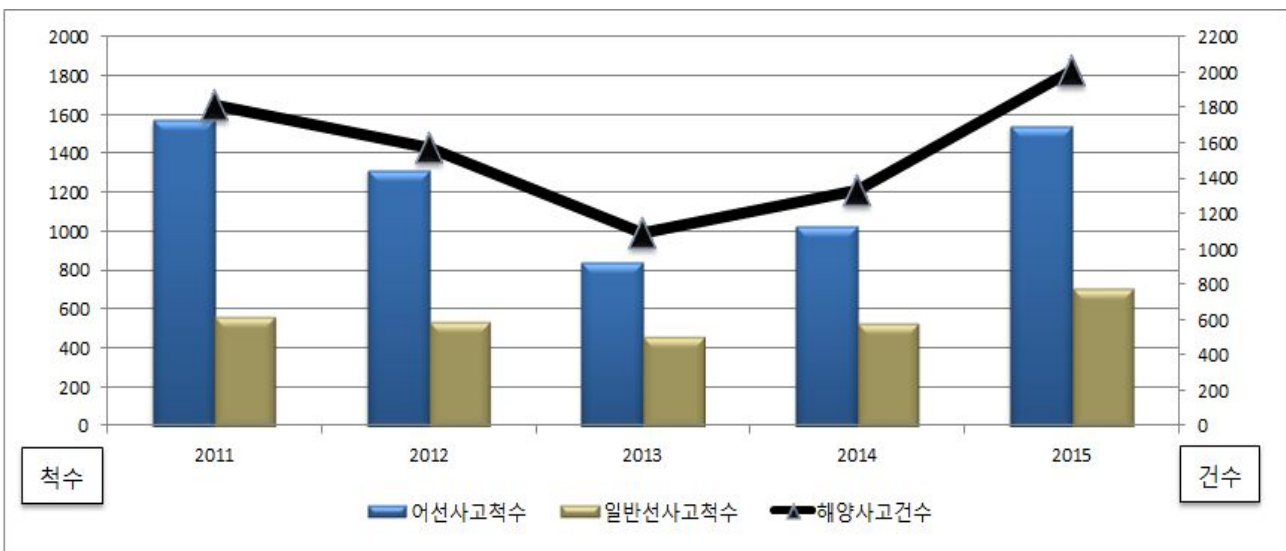
□ (전체) 2014년 대비 해양사고는 51.3%(1,330 → 2,012건) 증가, 사망·실종자는 467명에서 93명으로 감소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척, %)

구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인명피해(사망·실종)		
	계	어선	일반선	계	어선	일반선	계	어선	일반선
2015	2,012	1,397	615	2,257	1,545	712	93	72	21
2014	1,330	896	434	1,565	1,029	536	467	133	334
2013	1,093	727	366	1,306	839	467	101	69	32
2012	1,573	1,159	414	1,854	1,315	539	122	95	27
2011	1,809	1,378	431	2,139	1,573	566	158	117	41
전년대비	682	501	181	692	516	176	△374	△61	△313
(증감률)	(51.3)	(55.9)	(41.7)	(44.2)	(50.1)	(32.8)	(△80.1)	(△45.9)	(△93.7)

* 인명피해(사망·실종) 수는 해양안전심판원 접수 기준



□ (사고율) 전체 등록선박 대비 100척당 2.9척에서 사고 발생

< 최근 5년간 선박등록척수 대비 사고 현황 >

(단위 : 척, 천 톤, %)

구분	합계			일반선			어선		
	등록 척수	사고 척수	사고 율	등록 척수(천 톤)	사고 척수	사고 율	등록 척수	사고 척수	사고 율
2015	77,614	2,257	2.9	9,197	712	7.7	68,417*	1,545	2.3
2014	77,730	1,565	2.0	9,313	536	5.8	68,417	1,029	1.5
2013	80,647	1,306	1.6	9,360	467	5.0	71,287	839	1.2
2012	84,466	1,854	2.2	9,435	539	5.7	75,031	1,315	1.8
2011	85,013	2,139	2.5	9,384	566	6.0	75,629	1,573	2.1
전년대비	△116	692	1	△116	176	2	0	516	1
(증감률)	△0.1	44.2	44.4	△1.2	32.8	34.5	0.0	50.1	50.1

* '15년 어선등록척수는 '14년말 기준

□ (선종별) 2014년 대비, 어선은 50.1%, 일반선박은 32.8% 증가

< 최근 5년간 선종별 사고 현황 >

(단위 : 척, %)

구분	어선	일반선박						합계
		소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기타*	
2015	1,545	712	67	107	63	141	334	2,257
2014	1,029	536	51	111	51	102	221	1,565
2013	839	467	29	107	52	78	201	1,306
2012	1,315	539	32	109	45	104	249	1,854
2011	1,573	566	22	118	43	86	297	2,139
합계	6,301	2,820	201	552	254	511	1,302	9,121
5년 평균	1,260	564	40	110	51	102	260	1,824
(비율)	(69.1)	(30.9)	(2.2)	(6.1)	(2.8)	(5.6)	(14.3)	(100)
전년동기 대비	516	176	16	△4	12	39	113	692
(증감률)	(50.1)	(32.8)	(31.4)	(△3.6)	(23.5)	(38.2)	(51.1)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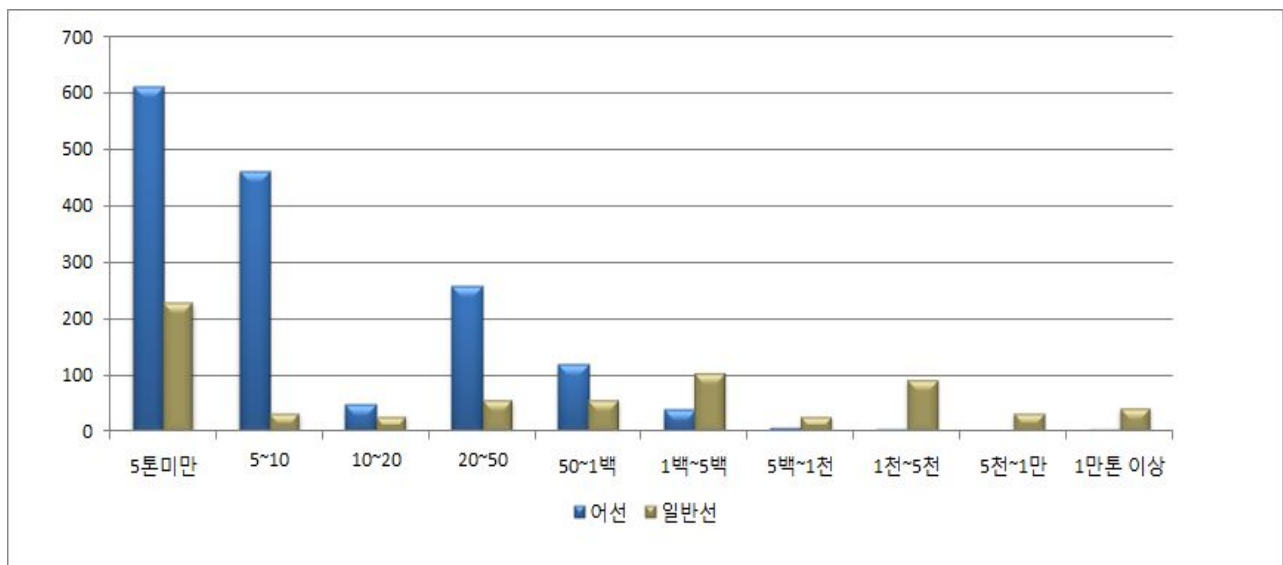
* 기타는 수상레저기구, 유도선(13인 미만), 항만작업선 등

□ (규모별) 10톤 미만 사고선박이 전체 사고선박 척수의 59.1%(어선 1,073척, 일반선 260척) 차지

< 2015년 선박규모별 사고현황 >

(단위 : 톤, 척, %)

구분	5톤 미만	5~10	10~20	20~50	50~1백	1백~5백	5백~1천	1천~5천	5천~1만	1만톤 이상	미상	합계
어선	612	461	46	257	117	37	6	4	0	2	3	1,545
일반선	227	33	27	55	55	104	26	91	32	41	21	712
합계	839	494	73	312	172	141	32	95	32	43	24	2,257
(비율)	(37.2)	(21.9)	(3.2)	(13.8)	(7.6)	(6.2)	(1.4)	(4.2)	(1.4)	(1.9)	(1.1)	(100)



* 톤수 미상 24척은 제외

□ (시간별) 야간에서 아침시간대(4시~12시)에 전체사고의 42.8% 발생

(단위 : 건)

구분	계	시 간 대					
		0~4	4~8	8~12	12~16	16~20	20~24
어선	521	64	115	116	92	91	43
비어선	252	28	37	63	59	37	28
전체	773	92	152	179	151	128	71

□ (유형별) 기관손상, 안전·운항저해, 충돌 사고 순으로 발생

- 일반선박에서 가장 취약한 사고유형은 기관손상이며, 어선은 기관 손상, 안전·운항저해 순

< 2015년 사고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충돌	침몰	전복	접촉	좌초	화재 폭발	인명 사상	해양 오염	기관 손상	안전 운항 저해	기타	합계
어선	151	24	24	12	65	62	107	10	463	235	244	1,397
(비율)	(10.8)	(1.7)	(1.7)	(0.9)	(4.7)	(4.4)	(7.7)	(0.7)	(33.1)	(16.8)	(17.5)	(100)
일반선	72	11	8	15	19	33	25	41	218	113	60	615
(비율)	(11.7)	(1.8)	(1.3)	(2.4)	(3.1)	(5.4)	(4.1)	(6.7)	(35.4)	(18.4)	(9.8)	(100)
합계	223	35	32	27	84	95	132	51	681	348	304	2,012
(비율)	(11.1)	(1.7)	(1.6)	(1.3)	(4.2)	(4.7)	(6.6)	(2.5)	(33.8)	(17.3)	(15.1)	(100)

□ (해역별) 사고의 72.4%(1,458건)가 항만 밖 영해수역에서 발생

(단위 : 건, %)

개항 및 진입수로	건수(비율)	영해이상 수역	건수(비율)
부산항 및 진입수로	69 (3.4)	남해영해	729 (36.2)
부산거제수역(옥포, 장승포)	3 (0.1)	서해영해	533 (26.5)
인천항 및 진입수로	21 (1.0)	동해영해	196 (9.7)
여수항, 광양항 및 진입수로	12 (0.6)	남해공해	74 (3.7)
마산항, 진해항, 진해만(가덕수로)	25 (1.2)	서해공해	38 (1.9)
동해항, 묵호항, 속초항, 삼척항	7 (0.3)	동해공해	96 (4.8)
목포항 및 진입수로	12 (0.6)	일본수역	8 (0.4)
장항항, 군산항 및 진입수로	11 (0.5)	동남아	29 (1.4)
평택항, 당진항	5 (0.2)	원양	6 (0.3)
삼천포, 통영항, 견내량수로	58 (2.9)		
울산항(미포항포함), 포항항	55 (2.7)		
대산항 및 진입수로	6 (0.3)		
제주항, 서귀포항	5 (0.2)		
기 타	14 (0.7)		
소 계	303 (15.1)	소계	1,709 (84.9)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 (원인별) 최근 5년간 해양안전심판원 재결결과 사고원인의 81.5%(1,261건 중 1,028건)가 운항과실이며, 경계소홀(666건), 항행법규 위반(99건)임

* 연도별 운항과실 비율 : '11년 83.8% → '12년 83.1% → '13년 79.7% → '14년 84.0% → '15년 76.9%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현황 >

단위 : 개

구분		일반선					어선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운 항 과 실	출항준비 불량	0	0	0	1	3	0	0	0	0	1
	수로조사 불충분	0	0	0	0	0	0	0	0	0	0
	침로의 선정유지 불량	0	1	0	1	1	1	0	0	1	0
	선위확인 소홀	5	4	1	1	1	4	1	6	3	3
	조선 부적절	12	11	10	4	4	2	3	3	2	4
	경계소홀	66	42	38	55	56	64	94	72	112	67
	항천대비·대응불량	4	4	1	0	2	6	2	3	3	2
	묘박·계류의 부적절	0	0	0	1	0	0	0	0	0	0
	항행법규 위반	14	8	6	5	6	20	3	14	9	14
	복무감독 소홀	0	1	1	0	0	0	0	0	1	2
	당직근무 태만	2	1	1	2	5	2	0	0	1	2
	기 타	10	4	4	0	2	3	5	0	0	2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6	4	5	8	15	7	8	8	11	18
	소계	119	80	67	78	95	109	116	106	143	115
취 금 불 량 및 결 합	기관설비 취급불량	3	6	3	8	20	9	15	7	6	11
	화기 취급불량, 전선노후, 합선	1	1	0	2	3	5	2	1	2	1
	선체,기관설비결함	1	4	2	6	2	0	3	8	8	8
	소계	5	11	5	16	25	14	20	16	16	20
기 타	여객, 화물의 적재불량	1	4	1	2	1	3	2	1	0	0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0	0	0	1	6	0	0	0	3	5
	승무원 배승 부적절	0	0	0	0	0	0	0	0	0	0
	항해 원조시설 등의 부적절	0	0	2	1	0	0	0	0	0	0
	기상 등 불가항력	1	2	6	3	0	0	1	12	0	1
	기 타	7	0	0	0	0	13	0	1	0	5
	계	9	6	9	7	7	16	3	14	3	11
합 계		133	97	81	101	127	139	139	136	162	146

* 사건에 복수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원인을 중복 계상

2) '15년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및 증감원인

- '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해경의 사고 접수 집계강화로 사고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해양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
- 특히 소형선박 및 경미한 사고* 건수 증가가 대부분이지만 충돌 등 중대사고 건수와 항만내 및 진입수로 부근 사고도 일부 증가

* (경미사고) '14년 738건 → '15년 1,360건(84.3% 증가)

2. 해사안전여건

□ 해양수산분야 재난·안전관리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 세월호('14.4), 돌고래호('15.9) 사고 등 대형인명사고 예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대책 요구 증대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사고 외 유람선사고 등 모든 선박의 일관된 안전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총괄기능 수행 필요성 증가

□ 해운경기 회복 불투명으로 선사의 안전품질 경영 환경 악화

- 선복량 과잉, 운임하락 등 해운업 불황 장기화에 따라 선사의 안전품질 투자 여건도 악화

* (BDI 지수, Lloyds List) '15.11월 550포인트로 30여년 만에 사상 최저치 갱신 중

* (컨신조발주, Alpha Liner) '15.9월기준 1만TEU 초대형선박이 신조발주량(척)의 42.1%를 차지, 향후 초대형선 위주의 선대 개편 및 전배로 역내항로까지 공급과잉 가중

□ ICT, 융복합 기술 등을 접목한 첨단 해사안전장비 개발수요 증가

- (e-Navigation) IMO는 e-Nav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전략이행계획을 수립하고, e-Nav 이행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 제·개정 논의

* 기술개발('15~'16) → 국제표준화('17~'18) → e-Navigation 국제시행('19)

- (융복합신소재)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 의장부품 경량화, 금속대체 복합소재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기술 개발 시급

- (첨단해사정보) 해양레저 증가, 운항효율성 중시, 해역이용 다양화 등 해상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ICT 융합 서비스*에 기반한 맞춤형 해사정보 수요 증대

* 스마트폰용 소형선박 내비게이션(海Road), 해양기상정보제공시스템(날Sea Net) 등

□ IMO 사무총장 배출국 및 IMO A그룹 8연임국가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수행 필요성 증대

- e-Navigation, 친환경선박 등 미래전략 의제 논의과정을 주도하고 해사당국간 협력 확대, 국제기여 활동 강화를 위한 역량제고 시급

Ⅲ

'15년 성과 및 반성

III. '15년 성과 및 반성

가. 과제별 주요성과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선박종사자 기초안전교육 강화

- 선사 경영진 및 종사자 인적오류에 의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직무교육, 사고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15년도 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 364명(350명 목표), 종사자 대상 방선교육 46,105명, 집합교육 2,647명 총 48,752명 실시(47,000명 목표)

□ 현장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보급

- 소형선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강화 및 기관사고 대응, 선종별 다발사고 유형 동영상 교재* 제작 배포

* 연안해역 취약 해양사고 예방교육·해양사고 예방홍보 동영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알기 쉬운 항법(애니메이션)' 5종

□ 고급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계 구축

-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고려대 로스쿨, 兩 해양대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3개 대학)

* 고려대(해기사 출신 조사관·심판관), 해양대(승선경험이 없는 법조인, 심판관)

- 예인선 신규 항해사 운항교육, 신규 시스템·운항기술에 대한 해기사 교육 및 고급 해기사를 위한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운영

* 예인선직무교육(200명), 북극항로 운항인력 양성(4회, 20명), 빙해역 항해사 전문교육(3회 15명)

□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종사자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15.10) 및 대국민 홍보(홈페이지, 사례집 제작)

2 선박 안전성 강화

□ 국적외항선 주요기항지역의 안전관리 우수 국가지위 유지

- 철저한 선박 안전관리체계 정립으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기항지에서의 출항정지 저감 및 우수등급 유지 지속

* 아시아·태평양 지역('02부터), 유럽('11부터), 미국('13부터)

□ 선박 감항성 확보를 위한 변경·개조 관리 제도강화

- 경하상태에서 복원성이 저하되는 선박 변경·개조 금지, 기관, 조타·구명·소방설비, 여객선 거주설비의 변경·개조 시 전문가 자문 및 지방해양수산청장 허가 의무화('15.7)

□ 선박용물건 지정정비사업장 지정요건 강화 및 관리·감독 내실화

- 자체검사자 및 선박탑재확인자의 경력요건 신설, 팽창식 구명뗏목 제조사의 정비인증 또는 교육훈련 등 이수 의무화

□ 인명 안전, 이용자 편의 우선의 선박 건조체계 정립

- '15년도 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 건조(2척) 시,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고려한 선박의 설계 및 건조

□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 4개 국내기술의 IMO 기본승인 획득(5.15), 2개 신기술의 IMO 최종 승인 신청(9.24) 및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 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2.10, 6.25), 고시 제정·시행(4.9), 업무 대행협정 체결(9.3) 등

□ 선박검사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관리·감독 강화

-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부검사대행권 다변화(개방) 추진 완료('15.11), 선박검사 대행기관 정기 지도·감독 강화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도입·시행

- 선박, 선사 등 민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예방적 지도·감독 체계 구축·시행으로 해상교통분야 안전혁신 추진

* 여객선감독관(20명), 화물선감독관(14명) 총 34명을 채용·배치하여 '15.12월까지 선박 등 2,037개소를 점검, 안전결함 총 2,827건(항행정지 73척) 시정 완료

□ 국내연안 선박통항로 적정성 평가를 통한 해상교통환경 개선

- 국내연안 및 주요 위험물취급항만의 해상교통환경 전반을 대진단 하기 위한 전문 평가예산 확보 및 연구 실시

* 인천·여수광양·울산항 “유조선 항행안전 가이드라인” 작성('15.12)

□ 해양기상 예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관측 인프라 확보

- 기상해일·이안류·너울 등 해양 위험현상에 대한 감시·분석·예측 능력 향상으로 관련 예보·서비스 품질 개선

* '15년 해양기상부이(6개소), 선박기상관측시스템(2개소), 파고부이(5개소) 등 총 13개

□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운영 등 유·도선 안전관리체계 정립

- 해양경비안전서 유도선 점검 전문인력 구성, 선박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기동점검 매뉴얼 제작 및 불시 합동단속 추진

* 지방본부별 3~5회 실시 단속 8건(벌금5, 과태료3) 안전계도사항 330건 시정

□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조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레저선박 지도방문, 운항금지구역 특별점검 등 시기별 맞춤형 관리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보장 및 인명피해 최소화

* 금지구역 공고판 재정비('15. 5월, 20개 신규 설치 및 스티커 259매 교체), 내수면 지도방문('15. 6월, 56개소), 사업장 특별점검('15.6-8월 / 1,017회) 등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구축

□ 선진국 수준의 항로표지서비스망 구축으로 교통환경 개선

- 항행위험요소(암초 등) 표시용 항로표지(37기), 특수신호표지 설치, 소형 선박 및 레저활동 이용자를 위해 스마트폰용 앱(海 Road)* 보급 확대

* 海 Road :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시('14.11), 다운로드 누계 34,000건

□ 해저지형 정밀조사 등 안전항해환경 조성 지속

- (연안해역) 최신측량 기술(멀티빔, 항공라이다 등)을 활용한 연안해역('15년 전남 진도 및 안면도 부근 등, 125억) 정밀조사 추진
- (항만해역) 주요 무역항·연안항 및 국가어항 등 연안 특정해역에 대한 주기적 변동조사('15년 동해·묵호항 등 13개항, 19억)

□ 고품질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립

- 연안 VTS 설치, 관제 사각지역 레이더 확충 및 노후 관제시스템 개량* 추진,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15.11.2) 신설

* 제주항 관제시스템 개량 완료('14.8~'15.8/32억), 경인연안 VTS 공사('15.9~'17.12/152억), 마산항 개량('15.6~'16.5/32억) 및 울산항 개량('15.8~16.8/27억) 등 착수

□ e-Navigation 사업 본격 추진

- 사업추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15.4) 및 한국형 e-Navigation 전략이행 계획 수립('15.7)

* 기간/규모/주요내용 : '16~'20 / 1,308억원 /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한국형 e-Nav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국무회의, 7.28)

□ 안전운항저해사고 예방을 위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지속 실시

- 전국 무역항, 연안항 등 해양 침적쓰레기 분포·실태조사 및 수거사업 진행으로 침적쓰레기 1,875톤 수거(10월말 기준)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한국인 최초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배출

- 전세계 해운·조선 관련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IMO 사무총장 당선 (15.6)으로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해사강국으로의 도약 기회 마련
- * 임기택(전 BPA 사장) 신임 총장 4년 임기('16~'19) 후 1회 연임시 '23년까지 재임

□ IMO A그룹 이사국 8연임 달성

- 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8연임 달성으로 주요 해운선진국들과 함께 IMO 기구운영을 주도하는 사실상의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 주요 해사안전국가와의 양다자 협력 관계 강화

-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주변국가와의 해사안전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해사안전회담 개최 지속 및 협력분야 확대
- 해양사고 조사관련 국제회의 및 교육 참가 등으로 국제 해양사고 조사동향 파악, 외국과의 협력관계 기반 강화
- * 제24차 MAIIF 참석(3명, 9.7~9.11, 터키), 제18차 MAIFA 참석(2명, 8.4~8.6, 싱가포르),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6개국 52명, 6.12) 등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

- 대국민 대상 해양안전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관(경기도 안산), 해양안전관(전남 진도) 건립 추진
- * 입지선정('15.9.7, 세월호 추모 분과위원회), '16년 사업예산 확보(92억원)
- 해양안전교실 개최, 국립등대박물관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불거리', '느낄거리' 제공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변화 계기마련
- * 해양안전교실(439회, 60,235천명) 안전장비 및 공모전 전시(7개소 119만명)
- 해양안전 엑스포*(부산시 공동개최),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해양안전공모전 개최 등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행사 추진
- * 기간 / 장소 / 참관 : 5.27~5.30 / 부산 벡스코 / 12천여명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 체계적인 해양수산재난 대응체계 확립

- 해양수산 재난안전 총괄부서 지정('15.1) 및 상황관리 인력 증원('15.7)등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 대응체계 마련

* 총괄부서 지정(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 해사안전 관리과)

-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에 관한 교육 동영상 및 재난대응수칙 작성·배포('15.4), 표준·실무매뉴얼 개정('16.1, '15.4)

□ 해양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전문 조직·장비 확충

- 중앙해양특수구조단('14.11, 43명) 및 동·서해 지역대 신설('12.12, 58명), 특수 재난대응장비 연차적 도입 추진 및 인명구조 장비 보완

* 대형헬기(3대) 및 잠수지원정(1척) 도입 중, 등선구조장비(314세트) 보급 완료 등

□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 현장상황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 주기적 민·관·군 합동훈련 강화 일선서장, 함·정장 및 안전센터장 등 상황대응 역량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를 위한 교육 실시

* '14년 총 92회 대비, '15년 200회 실시

□ 현장 중심의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역량강화 기반 구축

- 24시간 신속대응을 위한 긴급방제팀 추가신설 등 현장인력 보강, 방제정·방제장비 보강 및 방제물품 신속 지원체계 구축

* 동·서해특구대 긴급방제팀 신설(15명) 및 소형방제작업정 운용인력 증원(6명)

□ 해상유해화학물질(HNS) 사고대응 역량강화 인프라 확보

- 해상 유해화학물질(HNS) 사고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HNS 전용 방제정 1척 추가 건조예산 확보('18년 여수 배치)

* '15년 유류방제정 3척, HNS 방제정 1척 신조 추진 중('16년~'17년 배치)

나. 반 성

□ 다각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 지속

- 다중이용선박 사고 지속발생으로 해양안전 신뢰도 저하
 - 대형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의 해양안전 불안감 증대, 선종별·관리주체별 안전기준 및 관리역량의 불균형 등 문제점 노출
- 소형선박 기관고장 및 운항저해사고 증가(1,360건, 84.3% 증가)
 - 소형선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책자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 이행에도 경미사고 발생 여전

* "소형선박용 출항전 안전운항 점검표"('15.7). "기관사고 예방지침"('15.9) 제작·배포

□ 안전·환경 규제를 해사산업 육성으로 연결하는 체계 및 역량 미흡

- IMO 기술기준·신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나, 해양수산부의 IMO 전담대응조직 부재로 조직적 대응역량 한계
 - IMO 기술기준 개발·선점을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양성·협력 체계 구축, 국제사회 지원 활동 강화 등이 절실하나 체계적 대응 미흡
- IMO의 e-Navigation 시행('19년 이후), 선박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자체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역량 확보 부족
 - 선박배기가스관련 IMO의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기술개발 및 투자부족으로 배기가스후처리장치의 상용화 제품개발 지연

□ 해양안전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시행기반 미흡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해양이용자의 정보활용수요와 기대감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 관련 연구개발 투자 미흡

* 해양수산 R&D 예산 총 5,911억원 중 3% 차지('15년 해양안전분야 R&D 예산 178 억원)

IV

'16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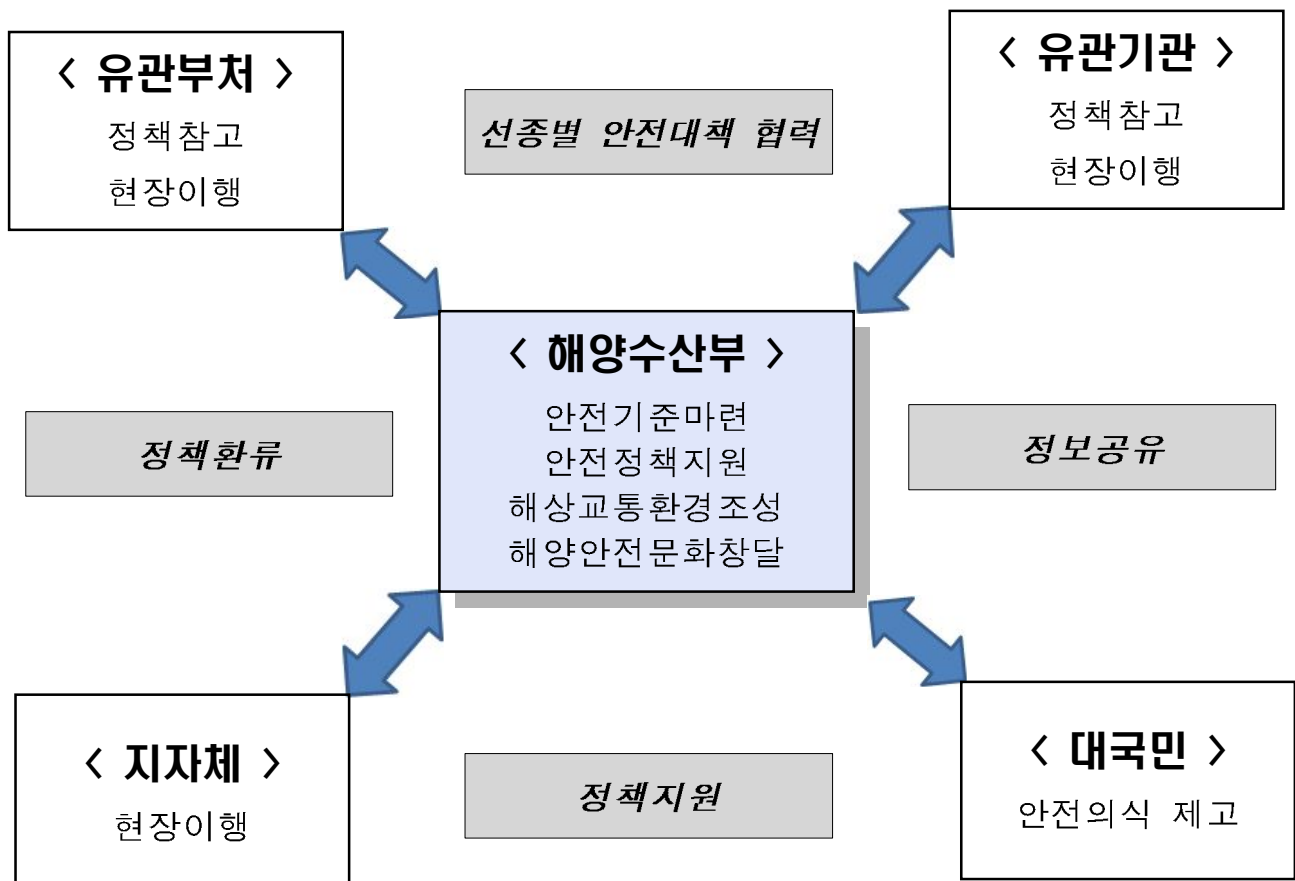
1. 기본방향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3. '16년 핵심추진과제
 4. '16년 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2. 선박 안전성 강화
 3.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5. 국제협력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

IV. '16년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내수면을 비롯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는 물론 해사안전분야 민간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공고한 국가 해사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중심의 각 선종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정책의 지원 및 현장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이행·환류 체계 확보
- 규제기반의 官주도 안전의식 제고정책을 민주도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 국가 해사안전관리 체계 】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해양안전체계 정립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 보장

추진 방향

- ① 인명안전 최우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정착
- ②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대형인명사고 ZERO화
- ③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창달

전 략

세 부 추 진 사 항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선원(외국선원, 어선원 포함)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해기면허 취득요건 개선 및 해사전문인력 양성
- 선원(외국선원 포함) 고용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선박 안전성 강화

- 노후선 검사 강화 및 대체 추진
- 중소유조선 등 내항선박 안전점검 강화
-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다중이용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
- 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제고
-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스마트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 항행위해요소 발굴·개선 및 불법어망/장애물 제거
- 항만 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 해상교통 관련 인프라(e-NAV, VTS, AtoN, 해도) 확대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해사안전 국제규범 국가대응력 강화
- 해적, 항로표지 관련 양다자/국제기구 협력활동 강화
- 해양수산업계자 안전의식 제고, 대국민 해양안전 생활화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및 위기관리체계 정비
- 해양방제(HNS 포함)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 해적피해 예방체계 강화 및 선박 보안관리 강화

3. '16년 핵심추진과제

핵심 1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13인 이상의 승객을 운송하는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법*에 따라 서로 다른 안전기준을 적용

* 국민안전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 안전법) 해양수산부(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구 분	합 계	여객선	유도선 (해수면)	통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20톤↑	20톤↓
13인 이상	2,654	168	402 (318)	171	1,266	423	224

□ 추진계획

- 유관부처, 자치단체 협업으로 안전관리 혁신대책 시행('16.1)
 - * 대책(안) 국무회의 상정(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합동) 추진
- 제도개선, 기술개발, 현장적용 등 이행현황 점검('16.2~10)
- 대책이행 성과평가 및 환류를 위한 정책점검회의 개최('16.11)

안전관리 혁신대책 주요내용(안)

- ▶ (안전제도혁신) 승선정원 산정방식 개선, 입·출항 신고제도 정착, 운항가능해역 및 영업시간 개선, 승무기준 강화 등
- ▶ (안전기준강화) 구명설비 탑재기준 강화, 선박자동식별장치 장착·작동 의무화, 구명조끼 상시 착용 확대 등
- ▶ (운항환경개선) 양식장, 폐기물 등 항행 위해요소 제거, 선박안전 점검 전문성 제고, 승객보험·보상 기준 현실화 등
- ▶ (안전문화확산) 구명조끼 착용안내 및 시연조치, 승무원 제복 착용, 기초 안전문화 조성,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핵심 2

대국민 기초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과 선박에 대한 이용수요 증가, 선박과 이용자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해양안전 문화 진흥정책의 다변화 필요
 - * 해양이용인구('10~'14) : '10(3,538만명) → '11(3,387만명) → '12(3,387만명) → '13(3,661만명) → '14(3,051만명)
- 세월호 이후 선박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안전의무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한 공익광고(TV, 웹툰 등) 제작 및 홍보(~'16.8)
 - * 지상파 방송, 여객선 터미널, 지하철·야구장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My Life-Jacket 캠페인” 추진, 교재개발, 전문강사양성 등 민간 중심 안전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연중)
 - * 민간 동호회(낚시어선, 레저보트), 어촌계 등을 통한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 유도
- 교사 대상 안전교육 강사 양성,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16.2~12, 7만명), ‘해양안전공모전’* 확대시행('16.8)
 - * (분야) 정책제안, 포스터, UCC, 웹툰, 체험수기, 안전경영 우수사례
-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수칙의 현장이행력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실천본부* 법인화 추진('16.4)
 -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3년 민간 협의체로 창립, 7개 본부기관, 11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해양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활동 수행
- 대국민 해양안전체험 접근성 강화 및 상시 안전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해양안전장비 기초체험관 개설('16.5)
 - * 해양안전실천본부(세종시)에 구명조끼, 조난통신장비 등 해양안전장비 전시공간 마련('16.5) '16년 이후 전국확대(11개 지역본부)

핵심 3**기본에 충실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정립****□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제도의 기본정립 및 현행 제도의 정확한 적용과 지속적 이행을 위한 안전정책체계 정립

- 해사안전시행계획,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등 다양한 안전대책이 매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행력은 미흡*한 실정

* 선종별 안전관리 기관분산(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지자체)에 따른 관리 체계 및 예산·인력·전문성 미흡

□ 추진계획

- 각종 해사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합동 안전점검 이행, 부처협업 T/F 운영 및 실적 모니터링 추진(연중)

* 해사안전시행계획,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내·외항선 안전관리 대책 등

- 지자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제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16.6)

* 안전문화 증진사업, 인력확보 등 안전예산 증액 협력 및 보조금 교부방안 검토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적용대상 확대(원양어선) 및 수시감독 강화로 필수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및 선박안전관리 체질개선 유도(연중)

* 감독관 추가 채용(34명→86명), 안전설비 시연확대(20회→100회), 운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연근해 어선(47,493척)에 대해 불법 증·개축 등 집중 점검·단속*

* '15.2월부터 10월말까지 28,197척 점검(59.4%), '16.6월까지 전수점검 완료 계획

- 항만 내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하역안전설비 확대* 및 안전 관리자 재교육(매 3년) 의무화(선박입출항법 개정, '16.상)

* 기존 위험물 취급 부두(돌핀)시설에 대하여 '선박 접안 속도계' 및 외부 충격에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16.상)

핵심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환경 개선 및 선박안전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선박의 대형화, 다양화 및 해역이용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교통환경 개선 및 선종별 안전대책 강화 필요
- 연안해역 해상교통환경 정밀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선박운항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연안 지정항로·혼잡해역, 위험물취급항만 등 주요 선박통행로의 해상교통환경 평가 및 위해요인 개선 추진

- '15 평가결과(연안해역, 울산·여수광양·인천)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해요인 개선 추진('16. 3~)

* 연안항로(완도입출항 항로 등) 정비, 울산항 정박지 확장, 여수광양항 지정 항로 증심, 인천항 도선점 조정 등 개선과제별 이행주체·시기 확정

- 대산·평택당진·부산항 등에 대해서도 교통환경 강화측면에서의 유조선 통항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관리과제 도출('16.12.)

* 유조선 통항이 빈번한 대산·평택당진항은 유조선 안전통항가이드를 작성·배포

- 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 벌칙 강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15.10) 후속조치 추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여객선 이력관리·안전정보 공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16년 추진과제* 이행 철저

- 여객선 안전관련 주요 운항정보·여객발권정보, 선체도면 DB 연계 및 안전점검 보고서 전산 확인체계 구축

핵심 5**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인 IMO 사무총장 당선, A그룹 8연임 등 국제사회에서 아국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계의 실리확보를 위한 대응기반 미흡
- 국제기준 제·개정 논의 주도를 위한 조직적인 국내·외 대응 및 IMO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확보 필요

□ 추진계획

- 체계적인 IMO 업무지원 및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 현지대응 및 국제기준 제정 주도를 위한 IMO 대표부 설치('16.12)
 - * 전담공사 및 안전·환경·법률 담당으로 구성된 대표부 신설
 - IMO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해수부 내 전담부서(국제해사과) 신설('16.11)
 - * IMO 주도적 대응, IMO 기술기준의 산업화 지원 등 업무수행
- IMO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전략적 IMO 의제개발 논의를 위한 IMO 국제해사협의회 활성화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해사학회 창립('16.10)
 - * (주요기능) IMO 정책연구과제 제안, 국제회의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지정에 따른 활동지원, 해사분야 국제지식 공유를 위한 학회 지원 등
 - 전국 대학생 대상 IMO 모의경진대회 개최로 젊은 인재들의 해사분야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예선 및 본선, '16.9)
- IMO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지원
 -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등 10여개 사업(75만 달러) 지원 및 개도국(파나마, 태국, 자메이카) 안전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지원('16.5, 약 8억원)

4. '16년 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내항선 종사자 대상 현행 **집체교육** 위주의 교육체계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개선하겠습니다.(중점 1-1)

* 전국 31개 무역항 종사자, 지역·선종별 순회·방선 교육 실시

□ 소형선 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미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점 1-1)

* 해양사고 사례집, 사고예방 동영상 및 안전 포스터 제작 배포(240백만원)

□ 선원직 기피 등에 따른 선원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선원복지 증진**을 통한 **선원직 매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중점 1-5)

* 저소득 선원 자녀 장학금 지급, 해상원격의료지원 확대(6척→20척), 항만-시내 간 이동 교통수단(10개 항만, 차량 11대) 제공, 선원 휴게시설 지원(9개소)

□ 전체 해양사고의 약 7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저감**을 위한 어선원 및 어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중점 1-7)

* 통신기사용법 교육강화, 외국인선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교육 시범 실시, 어선사고 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 고급 **해사안전관리** 및 **해기사 인력**의 양성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중점 1-8)

* 선박관리전문 교육(연간 200여명), 외국선주 대상 선박안전관리 업체 투자 설명회('16.6)확대, 북극항로 운항인력양성 사업 추진

중점 1-1 인적오류 기인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내실화

주관기관	해수부, 지방청, 중앙해심	협업기관	-
------	----------------	------	---

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사 경영진 및 종사자 인적오류에 의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교육, 사고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추진실적) '15년도 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 364명(350명 목표), 방선교육 46,105명, 집합교육 2,647명 총 48,752명 실시(47,000명 목표)

- 내항선 종사자의 바쁜 일정과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집체교육 위주의 교육체계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개선

□ 추진계획

- 선박소유자 등 선사 경영층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통한 업계의 안전문화 정착 도모를 위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실시('16. 2~12.)
 - 안전경영에 대한 선사 경영진의 인식전환과 가치정립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지속·확대 추진
- 인적오류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시행('16. 1~12.)
 - 전국 31개 무역항 종사자에 대한 선박 방문교육 및 지역·선종별 취약대상에 대한 순회·특별교육 등의 집합교육 실시
 - 교육 실효성 증대를 위해 좌식교육에서 현장체험·구명장비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확대 실시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내항선 안전관리 개선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1월중) ○ 해사안전감독 지도·감독 계획에 반영하여 방선교육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 취약선 방선교육(1,000명/200척) 실시 - 해운·항만 종사자 대상 집체교육(1회) 실시 - 해운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 실시(2회) <p>【제주해양관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화물 및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안전교육(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안전점검 및 방선교육(250명/65척) - 무역항 선박종사자 집합교육(60명/2회) - 내항화물 및 내항여객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20명/2회)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선 등 내항 취약선 방선교육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운항구간 등 대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인천지역 해양계 고등학생 대상 해양안전 특별 강의 시행(2회) ○ 선박종사자의 운항능력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항 선박 종사자 현장교육 실시(연간 3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선, 유조선 등 사고빈도가 높은 취약선박 등 ○ 어선종사자 합동교육의 지속적 지원으로 어선원 자질향상 도모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대상 선종별·지역별 맞춤형 순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예부선(반기별) ○ 취약선박 종사자에 대한 방선교육(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사례, 항법, 항해기기 사용법 및 선내 안전수칙 등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선 등 내항 취약선 방선교육(200명/50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예보, 사고사례, 안전운항 지침 제공 ○ 국제여객선 등 외항선원 방선교육(100명/10척) ○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예방 교육(2회)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선박 안전점검 시 방선교육 병행(3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예보, 소형선박 기관사고 방지 대책 등 자료 제공 ○ 선박 종사자 집합교육(40명/반기별)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점검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선원교육 실시(연중) ○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선박종사자 대상 특별교육(2회)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선 등 취약선박 대상 방선교육(400명) ○ 교육 전문기관 강사초빙 교육 실시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 및 안전업무 종사자 방선(500명) 및 집합(80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예방규칙, 기관정비요령 등 교재 제작 배포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주, 안전관리자 등 육상종사자 대상 집합교육(년1회), 해상 종사자 집합교육(반기별) ○ 취약선박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 현장교육(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항해 당직수칙,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등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항 국적선박 안전점검 시 선원 교육 병행 ○ 구멍뚫목 시연, 소화기 체험 등 항만종사자 집합 교육 (100명)

나. 종사자 안전의식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사고조사 전문성 제고

□ 추진현황

-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 '14년 주요 해양사고 사례집(4,000부/30백만원) 및 준해양사고 교훈 사례집 발간(4,000부/30백만원), 해양안전 길잡이 제작·배포(4,000부)
 - 연안해역 취약 해양사고 예방교훈 동영상 제작(1,000장/160백만원)
- 실제 재결사례를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교육(362개 업·단체)
- 해양사고 조사의 전문성 제고
 - 조사업무 개선 협의회(4회) 및 조사관·심판관 전문교육 실시(1회), 국제 항해 승선훈련(2회)
- 해양사고 조사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4회)

□ 추진계획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교재 개발·전파(연중)
 - 주요 해양사고·준해양사고 사례 및 교훈 책자 발간·배포(40백만원, 3~5월)
 - 해양사고 예방교훈 동영상 제작·배포(160백만원, 6~12월)
 - 최신 재결사건 요약·분석 홍보물 제작·배포(40백만원, 3월·9월)
- 해양사고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실시
 - 조사업무 개선 협의회(매분기) 및 조사관·심판관 전문교육 실시(2회)
 - 연안 승선훈련(1회, 4월) 및 국제 승선훈련(1회, 9월) 실시
- 양해각서(MOU) 체결 기관(9개) 간 정책협의회 개최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그룹별 정책협의회 실시(4회, 매분기)

다. 해양사고 관련자 징계 집행유예 직무교육 시행

□ 추진현황

- 연중 징계 집행 유예교육 위탁실시(113명, 해양수산연수원)
-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요령 개정('15.6)

○ 징계 집행유예 교육 대상자 선정 사무처리 요령 개정('15.3)

- * 해심법 개정 통해 징계집행 유예제도 도입('11.12.16. 시행), 세부 업무기준과 절차 마련('12.4.5., 훈령 개정), 선정 개선 지침 시행('14.7)

【 징계집행 유예제도 】

- ◆ (정의) 징계집행 유예제도는 해기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기사에게 업무정지(1~3개월) 징계집행 대신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징계집행 유예
 - 직무교육은 심판원 또는 위탁교육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
 - * 근거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11.12.16. 시행) 제6조의2
- ◆ (운영방법) 재결시 업무정지 1~3개월별로 각 각 14시간/21시간/28시간 직무교육을 3개월~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이수하도록 명함
 - * 교육 : 선박운항사고 예방교육과 선박재해사고 예방교육 2종

□ 추진계획

- 교육 내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사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강사 발굴 및 추천(연중)
- 공통교육과 전문 교육(운항사고 예방, 재해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 과목 개선 추진(연중)
- * 사고 유형 별 예방 교육 내용을 식별, 이에 따른 교육 내용 반영

라. 예인선 항해사에 대한 교육 강화

□ 추진현황

- 예인선 승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위해 관련법령 개정으로 예인선 직무교육 신설(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14.1.1)
- 예인선직무교육 실시위한 시뮬레이터 설치 및 동 교육 시행
 - 교육장비 설치 및 소요예산 : '13년 11월 / 1,119,000천원
 - 교육실적 : 18회 200명

□ 추진계획

- 예인선에 승무할 신규 항해사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15년에 이어 계속 실시
- '16년 교육 계획 인원 : 20회 240명

중점 1-4 우수선원 고용여건 개선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추진배경

- 내항선박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젊은 선원이 승선을 기피하고 있어 고령 선원이 다수를 차지

* 내항선원의 평균임금은 3,410천원으로 전체 선원 평균임금(4,335천원)보다 낮으며 50세 이상의 내항선원 비중은 77.7%로 전체선원 평균 59.5%를 상회('14년 기준)

- 내항선원 공급 안정책 마련을 통한 승무 안전성 제고 필요

가. 내항선박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확대

☐ 추진현황

- '07년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운영
 - '09년부터 시행하여 총 배정인원 800명 → 1,000명 확대('12년)
- 총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중 내항선박의 근무인원 확대
 - 내항해운업체 승선근무예비역 확정('13.12월)
 - 내항선박 배정인원 증가('13년 93명 → '14년 92명 → '15년 104명)

☐ 추진계획

- 내항선박 승선근무예비역 확대('15년 104명→'16년 105명)

중점 1-5 선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주관기관	해수부, 중앙해심, 지자체	협업기관	-
------	----------------	------	---

가. 선원복지 증진 및 선원 취업 지원

□ 추진배경

- 선원직 기피 등에 따른 선원 고령화 및 인력수급난 심화 추세에 대응하여 선원복지증진을 통한 선원직 매력 회복 필요

□ 추진계획

- 항만-시내 간 이동 교통수단(10개 주요항만, 차량 11대) 제공 및 선원 휴게시설 운영지원(9개소) 등
- 가족동반 휴양시설 이용료 일부지원, 저소득 선원자녀 장학금지급 및 원양어선원 선원가족 해외 조업현장 방문 지원 등
- 장거리 운항 선박 승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 원격의료지원 확대(대상선박 : 6척 → 20척)
 - * 원양선박승선원의 의료지원 미흡으로 인해 치료 가능한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시행

□ 추진현황

- 국선심판변론인 참여 심판 실시(사건 143건/관련자 143명)
- 해양사고관련자 권익 보호와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시 공정성 제고 위하여 국선심판변론인 선정지침 개선안 마련('15.1.23)
 - * 해심법 개정을 통해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도입('11.12.16 시행), 세부 업무 기준과 절차 마련('12.4.5, 훈령 개정)

【 국선심판변론인제도 】

- ◆ (정의)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로써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

* 근거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11.12.16 시행) 제6조의2

- ◆ (대상)

- 사회적 약자(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자)
- 빈곤 등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
-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가 필요한 자

- ◆ (국선심판변론인 선정방법)

- (직권) 사회적 약자,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구)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추진계획

- 국선심판변론 제도 홍보 강화

- 심판청구서, 출석요청서 등 공문에 홍보자료 첨부하여 송부

- 국선심판변론인 평가 강화

- 심판 사전 준비, 질문 내용, 변론서의 내용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제외 추진

다.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가입지원

□ 추진배경

-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인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어선 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원

* 해수부는 수협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료의 15~70%지원('16년 663억원)

- 지자체는 자체 예산확보를 통해 평균 40%의 보조금 지급('16년 50억원)

< 지자체별 어선원 재해보험료 보조사업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어선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량 : 516명(안산 193, 화성 267, 평택 29 시흥 27) - 사 업 비 : 236백만원(도비 24, 시비 139, 자담 73) - 사업내용 : 국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지방비 지원, 어선 톤급별 지방비 보조율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미만(80%), 10톤미만(50%), 30톤 미만(10%)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어선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량 : 연근해 어선원(1,500명) - 사 업 비 : 2,100백만원 - 사업내용 : 총톤수 4톤 이상 및 3톤 이하의 임의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료 일부지원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량 : 5,870명(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사 업 비 : 1,07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금액의 자담분 중 일부를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톤미만 20%, 30~50톤미만 15%, 50톤이상 1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량 : 2,520척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금액 자담분의 3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 미만 어선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보험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량 : 900척 - 사 업 비 : 950백만원(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수협별(어선별) 분기별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톤급별 차등 지원(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연근해어선)

중점 1-6 외국인 선원의 근로 여건 향상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선원 증가('14년말 기준 20,894명)로 인하여,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외국인선원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 교육 등 필요
- 선원업무에 관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문화 이해, 출입국관계법령 등 교육 이수 필요

□ 추진계획

- 외국인선원 교육실시 : 지속추진
 - (입국 전)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국내체류 예정인 외국인선원으로서 최초 승선인 경우는 30일 이상)
 - (입국 후)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선박운항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
-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 추진(인권 교육 관련 조항 신설, '16년 상반기)

중점 1-7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협업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	----------	------	---------------------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에 대해 매년 일정시간(4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선이 전체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효성 미흡

* 선장·기관장 등 어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등 교육(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 선종별 해양사고 비중('06~'10년) : 어선 70.6%, 상선 29.4%

□ 추진현황

-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 지속 실시

* 수협 안전조업 전문강사 출강교육(354회, 42,056명)

** 25톤 이상 : 39회 3,465명 / 25톤 미만 : 315회 38,591명

- 체험 참여형 교육 지속적인 실시로 어업인의 사고대처능력 배양

- 추진실적 : 332회 / 40,441명 교육(대상자의 81%)

□ 추진계획

- 어업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상설교육장 운영 추진(연중)

- 교육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한 재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상설교육장 운영(인천, 포항, 목포)

- '어선 위치발신 장치' 사용법 교육 강화

- 충돌 등 사고예방을 위해 위치발신 장치 사용법에 대한 어업인 안전교육 시행(442회, 48,293명)

-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어항에서 어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업 교육 시행(비조합원 포함 48,293명)
- * 강사지원 순회교육 85개 조합 48,293명
- 2톤 이상 VHF통신기 설치대상 확대에 따른 통신기사용법 교육 강화 및 체험기회 제공
- 상황별 항법 및 등화요령 등 운항능력 배양 교육 실시
- 생존기술, 구명설비 사용법, 및 응급처치술 체험·실습 확대
- 외국인선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교육 시범 실시
-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어선사고 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 안전체험관(목포통신국)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일선수협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이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이력관리시스템’ 운영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주관 : 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연안 시·군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지도 및 해상안전 교육, 안보교육 등 실시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참여(주관 : 수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일 경기 지역 주요 항·포구에서 실시 - 어업인 안전조업 의식 제고 및 해난사고 예방 가두 캠페인 실시 - 계절별 선박피해 예방교육실시 - 선상 추락자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구명동의 착용제도, 홍보 등 ○ 어선(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 성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반기 1)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어기를 활용한 어선 안전점검 실시 - 낚시어선업자 대상 낚시안전 집합교육 실시(반기 1)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수협/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조, 현장 체험 형 교육 실시(어한기 이용, 어촌계 순회 등) - 매월 1일을 「어선 안전의 날」로 운영 및 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교육 협조 ○ 어선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 등 근로여건 개선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 - 16개 연안 시·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안전조업지도, 해상 안전교육, 어선해난 사고 예방을 위한 퀴즈대회 및 캠페인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참여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등 홍보 및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실시 -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지정 안전의식 고취 -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실시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업 및 해상안전 교육 연중 실시 - 어촌계·협회 등을 직접 방문하는 소규모 순회교육 실시 ○ 매월 1일 '어선 안전의 날' 지정 - 매월 지역별 어업정보통신국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 - 안전조업 의식제고 및 해난사고 예방 가두 캠페인 실시 - 계절별 선박피해 예방교육실시 - 선상 추락자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구명동의 착용제도 홍보 등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안전교육의 내실화 추진 - 교육대상(550명) : 연근해어선 선주, 선장 및 선원(외국인 선원 포함) - 사업비 : 50백만원(민간위탁금)

중점 1-8 해사 전문인력 양성

주관기관	해수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협업기관	
------	-------------------	------	--

가. 우수 고급 해기사의 양성 확대

□ 추진현황

- 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운영으로 전문 해기인력 양성

< 교육 운영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외항상선3급	200	107	150	126	106
원양어선3급	29	26	21	24	13
내항상선5급	73	57	38	19	18
소계	302	190	209	169	137

□ 추진계획

- 해운산업계 해기인력의 탄력적 양성·공급을 위해 국비지원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개설('16. 3월)

* 교육과정 : 외항상선 3급, 원양어선 3급, 내항상선 5급

* 모집인원 : 160명(외항 120명, 원양 20명, 내항 20명)

< 2016년 교육 개설 계획 >

구 분	외항상선 3급	원양어선 3급	내항상선 5급
교육인원	120명 (항해 60명/기관 60명)	20명 (어업 10명/기관 10명)	20명 (항해 10명/기관 10명)
교육기간	9개월	8개월	5개월
	(육상6월 + 승선실습3월)	(육상6월 + 승선실습2월)	(육상4월+승선실습1월)
수료 후 특전	교육과정 수료(이론교육 6월) 및 승선실습기간 1년 충족 후 해당면허 취득		교육수료 후 1개월 승선실습 충족하여 면허취득
협력기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나.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 해외진출 지원

□ 추진현황

-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해외 선박관리 시장선점을 위한 선박관리 역량강화 필요

* 선박관리산업 : 선박소유자와 계약 체결 하에 운항, 선원 공급 등 선박운영 관련 업무 수행(국내 관리선박 1,946척 중 57%(1,120척)가 외국선주 소유 선박임)

- 선박관리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추진

* ('12~'13)일본 → ('14)그리스 → ('15)일본

□ 추진계획

- (인력양성) 선원관리, 선박안전 및 국제규제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선박관리전문 역량 역량강화(연간 200여명)
- (해외진출) 외국선주 관리선박 유치를 위한 현지 투자설명회를 유럽권으로 확대하여 해외시장 외연확대('16.6)

다. 북극항로 활성화 대비 극지운항 인력 양성 추진

□ 추진현황

○ 북극항로 운항인력양성 기반구축사업 추진

* 예산현황 : ('14년) 300백만원 → ('15) 200백만원 → ('16) 100백만원

○ 주요내용

- 북극항로 운항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시
- 북극항로 운항인력 관련 연구 및 극지해역 선박운항 세미나 개최
- 극지해역 생존 및 인명안전 전문교원 교육 이수 추진
- 극지용 방수복 및 개인 생존장비 교육 보조재 구입 등

□ 추진계획

○ 북극항로 운항인력 양성 전문 교육 실시

- Ice Navigation 기초 및 상급과정 개설(연중 총 4회, 20명)

* Ice Navigation 원양어선 과정 신규 개발 및 교육 시행

- 극지운항 관련 전문교육 자료 및 극지생존 전용키트 등 확보(약 2천만원)

○ 극지해역 선박운항 전문교원 교육 이수 및 역량강화

- 노르웨이 Ice Navigation 교육과정 이수 및 승선훈련(협의 중)
- 북극항로 운항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또는 국적선 승선훈련('16.下)
- 국내외 북극해 및 극지운항 관련 세미나 참석(수시)

○ 극지운항 해기사 교육·훈련 관련 요건 의무화 대비 법령 정비 추진

* STCW 협약의 국제적 발효('18.1.1)에 대비 선박직원법 개정 추진

일반 1-3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 교육체계 확립
--------	-------------------------------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협업기관	-
------	-------	------	---

가. 수상레저기구 조종교육 내용 및 시설 정비

☐ 추진배경

-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증가에 따른 면허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면허 취득 과정의 엄격한 운영 필요

☐ 추진계획

- 수상레저 교육 관련 사무(수상안전교육, 면제교육)의 질적 향상 추진
 - * 교육 강사의 강의능력 향상 및 강의 내용 내실화를 위한 교육 실시
 - *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교육 미비점 지속 발굴 및 보완
- 위탁·대행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통일성 있는 사무집행 관리 추진
- 환경변화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규정 개정 및 시험관·강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험 응시생 만족도 향상
 - * 정기 종사자 교육(2월), 대행기관 등 사무점검(상반기) 실시
- 응시 편의성 증대 및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PC시험장 증설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면허 취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면허보급률 향상
 - * PC시험장 2개소 증설 및 기존 3개 PC시험장 시설 개선 추진

2. 선박 안전성 강화

□ 해운·조선 산업 경쟁력 확보, IMO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중점 2-4)

* 연차별 R&D 투자예산(백만원) : '12년 10,203 → '13년 13,475 → '14년 18,800 → '15년 13,472 → '16년 24,858(정부안)

□ 노후 국제여객선, 어선 등에 대한 특별·정밀 안전점검 시행으로 선박의 운항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중점 2-6)

* 선령 25년 이상 국제여객선 반기별 특별점검, 선령 20년 이상 어선 정밀검사

□ 노후어선 감축 및 기관 대체 등 장비개량 사업 지속시행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중점 2-6)

* '16년 19,904 백만원, 987척에 대한 장비개량지원 및 보상 시행(지자체)

□ 외국선급과 정부대행검사 대행협정 체결, 북극항로 운항선박 안전기준 마련 등 선박검사제도를 선진화 하겠습니다.(중점 2-7)

* 대행협정체결·법령 정비 및 북극항로 안전기준(고시) 마련('16.9)

□ 안전에 취약한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중점 2-8)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16년 100억원 확보, 화물선 대출 상환기간 연장(10년→15년)

□ 운항환경이 열악한 내항선의 사고저감을 위한 안전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일반 2-1)

*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한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 수행(800척)

중점 2-1 중·소형 유조선 안전 제고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유탱커 등의 화재대비 안전성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등 소방설비 관련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동 협약내용을 수용한 국내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필요

* 인화점 60℃ 미만인 화물을 양하 후 화물탱크 내부를 질소 등으로 불활성화시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낮게 만드는 보호장치

□ 추진계획

-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16.3월)

-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설치대상 확대 및 설비요건 전면 개정

* 대상 : 재화중량톤수 (현행) 2만톤 이상 → (개정) 8천톤 이상 유탱커 등

- 노천갑판 컨테이너 운송선박의 소방설비 요건 신설

* 물분무 창, 컨테이너 5단이상 적재 시 물분무모니터 및 호스 등

** 초안마련·사전규제심사·행정예고('16.2월)→규제심사('16.3월)→제정·고시(3월)

중점 2-2 어선 안전관련 항해·통신장비 설치 확대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협업기관	-
------	----------	------	---

□ 현황 및 문제점

- VHF-DSC 설치의무화를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15.2.) 하였으나, 작동률이 저조함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시 조난사실 확인 곤란

□ 추진계획

- 무선설비(VHF-DSC) 작동의무화 방안 마련(어선법 또는 전파법 개정)
- 무선설비(VHF-DSC) 설치대상(2~5톤) 어선에 대한 설치 지원(420백만원, 1,400척)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어선 무선설비 설치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어선 : 187.2백만원 / 156척 *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어선 무선설비 등 대체 또는 설치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어선 : 253백만원 / 195척

중점 2-4 체계적 해양안전 기술개발 추진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해양안전 기술개발 과제 지속 발굴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IMO 등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과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투자 필요

* 연차별 R&D 투자예산(백만원) : '12년 10,203 → '13년 13,475 → '14년 18,800 → '15년 13,472 → '16년 24,858

□ 추진계획

- 해사안전 미래산업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연구 추진 및 정책 연구 만족도 등의 지표를 통해 성과 확인('16.12)
- '16년도 주요 R&D 추진사업
 - 해양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기반연구(계속, 1,500백만원) : '종합적 인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국제기준부합 선원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시스템 개발(계속, 900백만원) : 폴라코드(Polar Code '15)의 '17년 강제화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 개발
 - 친환경선박 TCS 시스템 구축(Test, Certification & Standardization)(계속, 3,403백만원) : 친환경선박 기술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등
 - 선박배출 대기오염(PM·BC)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계속, 1,300백만원) : 선박배출 대기오염 저감 후처리시스템 기술 개발 및 IMO 규제 대응 의제문서 개발

- SCG Phase II 기준부합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 개발 및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계속, 2,655백만원) : 고성능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 및 시험·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 다목적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기준국 기술개발(계속, 1,700백만원) : APV-1(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을 만족하는 다목적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준국 사이트 선정기술 개발 등
- 선박 및 인명대피 기술개발(신규, 1,000백만원) : 비상시 여객선·위험물 운반선의 효과적 대피와 피해경감을 위해 연안 피난처 환경위험도 제작과 조난대비 피해경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 기술개발(신규, 8,500백만원) : e-Nav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해양 융복합 소재 기술개발(신규, 1,500백만원) : 고강도 복합소재 성형기술, 난연 복합소재 제조기술, 고압용 복합소재 생산기술 개발

나.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기술개발의 신뢰성 확보, 내역사업별 계획 대비 추진현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 구성·운영

* 구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주관, 연구기관(KRISO·KMI·KST·KR), 관련대학 및 선사 등

□ 추진계획

- 해양수산 R&D 발전방향 모색 및 관계기관 공동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워크숍 개최('16.12, 해수부 연구개발팀 주관)

*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담당과, 진흥원, 해과원, 선박연 등 60여명 참석

- 기관별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사업계획 상호공유하고 기관 간 소통체계 활성화
- R&D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등의 관리감독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16.1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주관)
 - * 점검반 구성 : 과제별 외부전문가, 주관연구책임자 및 진흥원
- 계획대비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개발 성과 달성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등 점검

다. 구명조끼 관리방법 강화 및 구체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에서 인명구조용 필수설비인 구명조끼의 내구연한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추진(1.7억원, '15.6~12.)
 - * 선종, 비치기간, 보존방법 등 조건별 구명조끼(약 500벌)의 성능시험을 통해 구명조끼 장기사용을 위한 보관·사용방안 도출

□ 추진계획

- 구명조끼 장기 사용을 위한 안전 보관 및 관리지침 마련·시행('16.상반기)
- 선박소유자, 선장 및 선원이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통일된 방안 제시

중점 2-6 노후 선박 안전검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자체	협업기관	-
------	-----------------------	------	---

가. 선령 25년 이상 국제여객선 반기별 특별점검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제22차 한중해운회담('14.9)에서 선령 25년 이상 한·중운항 카페리 여객선에 대하여 정기검사 사이 매 6개월 마다 특별점검 시행에 합의

* 선령 25년 이상 한중운항 카페리 여객선의 특별점검방안 마련('15.2)

□ 추진계획

- 한·중 양국 선급 합동점검 실시(연중)

- 매년 정기검사 완료일 이후 6개월째 되는 날 전후 1개월 이내 양국 선급이 합동으로 점검표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

* 특별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운항정지 조치(해운정책과)

- 특별 점검 사후 조치

- 양국 선급이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 부서(해운정책과, 해사안전정책과)에 보고

나. 노후선박(어선)에 대한 검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검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통한 선박(어선)의 안전성 제고
 - 노후선박(어선)의 검사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운항 도모

□ 추진계획

- 노후선박(어선) 검사 시 전공별 2인 1조 투입
 - 선령 20년 이상,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어선) 대상 정밀검사 실시
- 도입 노후 여객선 등에 대한 운항안전성 중점 점검
 - 도면승인 시 도면승인실 주관 하에 검증·승인 업무 수행
 - 검사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전공별(선체·기관·전기) 3인 1조 투입
- 다중이용선박 복원성능 검증 강화
 - 정기적 검사 시 선체 전경 사진촬영 후 이전 사진과 대조 확인 등 불법 증·개축 여부 철저 검증
- 선체상가(거선), 기관개방 및 축계발출 검사 중점 관리
 - 검사 현장사진 촬영 후 검사보고서 합철

다. 선박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규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 필요
- 선박검사 신뢰도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요 검사기구 확충

□ 추진계획

- '16년 검사원 종합교육 추진계획 수립·시행(연중)
- 검사원 내·외부 교육 확대 추진
 - 사내 경력별 직무보수 교육 횟수 등 확대
 - 직무 전문화를 위한 외부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 검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기구 구입 및 노후검사 기구 교체
 - * 검사기구 구입계획(안) 수립 예정('16.11월 중)

라. 노후어선 감축 및 장비개량 지원 사업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노후어선은 기관고장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원 필요
 - * 전체어선 68,417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이 10,734척(15.7%) 차지

□ 추진계획

- 해양사고 예방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고효율 어선 유류 질감장비 보급 확대 지원('15, 41억원 → '16, 73억원)

< '16년 국비지원 세부내역(백만 원) >

구분		내역사업		
		LED燈	기관·장비	전기추진기
합계	7,269	390	6,414	465
부산	693	3	630	60
인천	600	-	570	30
울산	384	-	354	30
경기	330	-	330	-
강원	633	3	630	-
충남	525	15	420	90
전북	273	3	270	-
전남	1,482	27	1,290	165
경북	360	30	330	-
경남	999	9	900	90
제주	990	300	690	-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 연안어선 안전용품 지원 시범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50백만원(국비 100%) / 미정
인천광역시	○ '16년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연·근해 어선 저효율 및 노후기관 대체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2,000백만원(국비(해수부) 600) / 59척
울산광역시	○ 연안어선 감척에 따른 어선·어업허가 폐업보상금 지급 -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 지원예산 : 2척 ○ 사업내용 : 어선 설비(기관 및 집어등 등) 대체 또는 설치 지원 사업 - 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360, 시비 180, 구비 180) - 지원예산 : 85척(남구 15, 동구 30, 북구 28, 울주군 12)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어선 노후안전 설비(소방·구명) 대체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4백만원 / 4척 * 국비 1.2, 시비 0.6, 구비 0.6, 자부담 1.6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기관설비 대체 지원 사업 - 사업비 : 1,100백만원(국비 330, 도비 99, 시비 231, 자부담 440) - 지원예산 : 45척(안산 10, 화성 30, 시흥 5) ○ 노후 안전설비(소방·구명·무선설비 등) 대체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58백만원 / 42척 * 국비 18, 도비 5, 시군비 12, 자부담 23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어선 감척 등 폐선자금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4,286백만원 / 78척 ○ 어선 기관설비 대체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990백만원 / 71척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어선 감척 등 폐선자금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4,500백만원 / 100척 ○ 어선 기관설비 대체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3,500백만원 / 120여척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어선 및 폐선 등 일제 점검(반기 1회) ○ 노후어선의 기관설비 대체 및 선체개량 지원 사업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기관설비 대체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1,833백만원 / 158척 ○ 자동확산형소화기 등 노후설비 대체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283백만원 / 203척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725백만원 / 16척 * 국비 580, 지방비 145 ○ 노후기관 등 장비 개량 사업 지원 - 사업비 및 지원예산 : 3,630백만원 / 100척 * 국비 990, 지방비 1,190, 자부담 1,450

중점 2-7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외국 선급과 정부대행검사 대행협정 체결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선박검사 독과점 체계개선 및 검사기술 향상을 위해 외국 선진선급을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

* 관련 업·단체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개방 후보 선급 선정(3곳)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중 1곳을 최종 개방대상 선급으로 선정('15.11)

□ 추진계획

- 프랑스 선급의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대행협정 신청 접수 및 대행기관 기준 적합여부 검토('16.2)

- 프랑스 해사당국과 정부대행권 상호개방 및 해사분야 협력 방안 협의 및 MOU* 체결('16.6)

* (주요내용) 양국 정부검사권의 조속한 상호개방 노력, 양국 해사안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IMO 주요의제 공동 대응, 정례협의 및 연락관 지정 등

- 프랑스 선급과 우리 부간 선박검사 대행협정 체결('16.12)

- IMO 대행기관 코드(Recognized Organizations Code)에 따라 대행협정안 마련

* (주요내용) 대행업무 종류·범위, 보고 및 감독사항, 선급규칙 개발 및 개정 협력(승인), 검사수수료 기준 및 징수, 검사정보 기밀유지 및 보상책임 등

- 협상을 통해 협정안 조정 및 대행협정 체결(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 외국과의 법령 차이(검사원 법정자격, 부실검사원 벌칙, 검사수수료 승인 등)로 협상결과에 따라 선박안전법령 개정을 조건으로 협정 체결 가능

나. 북극항로 진출 국적선박의 안전운항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북극해역 운항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Polar Code*, '17년 강제화) 마련

* 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 북극해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선박 분류, 선체 및 설비의 내빙설계 기준 등 각종 안전사항 규정)

□ 추진계획

- '가칭'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안전기준(고시) 마련('16.9월)
 - 선체 및 선박장비 온도정의, 운항선박의 분류(A, B, C) 및 성능
 - 빙하에 대한 내성, 선체강도, 강화된 방수기능을 고려한 설계
 - 선원의 극지방 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 극지환경에서의 수색·구조, 탈출 및 대피 시스템 등 규정

* 초안마련(6월)→사전규제심사·행정예고(7월)→규제심사(8월)→제정·고시(9월)

다. 레저선박 우수사업장 지정 및 건조·검사기준 선진화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FRP)의 선체에 대해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선박용 물건 품목으로 추가*하였으나, 지정제조사업장으로 신청한 업체는 없는 실정

*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해수부 고시)」 개정('13.9)

** 지정제조사업장 지정 시 건조검사 간소화로 건조기간·비용절감 효과 발생 기대

□ 추진계획

- 레저선박 선체에 대한 지정사업장 운영제도 홍보(계속)

라. 선박용물건 검사제도의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용 물건에 대해 SOLAS 등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추진 중
- 국제기준의 아국 형식승인시험기준(고시)에 적기 반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적정물품의 선박탑재 필요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15.9) : 자장식 호흡구, VDR 등에 대한 기준 개정 및 준용된 국제기준 개정시 이를 적용하도록 함

□ 추진계획

- IMO, IEC, ISO 등의 국제협약규정 개정사항의 적기 국내 수용·운용을 위한 국내 고시의 제·개정 추진(계속)
- 형식승인지정시험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기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기준개정(계속)
- 형식승인증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유효기간(5년) 설정 추진 (선박안전법령 개정, '16.12)
- 형식승인 물건의 검정기관(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자체지침 개정을 통해 적정물품의 선박탑재 추진
- 검정 시 현행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 하는 절차 마련('16.상)

중점 2-8 안전취약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건조 자금 지원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내항선박의 신조자금 지원체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선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선사의 영세성과 수익성 저하로 노후화 현상 심화
 - * 선령 20년 이상 노후 여객선비율 : ('05) 4% → ('08) 8% → ('11) 18% → ('14) 25%
- 특히, 선령제한 강화(여객·화물 겸용선 : 최대 30년 → 25년)에 따라 적기 선박대체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일부 항로 두절 우려
 - * 선령제한 강화규정의 유예기간(~'18.7) 내에 카페리 6척 신조 필요(3,550억원 소요)
- 선박 현대화를 통한 해상안전 확보 및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방안 수립 필요

□ 추진계획

- 일반 여객선·화물선은 現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되, 대출상환 기간 연장(10년 → 15년 이상)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 * 現 지원조건이 영세한 선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건조 포기 사례 다수 발생('15.11 기준, 총 122척의 신청 선박 중 54척(44%)이 건조 포기)
- 카페리·초쾌속선* 신조 촉진을 위해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16년 예산 100억원 확보, 총 1,000억원 이상 조성)
 - * 카페리·초쾌속선은 담보 확보 곤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한 지원 곤란(이차보전사업 지원실적이 전무)
- 펀드관리기관을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펀드관리기관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SPC 설립

일반 2-1 내항 취역선 현장 안전점검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지방청	협업기관	-
------	----------	------	---

□ 현황 및 문제점

- 사고의 약 74%(어선 제외)를 차지하는 내항선 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한 선박·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체계 강화 필요
 - * 해사안전감독관 총 34명 중 화물선감독관 14명(책임급 4명, 선임급 10명)배치 완료(본부 1, 부산 3, 인천 2, 여수 2, 마산 1, 포항 1, 평택 1, 울산 2, 목포 1)

□ 추진계획

- 예부선, 노후 화물선 등 내항선에 대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예·부선 및 내항 위험화물운송선박 등 취역선박에 대한 주기적 지도·감독을 통한 안전점검 및 항해장비 운용 등 종사자 교육 실시
-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 강화
 -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운영매뉴얼 개발('15.9월)
 - 연간 지도·감독 계획 수립('15.3월) 및 직무 투입('15.4월, 5월)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정기(수시) 집중 지도·감독을 통한 선박안전관리체계 활동 추진(연간/월간) ○ 선박안전운항 확보 및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내항선원 교육 강화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제주해양관리단】 ○ 내항화물 및 여객선 안전점검 강화 - 선체·기관 및 ISM 이행여부, 해양사고 예방교육 - 구명·소화설비 등 안전설비 점검 - 중대결함 발견 시 항해정지, 경미한 결함은 기한부 시정지시 - 선체 부식·파공 등 선박검사 관련 결함은 해당 검사기관에 통보
인천청	○ 사고 위험이 높은 예·부선, 노후 화물선 등 집중 점검 - 노후선 사고예방을 위한 선체·기관 등 주요 설비 점검 ○ 대형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 점검 - 화물창 세정절차 준수·방폭 장비 사용 여부 등 점검 ○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교육 - 사고사례 및 내항선 안전교육 교재를 통한 종사자 교육 실시
여수청	○ 사고 위험이 높은 예인선, 노후 화물선 등 집중 점검 ○ 고령 선원에 대한 필수직무교육 실시 - 노후선 사고예방을 위한 선체·기관 등 주요 설비 점검 ○ 대형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 점검 - 화물창 세정절차 준수·방폭 장비 사용 여부 등 점검 ○ 필요시 선박검사단체(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합동 점검 실시
마산청	<내항 화물선 안전관리 강화> ○ 소형선박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항만운송사업 등록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 해양사고에 취약한 모래운반선, 예부선 등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 ○ 대형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 점검 - 화물창 세정 절차, 방폭 장비 사용 여부 등 점검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위한 여객선사 및 선박 현장 지도·감독 ○ 선원의 비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훈련 실시 ○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강화 - 직무수행·자격·임면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동해청	○ 해사안전감독관,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기관과 안전관리 취약 내항선 점검 전담반 운영 - 중대결함 발견시 항해정지, 경미한 결함은 기한부 시정지시
군산청	○ 내항 화물선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방선교육을 통한 인적·물적 사고 사전예방 활동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 취약선박 등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선종별 집중점검 추진 - 내항선 정박현황 및 점검주기를 감안하여 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고 통계, 주요사고 사례를 통해 내항선 중 취약 선종을 선정하여 점검 실시 - 결함사항의 시정·보완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점검 결과를 선박검사대행기관과 공유하여 선박검사 강화 유도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전담반 구성·운영(2인 1조) - 예인선, 위험화물운반선, 선령 20년 이상 내항 화물선 등 방선교육 실시 ○ 선종별 안전점검 실시 - 항만건설과와 합동으로 공사작업선 안전점검 실시(상·하반기 총 2회) - 예부선 및 연안유조선 등 취약선박의 주기적 방선을 통한 사고 예방 및 항해장비 운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선박안전법 적용이 완화되는 항내 운항 역무선에 대한 관계 기관(선급, KST)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연 1회)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내항선 안전관리 전담반 운영 ○ 방선교육을 통한 사전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활동 추진 - 항내 공사작업선 및 역무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연중) - 항해·기관·선체 등 선박설비 유지·관리 실태,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및 기타 안전관리매뉴얼(해당 선박) 준수 여부 등 ○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등 선박안전관리 상태의 선제적 개선을 위한 현장(사업장 포함) 점검 실시 등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위험이 높은 예·부선, 노후 화물선 등 집중 점검 - 노후선 사고예방을 위한 선체·기관 등 주요 설비 점검 ○ 대형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 점검 - 화물창 세정절차 준수·방폭 장비 사용 여부 등 점검 ○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교육 - 사고사례 및 내항선 안전교육 교재를 통한 종사자 교육 실시

일반 2-4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추진배경

- 중국 텐진항 사고('15.8.12)와 관련, 위험물 컨테이너 사고 발생 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
- 해상위험물 컨테이너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위험물 운송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

* 2014년, 국내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은 각각 수출 284,857TEU, 수입 275,709TEU로 연평균 각각 9.0%, 8.6% 증가

□ 추진계획

-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검사 및 선박운송 안전관리 강화
 - 항만내 위험물 컨테이너 공동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점검실시 도모(국민안전처 협조)
 -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행정조치 시행을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사항 및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 추가 등 국내법령 반영('16.상)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자에 위험물 적재차량 운송인 포함·교육내용 신설, 신규 위험물(30개) 및 위험물 운송요건(2,792개) 등 개정

- 화주, 운송인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강화 추진

* 위험물에 관한 국제동향 전파, 위험물 사고시 비상대응 부문 교육 강화

-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매뉴얼 개정 발간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최신 개정사항 및 화물운송기구지침서(CTU Code)의 고박 관련 사항 등 반영

일반 2-5 소형어선의 생존성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어선원들은 조업 중 구명동의 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특히 겨울철은 구명동의를 착용하더라도 체온저하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한 실정

* 바다추락 시 생존가능시간 : 수온 0도 이하 15~45분, 4~10도 1~3시간

□ 추진계획

- 구명조끼, 구명부환, 방수복 등 안전장비 지원(210백만 원, 5천 벌)
- 조업 중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및 구명장비 관리 강화
 - 「어선안전조업법」 제정('16. 2 예정)을 통해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 베링해·남극 등 원양조업어선 승선원 생존율 제고를 위해 특수 방수복 비치 의무화(어선설비기준 개정 추진)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필요
 - 보조항로 운항 국고여객선 건조 시, 교통시설 이용약자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이동 편의시설 설치
 - 국고보조 여객터미널 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편리한 이용 도모

□ 추진계획

- 국고여객선 건조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확보를 고려한 선박의 설계 및 건조 추진(계속)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고지원 여객터미널 내에 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3.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불특정 다수가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일반 3-6)

* 대책 수립 및 국무회의 상정('16.1월 / 국민안전처 합동)

□ 영세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선박안전관리자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선사 자체 안전관리 역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중점 3-1)

* (컨설팅) 안전관리 교재 제작·배포, (협의회) 분기별 정기회의, 회보창간

□ 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중점 3-2)

* 안전관리, 선원관리, 선박관리에 대한 대행업체 등록기준 보완

□ 여객선 이력관리·안전정보 공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중점 3-3)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16.7), 여객선 전용카드 도입, 이동식 계근기 확대 배치, 실시간 여객선 정보 확인을 위한 ICT기반 운항관리체계 구축('16.상)

□ 외국 항만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적선 사전점검의무강화 등 선박안전 우수국가 등급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중점 3-7)

* PSC 간담회(상·하반기 2회), 안전관리자 특별교육(상시), 집중점검(CIC) 대비 선사 설명회 개최 및 지침서 작성·배포('16.8)

□ 항로·항법 정비,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개선·보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중점 3-8)

* '15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15.3~12)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추진

중점 3-1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인적과실에 저감과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체제(ISM Code)를 국내 도입·시행 중('98.7~)
- '13년부터 선사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15.1~12, 21회) 및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운영·지원 중
 - * 안전관리매뉴얼의 적정성 검토·보완, 안전관리활동 지원, 우수사례 전파 등
- 선사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적인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추진계획

- 영세선사 위주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연중)
 - 사업장·선박 업무절차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체제 비대상 선사를 위한 교재제작, 기존 컨설팅 선사에 대한 사후관리
- 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체 안전관리자 역량 향상 유도를 위한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운영 지원 추진(연중)
 - * 정기모임(분기), 안전관리자 회보 창간, 안전전문가 초청 특강지원 등

- 안전관리체제 대행기관 인증심사 품질 개선 추진('16.12월)
 - 인증심사 정부대행기관 소속 심사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부적절에 대한 처분근거 필요(대행협정서 등)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연중 13회) 및 인증심사원 양성교육('16.4월) 실시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인증심사원 및 내부 심사자 보수교육 과정 개설·운영
 - * 안전관리체제 이론과 실무, 내 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사례 등
-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의 적용대상에 준설선 등 선박소유자가 국제항해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포함('16.8월)
 - 해운법에 따른 운송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선박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대상으로 포함 필요
 -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등)
- 중고선을 매입한 후 선박수리를 위해 제3국으로 항해하는 경우 안전관리체제 적용 대상에서 면제('16.8월)
 - 수리를 목적으로 제3국으로 항해하는 경우도 선박 도입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현실에 맞게 일시면제 필요
 -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에 한해 인증심사 면제 중
- 선급 개방 대비, 기존 선급의 인증심사원 인정 규정 마련('16.8월)
 - 선급 개방 계획에 따라 선급이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지정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 필요
 -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4(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나. 사고선사·선박 수시심사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관리 부실 선사(사업장·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 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 및 미비점 보완·개선 필요

* '15년도 선박 4척, 사업장 5개소 안전관리체제 수시인증심사 시행

□ 추진계획

-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선박에 대한 수시심사를 통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

- 지방청 점검결과 중대결함 지적선박에 대해서는 수시심사 확대

* 사망·실종 사고, 충돌, 침몰, 전복 등 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선박·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별(수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선박 이외에도, 일반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심사시 선주 참여 조치 후 심사 진행으로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p>【 제주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안전관리체제 심사계획 - 형식적인 서류작성 지양 및 실제 이행여부 확인 강화 - 고령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면담으로 개인임무 숙지여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체제 이행상태 확인 - 중부적합 사항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이행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안전 관리 적합증서(DOC) 또는 선박안전관리증서(SMC) 회수 등 강력 제재 ○ 해양사고 발생 시 수시인증심사(또는 사업장 지도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해양사고 발생 선박 또는 선사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의 규모 및 피해정도, 인명사상 여부, 사고 원인 등에 따라 해사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실시 - 타 관할청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청과 협조체제 구축 ○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사업장 또는 선박 인증심사시 중부적합 발생 또는 인증심사관 판단 의거 필요시 - 중부적합을 경부적합으로 경감 조건 또는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조건으로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수검 조치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심사(선사·대행업체) 및 중간심사(선박) 시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 선종별 승선 및 심사 경력을 고려하여 특별심사팀 구성(필요시) - 중대 결함 식별 시 증서 회수(선사) 및 출항정지(선박) 조치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선사는 경중을 고려하여 수시심사 및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증서 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육·해상 종사자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업장의 과거 심사 이력 관리·재분류로 차기 심사시 종사자의 업무 친숙도 제고 도모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실시 ○ 수시인증심사를 통해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수준을 점검하여 자체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가 부실한 선박 및 사업장은 선박의 출항정지 또는 안전관리증서의 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등록선박 또는 관할해역 내의 충돌·좌초·침몰·전복, 인명의 사망 또는 실종,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선박 및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유사한 사고이력(재발), 사고의 경중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선박 인지 및 결함선박 신고 접수 시 방선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체제 이행상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수시심사 결과 중부적합 등 중대결함 식별 또는 사업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수시심사 추진 ○ 외국적선 사고접수 시 항만국통제 후 결과에 따라 해당선급 특별심사 요청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해양사고 유발 선박·선사대상 재발방지를 위한 수시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재발방지 방안의 매뉴얼 반영 및 실질적 이행 여부 확인 - 비상상황 시 신고, 비상연락망 가동 등 초동대처 능력 점검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경영자 안전의식 제고 및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전문성 도모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로 선박의 안전운항 능력 확보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선박과 선사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및 특별점검 실시 ○ 사고원인, 안전관리 취약요소 발굴 및 매뉴얼 반영 지도 ○ 주요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제 수립여부 및 이행능력 검증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외국항 출항정지, 해양사고 규모, 피해정도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재산 피해, 대량의 해양오염 등의 사고 선박 및 사업장(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강화 - 2년간 3회 이상 출항정지 발생 시 회사 및 관리선대 전수 특별심사·점검 실시 ○ (심사내용) 해양사고 규모, 피해정도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관련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 검토 - 해양사고 보고·조치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응 여부 - 선주,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시심사 시 배석 요청 - 회사 자체 안전관리 역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중대한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회수 등 강력조치 ○ (사후관리) 차기 선박(사업장) 인증 심사 또는 선박(사업장) 방문 시 재발방지대책 이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선박 및 선사 안전관리체제 실효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해양사고 발생 선박(선사) 대상 수시인증심사 실시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여부 검증 - 인적과실 기인 사고발생 선박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병행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업체 역량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안전관리대행업은 사업장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외에 별도 등록요건이 없어 안전관리체제 시행역량 부족
 - * 선박관리, 선원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시 효율적 안전관리 가능
- 폐업, 중부적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선박운항이 즉시 중단되나, 사업장 전환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 필요
 - * 사업장의 폐업, 등록 취소·정지 등의 사정으로 모든 선박의 운항을 동시에 중지하는 것은 규제의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추진계획

- 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요건 강화 방안 검토(연중)
 -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체제 핵심기능(안전관리, 선원관리, 선박관리) 등 등록기준 보완 사항 검토
 -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을 전부 대행하도록 규정화 검토 필요
-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가 효력이 정지될 경우에 소속 선박의 운항금지를 일정기간 유예토록 규정 개정('15.8월)
 -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정한 날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절차 정비('16.8월)
 -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중점 3-3 내항 여객선 및 시운전 선박 안전운항 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의 이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 회복 필요
- 해운법 개정·시행('15.7)에 따라 운항관리조직 이관, 안전규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ISM 수준의 표준운항관리규정 마련('15.11)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기본 수립('15.12)

□ 추진계획

- 여객선 이력관리·안전정보 공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16년 추진과제* 이행 철저
 - * 해운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15.7)하였으나 시행을 유예('16.7)한 과제
-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성 및 업무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제도 마련*
 - *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16.7),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교육 이수 추가(해운법 시행령 개정, '16.하)
- 도서민 신분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객선 전용카드 도입 등 승선 절차 개선, 과적 근절을 위한 이동식 계근기 확대 배치* 추진
 - * ('15) 4기(제주, 부산, 목포, 녹동) → ('16) 8기(제주, 목포 등 추가)
- ICT 기반의 운항관리체계 구축('16.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 강화

나. 신조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시운전선(외국적선 포함)의 감항능력 및 항해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항해검사' 실시(선박안전법 적용)
 - * 시운전선박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항해검사 규정 신설('07.11)
- 해운불황에 따른 아국 신조 선박척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연평균 1건의 시운전선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추진계획

- 시운전 선박의 감항성 확보 및 시운전 운항능력 강화
 - 항행구역에 따른 선박설비* 수량 및 정상 작동여부 점검
 - *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조끼, 비상소화펌프 등 구명·소화 설비 등에 대한 성능 확인 강화
 - 시운전 선박 적정 승무자격자·인원의 승선여부 확인 철저
 - * 시운전선 적용 승무기준 마련을 위한 선박직원법 개정('15.3.25.시행)
- 시운전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반기별)
 - * 지방청, 지자체, 조선소, 도선사협회 등으로 구성
 - 시운전 선박 운항정보 교환 및 안전확보 방안 등 협의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선박 운항수칙* 준수여부 확인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금지해역 운항여부, 항해당직 인수인계, 비상대응훈련과 확인 등 ○ 시운전 선박 출항전 관제실, 해경상황실 등 관계기관에 운항일정을 통보하여 협력강화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연중)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선박 운항정보 교환 및 안전강화 방안 협의를 위한 관련 업·단체 간담회 개최 ○ 운항 형태 및 안전 운항 이행 상태 점검을 위한 선박검사관 “시운전 선박 동승 프로그램” 운영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항해안전 협의회(반기별)를 통한 안전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금지구역 운영 및 시운전 선박 안전대책 논의 ○ 시운전 결과(항적, 항해일지 등)를 제출받아 금지구역 준수 확인 ○ 항해당직자 및 관련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선박 승선자 대상 조선소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장비, 기기 작동검사를 원칙으로 임시항해검사 강화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항해안전 협의회를 통한 안전대책 추진(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금지구역 운영 및 시운전 선박 안전대책 논의 ○ 시운전 결과(항적 및 비상훈련 결과)를 제출받아 금지구역 준수 확인 ○ 항해당직자 및 관련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선박 승선자 대상 조선소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장비, 기기 작동검사를 원칙으로 임시항해 검사 강화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임시항해검사 실시로 시운전 선박 감항성 확보(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구역에 따른 선박설비 적정수량 비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더, AIS 등 항해·소화 설비 등에 대한 성능 확인 강화 - 시운전선박 승선직원의 자격 강화로 적정 승무자격자 인원 승선 여부 확인 ○ 시운전 금지구역 운항 준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운항금지해역 설정에 따른 지정 항로 준수 여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을 위한 해상안전법 개정 및 고시 마련 예정 ○ 해상 시운전 항해실태 조사·개선을 위한 동승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해상에서의 승선원들의 항해능력은 물론, 소화·퇴선 훈련을 통한 비상대응능력 점검 및 시운전 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현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조선소(2개사) 시운전 선박에 동승(연 1회) ○ 시운전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4월,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식별된 시운전 선박 안전 운항 저해 요소 및 결함사항 공유, 시운전선박 항행안전 확보 방안 논의 등

중점 3-6 지자체 등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업기관	수협중앙회
------	-----------------------	------	-------

가. 지자체 관할 항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태풍 등 자연재난 및 항만 내 각종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바다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 기반시설 구축 및 항만 안전관리 규정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사고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제고, 해사안전업무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계류시설·선박, 승·하선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및 매뉴얼 정비 등 추진

< 지자체 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어항 방파제 건설공사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 예방 및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확대 ○ 어선의 안전수용능력 제고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으로 어항내 안전사고 예방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과 연계한 합동교육 실시 ○ 해양수산인력개발원 위탁교육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점검반」 지속 운영 ○ 현장 참여형 안전점검·교육·홍보 강화 ○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는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제거 ○ 투자계획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해운항만과 수산과 협조)에서 업무전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도 관련부서 간 협조체제 구축, 추진토록 행정적 지원 ○ 제5차 해사안전시행계획에 따른 해사안전업무 추진 ○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교육이수 시행 ○ 도, 시군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워크숍 개최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육상 및 해상 순찰활동 강화 ○ 사고다발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항내 위험물하역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수시) ○ 불법어로·선박수리 등 항내 불법행위 근절 ○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수심 및 기반 조사 후 안전대책수립 및 확인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장애물 제거 병행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관리주체별 안전관리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관리체제 정비 및 해양사고 사전 차단 -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시설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안전관리방안에 기초하여 제반사항 숙지, 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 수시 점검 등 안전관리 교육 강화로 자율대응체계 마련

나. 해양사고방지 및 전문 연구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선박안전 기술공단 주관 해양사고 방지 연구기능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카페리선박 고박장치 안정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 “카페리선박의 고박장치 하부 선체구조 강도 평가 프로그램 개발” ('15.2~'15.12) 관련 선체구조강도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 저체온증 기능성 구명조끼 개발('13.12~'16.11)
 - 2종 개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획득 및 SOLAS인증, EU-MED 인증* 추진

* EU-MED 인증 : 유럽선박장비인증(Marine Equipment Directive)

다.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안전기능 강화

□ 추진현황

- 어선의 사고예방 경보기능 강화를 위해 어선의 위치파악을 위한 수협 위치수신국(VHF-DSC) 설립

* 시스템구축 현황('12~'14년) : 상황실(1), 동해(7개소), 남해(5개소), 서해(4개소)

□ 추진계획

- VHF-DSC 시스템 통신 음영구역 해소를 위한 중계소 설치(연중)

중점 3-7 항만국통제(PSC) 강화 및 국적선 안전관리 우수 국가 유지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가. 국적선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

□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활동 강화, 해운불황에 따른 국적선대의 노후화 및 고급 해기사 부족에 따른 해기품질 저하로 주요지역(미국, 유럽, 호주)에서 출항정지* 지속 발생

* '14년 유럽지역 1건, 호주 4건 / '15년 미국지역 1건, 호주 5건

- 국적선의 안전관리 최우수등급 지속 유지,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해운활동 지원을 위해 국적 외항선사(선박)의 선택적 집중관리 및 선원의 PSC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국적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6.1)
 - 최근 3년 내 출항정지선박 및 국제기준에 따른 고위험선박(HRS)을 매분기 중점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하여 특별점검 시행
 - 출항정지 시 선사와 재발방지대책 회의 개최 및 선박 특별점검 시행
- *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ISM) 재검토, 운항 구역 조정 등 자구책 마련 유도
- 연 2회 이상 출항정지 발생 선사에 대해서는 사업장 특별심사 실시
- 선사·선원 등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PSC 대응 교육 강화
 - 국적선사 대상 PSC 동향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16. 상·하반기)

- 특별점검 시 선원에 대한 PSC 대응교육 및 경각심 고취
- 고급 선원과 선사 안전관리자 대상 현장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
 - * 해양수산연수원 정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PSC 주요 지적사례 등 교육
- 아·태지역에서 시행 예정인 항만국통제 집중점검(CIC) 사전 대응
 - '16년 “화물고박” 분야에 대한 CIC 시행('16.9~11) 대비 선사 설명회 개최 및 지침서 작성·배포('16.8월 중)
- 외국 항만당국과 국제협력 구축 및 현장지원 강화(연중)
 - 국적선의 부당한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인근 국가와 협력 관계 구축
 - 아국의 선진 점검기법 전수를 위한 기술교육강사 파견 및 호주 검사관 초청 국적선사 설명회 개최
 - 미국, 유럽 및 호주 등 주요 항만국 입항선박 모니터링 강화, 입항 전 사전점검 및 현지 동행점검 추진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정지 선박 발생 시 국내소재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연중) ○ 국제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 추진(반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순차적으로 선사별 승무원 체험형 훈련 실시 ○ 주요국가(호주 등) 점검동향 파악, 국적선 대응능력 향상교육(반기별)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고시된 중점관리대상 선박, 외국항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및 특별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출항정지 선박 또는 소속 선사의 관리선 중 취약선박 - (시기) 본부 지시에 따라 입항 즉시 점검 실시 - (조치) 설비분야 뿐만 아니라 비상훈련 등 ISM 분야도 점검 -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3개월 주기로 점검 실시 * 중대결함은 출항 전 시정, 경미한 결함은 국내항만에서 시정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결함 지적은 ISM CODE 병행 적용 ○ 중점관리대상 국적외항선 입항 시 PSC에 준하여 점검 실시 ○ 국적선사에서 외국항 항만국통제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 요청 시, 정부대행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사전 점검 시행 및 교육 실시(필요시) ○ 최근 3년 내 출항정지 선박 및 국제기준에 따른 고위험선박(HRS)을 매 분기 중점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하여 특별점검 시행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대상선박 및 외국항 PSC 출항정지 선박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시 외국항에서의 PSC 대응능력 강화 교육 병행 실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대상선박 관할 항만 입항시 특별점검 실시 *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선박(3년 이내) 및 안전관리 부실 선박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본부에서 대상선박 고시 ○ 중점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점검시 중대결함은 출항정지, 경미한 결함은 국내 항만 내에서 시정 - 선박점검시 선원교육 병행으로 선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 중대결함이 선사·선급 귀책인 경우 차별적 조치를 통해 선박검사 대행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 강화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점검 대상선박 국내 입항 시 점검 및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시 출항정지된 선박 및 중점관리 대상선박 * 본부 분기별 특별점검 대상선박 통보에 따른 중점관리 실시 - (점검반) 항해·기관으로 2인1조 점검반 구성 - (추진계획) 당해 선박의 점검이력을 사전 확인하여 취약이 예상되는 결함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선원교육 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선박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사항 시정 후 관리상태, 선원 안전관리 역량 확인 ○ 고위험(HRS)·고선령(20년 이상)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세부점검 및 선원교육 실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외국항 PSC출항정지 선박, 중점관리지정선박,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항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및 특별심사 실시 * 설비분야 뿐만 아니라 선상운용절차, 비상대응 등 ISM분야 확대 점검 -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3개월 주기로 분기점검 실시 * (대상) 최근 3년내 출항정지 선박, 고위험군(HRS: High Risk Ship) 선박 - 선령 20년 이상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대상선박 중 노후 선박 입항 시 100% 점검 실시 ○ (점검반) 2인1조를 원칙으로 선체와 기관분야 별 고강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점검 시 선원교육 병행으로 선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 개정 협약규정, 출항정지 사례 제공 등 외국항 PSC 대응교육 실시 ○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점검 결과 중대결함 식별 시 선사에 출항 전 시정·개선 요구 - 동일 선박이 연 2회 이상 출항정지 시 해당 선사 사업장 특별 심사 실시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대상선박의 모니터링·특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활용, 입항 시 우선 점검대상 선정 - 2인 1조 점검반 구성, 선박 서류·증서의 최신화 및 관리 상태, 선체·기관·항해·소방설비 등 선박설비의 유지·보수 상태 중점점검 * 구멍정, 비상소화펌프 등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결함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정 이행여부 집중점검 * 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 관련 중대결함 식별 시 선급 추가심사 지시 - 선원 대상 PSC 정책 및 주요국 동향, 최근 PSC 지적 사례 등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실시 * 최근 제·개정된 협약의 숙지·이행 현황 점검 후 미흡 시 현장교육 실시 ○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항선사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주요 아시아 항만 기항지별(4개국 21개항만) 출항정지 사례 등의 정보제공(반기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당진항 기항하는 중점관리대상 선박 및 외국항 PSC 출항정지 선박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보안 후 출항을 원칙으로 하며, 중대결함선박은 결함사항 시정 완료 전까지 엄격 관리 - 항만국통제 경향 등 안전정보 제공 및 선원들에 대한 ISM 이행 등 교육 병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선박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선박 관할항만 입항시 특별점검 실시 - 선주, 선사를 통한 선박별 개별일정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대상 선박 관할 항만 외 입항시 특별점검 요청 ○ 중점관리선박 특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1조 점검반(선체1, 기관1) 구성으로 파트별 상세점검 시행 - 출항정지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선원교육 실시

나. 국내입항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각국은 자국 수역의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의 안전수준에 따른 차등적 PSC 점검 시행
- 국내 입항 외국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안전 등급에 따른 고위험선박, 편의치적국가 및 非IACS 등록선박, 결함 신고 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지속 시행

□ 추진계획

- NIR(New Inspection Regime)에 따른 선박안전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선박 위주의 점검 시행(연중)
- 고위험선(HRS), 편의치적선 및 非IACS 입급선박 위주의 점검 시행
- 다중이용선박(국제여객선, 크루즈선 등) 및 유조선, 케미컬선 등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점검 강화
- 국제기준 미달선박(under-performing ship)에 대한 통제 강화
-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서 국제기준 미달선박으로 선정한 선박은 매 입항 시마다 우선점검 실시로 퇴출 유도
- 아·태지역 주요국가와 항만국통제 공조 강화
-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력체(Tokyo-MOU) 위원회 및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인근 국가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개선 유도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C 실시대상 선박선정 방식(NIR)*에 따른 불량선박 점검강화 * 결함률, 출항정지율, 선사 안전관리 역량 등을 종합, 선박의 안전도 평가 ○ 항만국통제관 시설(선급, 해양수산연수원 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연중)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치적선 및 非IACS* 입급 선박 등 출항정지율이 높거나 출항정지 척수가 많은 국적**선박을 집중 점검 * IACS : 한국(KR), 미국(ABS), 영국(LR), 일본(NK), 노르웨이·독일(DNV-GL) 등 세계 12개 선급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선박안전 및 환경 관련 기술과 조직이 우수함 ** 캄보디아, 파나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벨리제, 태국 등 ○ 결함 신고 선박, 본부 지시 및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점검 강화 ○ 출항정지 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을 원칙으로 엄격 관리 ○ 항만국통제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국제협약 제·개정 사항 등 최신정보 습득 및 점검기법 공유 등을 위한 정기적 워크숍 참가(1회, 6월경) - (해외) 점검기술 향상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양자 합의에 따른 교환근무 및 MOU 주관 세미나·교육 참여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1조 점검을 원칙으로 강도 높은 PSC 실시 ○ 중대결함 지적은 ISM CODE 병행 적용 ○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에 경험 많은 검사관 우선 배치 ○ 유류, 케미컬, 가스 등 위험물운반선 및 NIR 방식에 의한 고위험선박(HRS : 선박안전관리지수 80이상) 우선 점검 ○ 필요시 항만국통제연구회 등 개최하여 유관검사기관(KR, KST)과 검사기법의 공유를 통한 항만국통제 강화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항만국통제 점검계획 수립(1월) ○ 원유·가스·석탄 등 대형 선박에 대한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 석유비축기지, 통영 가스공사, 삼천포·하동 화력발전소 ○ 특별점검대상 국적외항선 입항 시 분기별 점검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R*에 따른 고위험선박(HRS) 우선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R(New Inspection Regime) : PSC 실시대상선박을 선박+국가+선급평가를 근거로 선정하던 TF 방식에 선사의 안전관리역량평가를 추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고위험선(High Risk Ship), 표준위험선(Standard Risk Ship), 저위험선(Low Risk Ship) ** NIR에 따른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대상 선정을 원칙으로 함 ○ 중점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선박(HRS) 등 기준미달선의 국내 입항 억제 및 안전관리에 소홀한 편의치적국 선박 집중점검 - '화물고박분야'에 대한 집중점검(CIC*, 9~11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집중점검 캠페인) : 일정기간 동안 아·태 및 유럽지역 항만당국이 특정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제도 - 결함신고 선박, 유조선, 위험물 운반선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출항정지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을 원칙으로 엄격 관리 - 결함선박에 대한 확실한 개선 조치로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제고 - 한·러·일 국제여객선 특별안전점검 실시(반기 1회)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항만 입항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시행(목표 : 141척) ○ 신규점검대상 선정방식(NIR)의 점검주기*를 준수하되, 사전점검이력 및 결함양태를 반영한 점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주기 : High risk(2~4개월), Standard risk(5~8개월), Low risk(9~18개월) ** 항만국통제 시 당해 선박의 정보를 사전확인하여 출항정지 빈도가 높거나 취약이 예상되는 결함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점검대상 선정 시 고위험(High risk) 및 편의치적 외국적선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2인 1조' 방선 등 점검강화 ○ 기상현황파악 및 해도구비, 항해계획 수립여부 등 관할해역 운항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p>숙지도 필수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점검대상 국적외항선 입항 시 분기별 점검 및 관리 철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R 시행에 따라 고위험선에 대한 우선점검 실시 ○ 결함신고 선박에 대한 점검 강화로 위험 선박에 대한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TS, 도선사, 선원 및 항만이용자와 협력체제 활용 ○ 과년도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주제('15. 선원 휴식시간, '16. 밀폐 구역 진입)를 활용하여 점검 강화 ○ 국내·외 교육 참가로 항만국통제관 역량 강화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반) 2인1조 점검 및 점검시간 확대 등 점검 강도 강화 ○ (점검대상) 새로운 항만국통제 점검 대상선박 선정방식(NIR)에 따른 우선점검 대상선박 중 고위험선박(HRS) ○ 중점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위험 선박 등 기준미달선의 국내 입항 억제 - 연간 10회 이상 포항항 입항선박 점검 강화 - 미이행선박*(Under-Performing Ships) 최우선 점검 * 아·태지역에서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출항정지 된 선박 - 사고의 주요원인인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ISM분야* 중점점검 * 점검 시 시스템 숙지, 이행실태 및 비상대응훈련도 병행 실시 - 도선사, 선원 및 항만이용자 등의 결함신고 선박 최우선 점검 ○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정지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을 원칙으로 엄격 관리 - 결함선박에 대한 철저한 개선 조치로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제고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 불량지수를 감안 선별적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선박 점검목표 : 55척(목표대비 40%) ○ 출항정지 선박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정지 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 허용 ○ 2016년 아태지역 집중점검제도(CIC) 적극 수용·반영 ○ 국제협력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요청 시 외국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적극 협력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고위험선박(HRS) 등 기준미달선 입항 시 우선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선, 편의치적선 및 출항정지 척수가 많은 국적선박 등은 가능한 2인이상 점검관 승선하여 고강도 점검 실시 * 캄보디아, 파나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벨리제 및 태국 등 ** 출항정지 등 중대결함선박은 결함사항 시정 시까지 엄격관리 (시정·보완 후 출항을 원칙으로 하여 기준미달선이 국내 입항을 기피토록 유도) - 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으로 대형 물적피해가 예상되는 유조선*에 대해 사고취약시기별 집중점검 기간 설정·운영(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재화중량톤수(DWT) 10만톤 이상 ** 유류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해양오염설비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중점점검 ○ (역량제고) 항만국통제관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 그룹 운영(연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선사, 안전관리업체 등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사례 연구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치적선 등 출항정지율이 높거나 출항정지 척수가 많은 국적선박을 집중 점검 ○ 결함 신고 선박, 본부 지시 및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점검 강화 ○ 출항정지 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을 원칙으로 엄격 관리 ○ 항만국통제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참석 ○ 공정하고 엄중한 내실있는 점검체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선체, 기관 등 전공 고려한 2인 1조 점검체제 유지 - 업무 관련 선원, 업체 직원과 불필요한 만남, 교류 자제 - 불필요한 분쟁 억제를 위해 협약에 근거한 명확한 점검 실시

다.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성장과 항만당국, 지자체의 적극적 유치 정책으로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추진계획

- 크루즈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 추진(연중)
 - 주요 항만별 크루즈 안전운항 지원, 위해요소 개선 발굴, 입항에서 출항까지 집중관제 실시
- 크루즈선 중 고위험선에 대해서는 3개월 주기로 점검
 - 고위험선 이외 선박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과거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 크루즈선박에 대한 효율적 점검지침(안) 마련('16.8)
 - 크루즈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절차,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마련하여 아·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제출('16.10)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부실선박 및 편의치적선 위주 점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항만국 통제 대상선박 선정기준(NIR)에 따라 고위험군 ○ 선박은 시설 및 선원의 비상대응 능력 등 운항능력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치적선은 중위험군 선박이더라도 강화된 점검 실시 - 출항정지 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을 원칙 ○ 국제여객선(크루즈선)에 대한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발생이 큰 국제여객선 점검 강화 - 여객의 안전과 직결된 ISM, ISPS 분야와 소화설비 및 구명설비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정박시간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점검은 지양하고 과거 점검 이력을 기초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실시 ○ 크루즈선박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T/F 운영 - 주기적인 T/F 회의(연 1회)를 개최하여 크루즈선박 안전운항에 대한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

중점 3-8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15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의 정책 환류

□ 배경 및 필요성

- '15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15.3~12)로 도출된 해상교통환경 위해요인 저감방안에 대한 실효적 정책환류 필요

* ('15) 연안해역, 인천·여수광양·울산 → ('16) 대산·평택당진·부산 등

□ 추진계획

- (해상교통환경 개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로·항법정비, 위해요소 제거 등 선제적 개선·보완 추진

- 안전성평가의 주요 결과에 대한 소관별 시행방안 협의('16.3)

* 소관기관별(부서)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단기 조치가 곤란한 사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확보와 병행하여 개선·관리

-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지도 및 “유조선 안전항행 가이드라인*”을 선박운항자 등에 배포('16.1)

* 울산·여수광양·인천항의 유조선 추천항로·항법, 예선사용기준 등

나. 선박통항안전 위해요소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전 개발된 위험물취급항만은 해상교통 환경에 대한 정밀 안전성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 ('15) 연안해역, 인천·여수광양·울산 → ('16) 대산·평택당진·부산 등으로 확대

□ 추진계획

- 대산·평택당진·부산항 등 위험물취급항만의 교통환경을 안전진단 기법으로 대진단하여 적정성 평가 및 위해요인 식별
- 항만별 해상교통현황과 유조선 안전항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 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항로·항법 정비 등 정책환류

일반 3-1 선박검사 관리체계 강화(취약선박별 사고관리체계 구축)

주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업기관	-
------	----------	------	---

□ 추진현황

-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이력 선박의 체계적 관리 필요
-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행력에 문제가 있는 검사규정 검토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절차서」 및 「해양사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고선박 이력 관리(연중)
 - 선박검사 시 사고부위를 중점 점검 사항으로 관리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 자료로 활용
 - 임시검사 대상 선박 관리
- 수협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사고어선 관리체계 강화
 - 보험처리 되는 어선 기관개방 자체 정비 시 임시검사 수검토록 업무 협의 추진
- * 수협중앙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15.10.27.)
-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 개선 등 필요사항 발생 시 제도개선 추진
 - 공단 내·외부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 제출 시 검토 후 제도개선 협의 추진

일반 3-2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관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도입·시행을 통해 관제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추진계획

- 신규관제사 업무수행능력 확보 및 기존관제사의 지속적인 기량 유지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자격인증 교육 시행(연중)
 - ('16년도 계획) 신규관제사 기본교육(2회, 36명), 기존관제사 보수교육(2회, 30명), 선임관제사 교육(1회, 15명), 현장직무교육 강사교육(1회, 15명)
-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202호)」을 개정하여 선임관제사 교육, 관제사 보수교육, 현장직무교육 강사교육과정 신설 예정
- 연안 VTS 교육을 항만 VTS와 동일하게 4주→10주로 연장하고, VTS 센터별 최적화된 현장직무교육(OJT) 및 선박승선훈련 등 추진

해상교통관제사 양성 및 자질 향상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관제사 역량강화 교육	현장직무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관제사 기본교육(10주) ▪ 기존관제사 보수교육(2주) ▪ 선임관제사 교육(2주) ▪ 현장직무교육 강사 교육(1주) ▪ 시설관리자 유지보수 교육(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전중심 상황관제 훈련 ▪ VTS 학술세미나 개최 및 우수 관제사 선발 ▪ 해외선박승선 및 VTS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직무교육(OJT) 강화 ▪ 선박승선훈련·해사영어교육 ▪ 항공·철도 등 유사업무 기관 견학 및 벤치마킹

일반 3-4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사고예방 중심의 현장위주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및 내수면의 효율적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지자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방문(연중)
 - 내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개선 함으로써 내수면의 수상레저 활동기반 조성
-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 요소 진단 및 주기적 점검
 - (금지구역) 수상레저 활동수요 및 위험성 등 현장조사를 통한 금지 구역 지정관리 및 노후·훼손된 공고판 등 정비·점검
 - (안전점검) 성수기 도래 전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기구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시행
 - (안전교육)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교육 등으로 안전의식 고취

* 교육내용 :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 금지사항, 운항규칙 등
- 안전저해사범 단속 및 계도홍보 강화
 - 구명조끼 착용, 원거리 출항 신고, 출항 전 개인 안전점검(연료유, 배터리 점검 등) 확인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
 - 안전저해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조치(무리한 단속지양) 등 성수기 특별단속 실시

* 중점 단속행위 : 무면허조종, 무등록사업, 음주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일반 3-5 항만내 선박급유선 등의 자체 안전관리체제 확립

주관기관	해수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협업기관	-
------	--------------------	------	---

가. 항만내 선박급유선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지방해양수산청별 위험물 안전관리점검강화, 종사자 교육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등 항만내 위험물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체계 정립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위험물 운반선 지도·감독(수시) ○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위험물 하역현장 점검(수시) ○ 위험물 하역시설 특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해사위험물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훈련 시행 여부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하역현장 및 급유선 등 현장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격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및 소화기 비치, 유지 상태 등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실질 이행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본선 비치 및 선원 숙지 유무 확인 - 안전관리자 본선 하역현장 배치 여부 등 확인 ○ 마찰 또는 정전기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가능성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공구 사용, 대전 또는 마찰열 방지용 작업복 등 착용 여부 확인 ○ 질식사고·유독가스 흡입사고 방지대책 이행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펌프룸 등 밀폐구역 출입절차 안내문 부착 여부 등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유 해상낙하 방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판 상 배수구 마개 적정 보유 및 밀폐여부 등 - 분기관 및 방제자재 비치 여부 등 ○ 안전의식 고취 및 정보교환을 위한 간담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업체 및 급유업체 등과 연1회 이상 간담회 실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승인 기준 통일에 따른 일괄정비 - 위험물 터미널, 급유업체 안전관리자 안전지도 - 급유선 등 사고다발 안전관리 강화 (작업현장 확인 등)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급유선, 유조선, 부두 및 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및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방제 기자재 비치 여부 등 확인 - 해양시설 내 발생 폐유·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실태 - 유류 이송작업시 오염방지관리인 입회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 실시(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간담회를 통한 위험물 취급에 따른 관련규정의 교육 - 항만내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물반입신고 이행철저 당부 등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현장 상시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사고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일상적 점검 ○ 위험물 하역시설 특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해사위험물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훈련 시행 철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 승인(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조치, 교육 등 이행조건 부여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하역현장 및 급유선 등 현장 안전점검(수시 및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격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및 소화기 비치, 유지 상태 등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격 안전 관리자 선임·배치 및 안전계획 수립여부 등 확인 ○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현장점검(위험물 하역시설, 급유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배치 등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험물 취급관련 종사자 회의·간담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논의 - 항만 내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등 당부 ○ 위험물 취급시설 특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점검 실시 - 식별된 결함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 지시 등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환경변화 지속 반영 ○ (하역현장·시설점검) 취급 위험물 특성에 적합한 소화장비 비치, 위험표지·차단시설설치, 하역설비 정상 작동상태 등 현장 확인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점검(연2회), 일상점검(연중), 합동점검(필요 시), 기관장 특별 지도(연2회) ○ (급유선박) 급유선박 안전설비 비치실태 일제점검 실시(연 1회)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등록 시 자체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조치 ○ 항만내 선박급유 현장점검을 통해 해상유류오염사고 방지 및 위험물 취급시 취약부분 점검

나. 항만공사 시행사에 의한 해양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공사 현장별 안전점검자 선임과 대책반 운영으로 사고의 위험성 사전제거 및 해양사고 예방 필요

□ 추진계획

- 항만공사 시 예부선 등 공사에 투입되는 선박의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공사발주처·시행사·전문가와 공동으로 강구·시행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해상공사 현황 및 공사작업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2월) ○ 정유사 등 내항선 주요 화주 간담회 및 합동 선원교육 실시(6월)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현장 분기별 안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 시행중 상시 점검체제 유지 - 자연재해, 해양사고 등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지속적 검토 및 반영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 현장(해상장비 등) 분기별 안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 합동점검 주기적 실시 - 예부선 등 취약선박 점검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건설현장 해상장비 사용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현장 점검 시 병행점검 시행(연 2회) -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장비피항 계획의 적정성 등 집중 점검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장비 사용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중점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계획 : 정기점검과 병행시행(연 2회) - 중점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장비 사용 공정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점검 · 황천 시 해상장비 대피계획 수립여부 및 보고체계 점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또는 해상공정 등 착수 전 면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포항청	○ 반기별 1회 합동점검 시행(항만건설과, 선원해사안전과)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 계획 단계 시 사전에 해사안전 의견청취 및 반영 ○ 항만공사 시행중 상시 점검체제 유지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 지속 검토·반영 ○ 항만공사 계획 단계 시 사전에 해사안전 의견청취 및 반영 ○ 항만공사 시행 중 상시 점검체제 유지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 지속 검토·반영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작업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작업 선박 해상종사자 대상으로 울산항 항세, 구역(항로, 해역)별 위험요소 및 긴급 피항대책 등의 친숙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 최초 방문 또는 방문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선박종사자 위주 ** 항로 횡단이 빈번한 공사작업 예부선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항로 추천(특히, 온산항에서 미포항으로 이동 시) -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공사용 작업선에 대한 조기 피항 요청을 통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 승무정원 적정성 검증 및 승선원에 대한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에서의 선박 안전점검 실시(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해사안전과 합동점검 ○ 항만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선 현장 반입시 관리방안*, 작업선 사용 중 관리방안** 등의 안전대책 수립 여부 확인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별 승선 가능인원 파악, 비상연락망 구축 및 게시 여부 등 ** 작업 용도 및 목적 외 사용여부 수시 확인, 구난 장비의 설치 및 구비 여부, 피항 및 비상시 필수설비에 대한 작동여부 등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내습 전 대형 해양공사 투입 예부선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 관련 법 준수 여부, 공사 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확인 등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건설공사 계획 수립시 관련 종사자들의 해사안전 의견청취로 자체 안전계획수립 시 반영 등 해사안전 관리 강화 ○ 항만공사 추진 시 상시 점검체계 유지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위험요소 발굴 및 지속적인 검토·반영

일반 3-6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국민안전처	협업기관	-
------	------------	------	---

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수립·이행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이용 욕구 증대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추세*에 있어 대형인명사고 가능성 상존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405만명이 다중이용선박 이용(평균 3.3% 증가)

【 다중(多衆) 이용선박의 개념 정의】

- ▶ 선원 등을 제외한 13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승객 등으로 승선하는 선박(여객선, 유·도선, 통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사고('14.9.30.) 등으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최근 5년간 1,057건의 다중이용선박 사고가 발생(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는 537명, 세월호 304명 포함)

- 선종별 사업특성을 반영한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기 다른 안전관리 및 설비기준을 적용하므로 안전관리 기준 불균형 초래

* 해운법, 유·도선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 추진계획

- (대책수립) 다중이용선박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통일된 안전관리 기준의 마련
- 승선정원 산정방식 개선, 입·출항 신고제도 정착, 운항가능해역 및 영업시간 개선, 승무기준 강화 등 안전제도혁신

- 구명설비 탑재기준 강화, 선박자동식별장치 장착·작동 의무화, 구명조끼 상시 착용 확대 등 안전기준강화
- 양식장, 폐기물 등 항행 위해요소 제거, 선박안전점검 전문성 제고, 승객보험·보상 기준 현실화 등 운항환경개선
- 구명조끼 착용안내 및 시연조치, 승무원 제복 착용, 기초 안전문화 조성,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 안전문화확산
- (추진체계) “다중이용선박 안전제고 T/F”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
 - * 해양수산부 : 여객선(연안해운과), 낚시어선(수산자원정책과, 어선정책팀), 통선(항만운영과)
 - ** 국민안전처 : 유·도선(안전제도과, 해상안전과), 레저선박(수상레저과)
 - *** 자치단체 : 내수면 유·도선, 레저선박(시·도지사)
- 소관법령별 개정사항 식별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안전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16년 상반기)
- 추가대책마련, 범정부 합동점검 등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T/F를 통한 유기적 협조체계하에서 수행
- (법령정비) 대책을 통해 수립된 안전대책을 각각의 개별 사업법* 상의 안전관리 기준에 반영
 - * 해운법, 유·도선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서)에서 개정(안) 마련·추진
- (예산확보) 구명설비 연구개발(R&D),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안전문화 확산 등 주요 예산투입과제에 대한 '17년 예산반영 추진
 - * 소관부처별 여유예산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적극적 예산확보 추진 필요

나.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양선박 사고를 계기로 유·도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 유·도선의 법적 안전기준·의무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이 해상 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유·도선 기동점검으로 안전점검 패러다임 전환
 - 불시 기동점검으로 안전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단속
 - * 지방본부 분야별(항해·기관·통신·수사·오염) 전문가 인력풀 구성
 - 현장중심 매뉴얼 제작·배포로 점검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 * 선박 안전점검 서류·설비에 대해 사진자료를 첨부한 매뉴얼 작성
-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및 안전관리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실효적인 선택과 집종의 고강도 점검 실시(연중)

구 분	현행 점검		기동점검
시 기	본청 지시(매년 5~6회)		지방본부별 안전수요 감안
내 용	안전설비·장구 비치여부	⇒	법령상 안전의무 위반
대 상	해수면 모든 유도선(637척)		표본선별 점검
교 육	없음(단순 체크리스트)		점검매뉴얼·안전법령 사전교육

- 점검단 구성 : 지방해양안전본부별 점검단 운영(비상설)
 - 분야별(항해·기관·통신·수사) 구성하여 기동점검(10명 내외)
- 경미사항 현지시정,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속 원칙

다. 다중이용선박 안전검사 및 교육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다중이용선박 불법 개조와 관련한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낚시어선업종사자의 안전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매년 4시간)

*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

□ 추진계획

- 다중이용 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방지 및 검사 강화 활동 지속 시행
 - 매 정기적 검사 시 선체 사진촬영(전·후·좌·우), 종전검사 당시 사진과 대조 확인
-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운영계획(안) 수립
 -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과목별 강의자료 재구성 및 공유 활성화
- 다중이용선박 검사 및 합동안전점검 시 홍보물 배부 및 현장교육을 통한 선박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를 계기로 낚시어선의 사고저감 및 승객 안전제고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15.10.22)

□ 추진계획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른 중점과제 추진 >

- (제도 재편) 승객안전을 우선한 낚시어선 안전기준,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사고대응체계 개편 추진
 - 승객지원 등을 위한 선원수 상향(1→2명),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 단축(1~3→1년) 및 검사항목 추가 등의 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출항전 승객 대상 안전교육, 교육 대상 확대(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등 안전의무 강화를 통한 사고 대응력 제고
 - 관계기관(정부·지자체 등) 현장합동점검 정례화, 사고매뉴얼 정비 및 민간 주도의 낚시명예감시원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관리체계 개편
- * 낚시 관련단체 및 낚시터 인근 지역주민 등 50여명 위촉예정('16) → 낚시 안전관련 감시·지도·계몽활동을 수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
- (출입항 관리) 실효성 있는 출입항 관리를 위한 출입항 신고 절차 개선(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및 항·포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승선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객 본인이 직접 승선자명부를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신분을 확인토록 출입항신고 의무 강화
 - 항·포구 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관리항을 지정(10여개소)하여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안전 캠페인 집중 추진
- (안전문화) 국민의 낚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낚시안전수칙 제공 및 낚시체험교실 개최 등의 홍보·캠페인 추진

* 안전운항 및 낚시안전 수칙 포스터 제작·배포('16, 1만부)

** 낚시안전체험교실 운영(5백여명) 및 낚시전문매체와의 낚시안전협력 MOU체결 등

일반 3-8 경인아라뱃길 통항선박 관리 강화

주관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협업기관	-
------	---------	------	---

가. 경인아라뱃길 안전운항 전담조직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아라뱃길 운영 전담 조직 “아라뱃길본부 관리처(1처6팀)” 편성·운영
 - 아라뱃길 전체 사업구간의 선박통항 지원을 위한 전담팀(2개팀, 항만뱃길운영팀·설비운영팀) 편성 운영 중
 - * (항만운영·갑문운영) 부두, 주운수로 선박운항지원 및 서해·한강갑문 입출거 관리
- 요트통항관리 전담조직 워터웨이플러스 “마리나팀” 편성·운영
 - 마리나 운영, 요트 통항신고, 수상레저기구 관리 등 전담부서 구성·운영 중

□ 추진계획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관의 아라뱃길 안전운항 전담조직(해사안전TF)에 참여하여 통항선박 안전운항 지원 및 관련대책 마련
- 사업준공 이후 경인항 선석운영회의* 구성·운영으로 선석사용, 갑문 입출거 순위 조정 등 효율적인 선박 입출항 관리

* 경인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6조 “선석운영회의”

나. 아라뱃길 선박통항 안전 환경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경인항 항로는 급조류, 조수간만의 차 등의 영향으로 자연퇴적에 따른 안정적인 수심확보를 위한 수역유지관리(준설 등) 필요
- 아라뱃길은 다양한 선박(화물선, 여객유람선, 수상레저선박 등)이 운항하는 협수로로 선박간 교행, 추월에 따른 항로이탈, 위험구역 접근, 충돌위험 등으로부터 선박 사고예방 필요

□ 추진계획

- 수로구간 내 선박 사고(좌초·침몰·충돌 등)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선박운항 정보 공유
 - 선박안전 운항관련 실무회의(VTS), 해사안전 TF(인천청) 적극 참여
- 갑문입출거, 뱃길 수위확보 등 선박 상시운항 지원을 위한 물관리 종합상황실 및 갑문통제실 운영(24시간 상시근무)
- 뱃길 내 선박 통항 위해요소 해소로 안전한 선박운항 환경 조성
 - 수로 내 각종 부유쓰레기 수거로 운항선박의 안전항로 확보
 - 수로 결빙 시 뱃길 내 안전한 항로확보 및 선박 정상운항을 위해 다목적선박을 투입, 신속한 파빙작업 등 실시
 - 아라뱃길 결빙상황에 대비 자체 결빙대응 TF를 구성, 유기적인 운영으로 정상적인 선박운항 도모
- * 총 4개반(결빙조사반, 결빙완화반, 파빙작업반, 언론대응반), 해빙기까지 운영
- 현장 중심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아라뱃길 해양안전 공동캠페인 등 홍보 강화
 - 여름철, 행락철 등 성수기에 다중이용시설 내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 불법 낚시행위 근절 등 집중홍보 실시

- 아라뱃길 수상레저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이용자 (요트 선주 등) 대상 안전제도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훈련 실시
- 아라마리나항만규정에 따른 일간 및 월간 시설안전 정기점검 실시
-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요트선주 각종 안전운항 제도 및 안전 정보 제공
- 요·보트 유지보수 강습회를 개최하여 선박 침수, 유류누출, 고장 등 사고 미연 예방
- 안전 위해요소 사전제거 및 직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매 분기별 자체 안전훈련 실시(화재예방, 선박오염사고 대응 등)
-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아라마리나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지속관리
- 요트강습, 수상레저체험 시 유자격 강사 집중배치 및 안전장구 (구명조끼 등) 착용 의무화, 상시 구조정 배치
- 수상관련 행사시 철저한 안전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다. 효율적인 갑문 운영관리로 아라뱃길 이용선박 안전통항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내륙 인공수로인 경인아라뱃길 내·외측의 수위를 극복하고, 이용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 인천·김포터미널 갑문시설 운영 중
- (서해갑문) 길이 210m, 폭 28.5m, 갑실 2기, 슬라이딩 게이트
- (한강갑문) 길이 150m, 폭 22m, 갑실 1기, 마이터 게이트

□ 추진계획

- 갑문시설 이용자(선장, 도선사, 요트운항자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 설문 조사 및 간담회를 시행
- 갑문운영에 필요한 위기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갑문 운영능력 향상 및 선박사고 예방
 - 갑문 관제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분기별 직무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향상
 - 갑문통항 선박량 증가에 따른 갑문 주요시설물의 고장 등 위기 대응 훈련 실시
- 인천항 갑문운영 관리주체인 IPA와 기술세미나 개최 등 업무 공조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갑문운영방안 모색 및 검토
 - 인천항 갑문 운영 Know-How에 대해 벤치마킹 및 시설물 개선
- 갑문운영 고도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한 3D모델링 시행
 - 건설 및 분해조립 과장 3차원 현상을 구현하여 핵심 기술력관리
 - 3D Drawing 프로그램을 사용한 3D모델링 구현
 - 분해점검 Preview 및 분해점검절차서 수립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 항내 해상교통질서 유지 활동,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교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중점 4-1)

* 관리지침 수립('16.2), 특별단속('16.5, 11), 관공선 총 65척 운영

□ 해상교통 밀집해역에 대한 정밀관제* 제도 도입·운영을 통해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중점 4-1)

* 해상교통 폭주해역의 취약선박 집중 모니터링 및 안전정보 제공 등

□ 선박·항만운영분야 종사자 중심의 안전관리 협의회 운영(분기1회) 등을 통해 선박통항 위해요소를 발굴·개선하겠습니다.(중점 4-2)

* 항만수역안전관리협의회, 해상교통 통신원, 선박안전관리 간담회, 항만 안전관리모임, 종사자 워크숍 등 적극 활용

□ 입출항 항로, 정박지 내 저수심 구간 등에 대한 준설·정비로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중점 4-2)

* 부산항 신항 등 10개 항만에 대한 준설, 증심 공사 시행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시범망 구축 등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중점 4-5)

* '16년 예산/주요내용 : 85억원 / LTE-M 시범망 구축, 해사클라우드 기술 개발 등

□ 연안해역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통한 대축척 해도제작 지원 및 최신정보 제공으로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겠습니다.(중점 4-7)

* 나주군도 부근, 비인만 부근, 여수 동부 등 총 1,200km² 연안해역 정밀조사

중점 4-1 항만 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지방청, 지자체	협업기관	
------	---------------	------	--

가. 개항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무역항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위반행위 단속업무 수행
- 항만내 불법어로 행위, 위험물 취급 안전조치 위반 및 미신고·미허가 선박수리 등
- * 개항단속 실적(11개 지방청 및 지방관리무역항 관할 5개 지자체) : 1,985건('12) → 2,192건('13) → 4,294건('14)

□ 추진계획

- 항내 해상교통질서 유지, 취약분야 사고예방활동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중점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 여건 조성
- 무역항 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16년 2월)
 - 순찰선 등 관공선 운용을 통한 항만내 질서위반사범 계도·단속
 - * 관공선(총65척) : 순찰선(26척), 표지선(19척), 청항선(19척), 측량선(1척)
- 항만별 무역항질서 중점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연중)
 - 본부 지침에 따라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 및 분기별 실적 보고
 - * 운영일정 및 기간 : '16년 5월 및 11월(연간 2회, 각 2주간)

< 지방해양수산청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무역항질서 중점관리지침 수립 운영('15.1월) ○ 무역항질서 특별합동단속 및 남외항 정박선박 안전점검(연중) * 부산항 해양안전 취약분야 합동점검과 병행 추진(분기별)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질서 단속 강화 방안 마련 · 시행 * 항만순찰선 대체건조 등 효율적인 항만순찰선 관리 · 운영 * 불법 어로(어망·어구 설치) 행위 근절, 선박통항 위해요소 신속 제거, 항법 준수 유도 등 해상교통질서 유지 강화 * 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활동으로 어업인 대상 계도 · 홍보 실시 * 선박수리 신고(허가) 시 작업자 자격증 등 구비서류 확인 강화 등 불법 선박수리 근절 ○ 취약시간대 및 취약구역 순찰 시행 * 소형선박과 어선이 대거 입 · 출항하는 일출 · 일몰시나 종래 무역항 질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 실시 * 인천대교, 항로 등 해상교통 취약구역 및 불법 선박수리가 자주 발생하는 남항 지역 등 해사안전 취약구역 중점 단속 ○ 경인항 인근 어업인에 대한 교육 · 홍보 강화로 불법 어구 설치 등의 개항질서 교란행위 방지 ○ 상 · 하반기 및 연휴기간 중 특별개항단속 실시(야간병행)로 개항질서 유지 및 선박 안전운항 유도(연 2회 / 5월, 10월)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순찰선 순찰 강화 및 항법준수 유도 등으로 항내 안전한 해상 교통질서 유지 ○ 위험물하역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 활동 강화 ○ 어로행위, 미허가 선박수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개항단속 중점 추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중점 추진 과제 집중단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유선 등 사고다발 안전관리 강화(작업현장 확인 등) - 취급부주의로 인한 위험물 사고 예방(교육 · 점검 지속 추진) - 강력한 행정처벌로 불법어로 행위 근절(지자체 협조체계 유지) - 출입신고 미필 등 불법 운항선박 단속 강화(관제 계도 등)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법 및 지방청 관련 고시 준수 단속 철저(속도 제한 등) - 감수보존선박 등 안전관리 강화(필수선원 재선 유도) ○ 효율적인 개항질서 단속을 위한 계절별 테마단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봄), 정박지 안전관리(여름), 불법 선박수리(가을), 겨울철 위험물 안전관리(겨울) 등 -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지자체 등 협조 요청 ○ 선박 급유업체 자체안전관리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매뉴얼 작성 및 승인 기준 통일에 따른 일괄정비 - 위험물 터미널, 급유업체 안전관리자 안전지도 ○ 개항질서 단속률 향상을 위한 육상 순찰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터미널, 수협부두 등 육상 순찰 강화(월 3회) - 순찰선 정기 항만 순찰을 통한 사전 예방(일 1회)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선 운용을 통한 수상구역내 질서 위반사범 계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작업선, 위험물 하역(급유), 불법 선박수리 등 점검 실시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해상교통질서 유지 ○ 무역항질서 특별 단속기간 설정·운영(반기 1회, 연 2회 실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개항질서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 상·하반기 연 2회 - 해상 및 육상 수시 순찰 강화로 위법행위 사전 방지 - 대중매체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 홍보 실시 ○ 관공선(순찰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 및 취락지역 지속적 순찰(해양1호 이용) - 불법 조업어선 단속 및 부유물(위험요소)제거 등으로 항행 선박 안전도모 - 위험물 부두하역시설 점검 및 지도 단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질서 특별 단속기간 설정·운영(연 2회) ○ 불법 낚시어선 및 항내 무질서 행위 근절(순찰선 운영) ○ 작업허가 계도 및 현장 안전수칙 준수 확인 ○ 국민안전처, 지자체와 특별합동단속 실시(반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단속 홍보 및 단속방안 논의를 위한 사전회의 개최(5월, 11월)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및 육상 수시 순찰 강화로 위법행위 사전 방지 ○ 사고다발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항내 위험물하역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수시) ○ 불법어로·선박수리 등 항내 불법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5월, 11월)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실시 * 순찰선,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합동단속, 비상출동 지원 등 공조체계 유지 ** 개항질서 준수 취약계층(어민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포항수협, 어민협회) - 선박 수리허가 시 용접공의 적정자격 보유 및 허가기준 준수여부 확인 * 개항질서 단속 시 불법수리 단속 강화 및 허가 현장 확인 철저 ○ 출입신고 미필 등 불법 운항선박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선박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한 계도 및 단속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해상순찰시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장애물 제거 병행 * 필요시 해양환경관리공단 청항선 협조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질서 단속 및 계도를 통한 항내 안전한 항행환경 조성 ○ 불법어로 방지 등을 위한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연중) ○ 본부 지침 시달 시, 이를 참고하여 자체 시행계획 작성 예정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에 대한 개항단속 중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별 취약점 우선점검 등 순찰선 해상 순찰활동 강화 * 위험물운반선·노후선의 선박수리, 선박 통항로상 어구설치 및 급유선박 하역작업 점검 등 - 항만관제 미보고 및 입출항 신고 미필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계도 ○ 특별 개항단속기간 설정·운영(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일출·몰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개항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참여부서 : 항만물류과,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항 질서 위반사범 철저 단속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통항에 지장이 있는 어업시설은 적발 즉시 제거 - 소형선박과 어선이 대거 입·출항하는 일출·일몰시나 종래 개항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주말 등 취약시간대 순찰 실시 ○ 위험물 취급 시설·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 -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변화 지속 반영 * 본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시달 시 해당업체에 전파교육 실시 - (하역현장·시설점검) 취급 위험물 특성에 적합한 소화장비 비치, 위험표지·차단시설설치, 하역설비 정상 작동상태 등 현장 확인 강화 * 특별점검(연 2회), 일상점검(연중), 합동점검(필요 시), 기관장 특별지도(연 2회), 혼산 취급시설 및 위험물 컨 저장소 특별점검(연 1회) - (급유선박) 급유선박 안전설비 비치실태 일제점검 실시(연 1회) * 유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 필요한 소방설비, 안전장비, 방제자재, 통신장비 등의 하역안전설비 비치·관리 실태 점검 - (학습동아리) 위험물 하역안전에 관한 연구 지속(분기별) * 소방모의 훈련 등의 현장체험학습도 진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개항질서 단속을 통한 안전한 항만관리 추진 - 반복·고질적인 위반행태 대상 지속적인 단속체제 유지 -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 및 어민 등 대상 홍보 실시 ○ 불법 선박수리 등 항계내 선박통항 위해요소 적극 단속 - 위반 시 중대사고로 직결되는 불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지자체	<div data-bbox="239 1859 343 1960"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margin-right: 5px;">부산광역시</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선 운항을 통한 계류지별 선박계류 지도 ○ 행정선 운항을 통한 항만시설 사용 허가 독려 ○ 행정선 운항을 통한 선박수리 작업 현장 안전작업 계도 ○ 남항 내 안전속도 지도 등 운항질서 유지 및 해양사고 예방 </div> </div>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개항 질서 단속 계획 수립 및 시행(1월) ○ 「항만순찰선」 이용 수시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어업지도선과 병행 단속 실시 ○ 불법수리, 정박지 위반 등 해양사고 위험요소 제거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육상 및 해상 순찰활동 강화 ○ 사고다발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항내 위험물하역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수시) ○ 불법어로·선박수리 등 항내 불법행위 근절 ○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수심 및 기반 조사 후 안전대책수립 및 확인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장애물 제거 병행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한 항만시설운영세칙 전면 개정('16년 상) ○ 사고 집중 발생 시기별 집중단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무기(3~6월), 태풍내습기(7~10월), 해빙기(11~2월) - 불법어로행위 및 선박수리 단속, 선박통항위해요소 제거,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 질서 유지, 위험물 하역 현장 및 장기정박선박 안전관리 강화 ○ 4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급유선 등 사고다발 안전관리 강화(작업허가, 관제 철저) - 취급부주의로 인한 위험물 사고 예방(교육·점검 지속 추진) - 강력한 행정처벌로 불법어로 행위 근절(해경 협조) - 경남도 항만시설운영세칙 및 속력제한규정 준수 단속 철저 ○ 선박 급유업체 자체안전관리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매뉴얼 작성 및 승인 기준 통일에 따른 일괄 정비 - 위험물 터미널, 급유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 추진 ○ 무역항질서 효과 향상을 위한 육상 순찰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터미널, 수협부두 등 육상 순찰 강화(월 2회) - 정기 항만 순찰을 통한 사전 예방(주 2회 이상)

나. 해상교통 밀집해역에서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정밀 관제제도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취약시간대(00~04시) 기상상황 등 안전방송 실시로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통신원 활성화로 현장상황 및 위험요소 실시간 파악

* 항만에서 운영 중인 해상교통통신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연안 관제센터로 확대

□ 추진계획

- VTS 이용자 입장의 실시간 해상상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Feedback)과 교통문제 해결을 통해 맞춤형 관제 실시
- 정밀관제 시행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제석 및 인력확충 추진으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관제 강화



【 해상교통통신원 정보제공 절차 】

중점 4-2 선박 통항 위해요소 발굴 · 개선

주관기관	해수부, 지방청, 지자체, 항만공사	협업기관	-
------	------------------------	------	---

가. 선박교통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체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 내 신규 개발(부두·교량 증설 등) 사업 등으로 인해 해상교통안전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적 대응 필요

□ 추진계획

- 민·관 공동으로 항내 안전 위해요소 지속 발굴·개선
 - 항만별 선박·항만운영분야 안전책임자,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위해요인 발굴(반기별) 및 이행상태 점검
 - * 항만수역안전관리협의회, 해상교통 통신원, 선박안전관리 간담회, 항만안전관리 모임, 종사자 워크숍 등 적극 활용
-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현실부합성 주기적 점검·개선

<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 실무협의체 회의 정례화(반기별) ○ 실천본부 실무협의체,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장으로부터 부산항 안전관련 고질 민원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화조력발전소 방류수 영향저감시설 설치 : '16 상반기(제1차)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통항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해양안전협의체 활동 추진 ○ 선종별, 지역별 맞춤형 통항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해만내 대형선 통항위해요소 발굴 -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통항위해요소 발굴
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수역 안전관리 대책협의회」 운영 : 연중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지역 항만 이용자, 관련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위해요소를 해사안전시행계획에 반영 * 협의체 운영을 대체하여 항만수역 이용자 의견조회 및 해양안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 가능 ○ '16년도 위해요소 발굴·해소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북부두 포트 리뉴얼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동해항 북부두(1단계) 개축공사 중, ~'19년] - 동해, 묵호항 정박지 확장 및 추가지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동해항 3단계 개발 고려 '16.2~3월 중 지정추진] - 묵호항 여객선 입·출항시 어로행위 등 통제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기(6~10월) 항계내 어로행위 지도·단속 강화 * 긴급시 관제센터에서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통제협조 - 동해항 입·출항시 조명관련 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북방파제 등대조사등 개선 및 선박 입·출항시 부두조명등 점등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수역안전대책 전담반을 운영하여 위해요소 발굴, 개선을 추진하고 항만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전담반의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선박항행 위해요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선 촉구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요소 접수 및 개선완료 된 위해요소 지속적 관리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위해요소 식별 ○ 위해요소의 구체적 발굴과 평가를 위한 협의체 개최 ○ 위해요소 처리 추진: 해당 과(소) 및 지자체 등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위해요소 발굴 회의 개최(연 2회) : 선원해사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위해요소 해소여부 확인 - 신규 위해요소 지속 발굴·해소 ○ 위해요소 처리 추진 : 해당 각과(소) 및 지자체 ○ 도간 해상경계선 인정에 따른 기 지급된 어업보상금 환수 여부 및 피해율 재산정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59건 및 사천지역 어업보상금(77건) 지급(필요시 부족예산 확보)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개최 : 반기 1회(6월, 12월) - 회의 내용 : 발굴 위해요소 제안·심의, 개선 추진현황 파악 ○ 포항항 선박통항 위해요소 지속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안전 위해요소 개선사항 수렴 ○ 해양사고 방지협의회 정기적 개최 ○ '16년 해상교통안전 위해요소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추진토록 독려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울산항 해상교통환경 위해요소 개선 회의 개최(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계획·현황 파악을 위한 협의체 운영 * 필요 시 민·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T/F팀) 회원 추가 모집 - 울산항 해상교통환경 위해요소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추진에 따른 위해요소를 각 분야별(해상교통, 항만운영, 항만개발 등)로 발굴·해소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발굴된 위해요소(8건)의 개선 추진실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 선박통항 위해요소(4건), 동북아오일허브 위해요소(4건) ○ 울산항 위해요소 개선T/F팀 운영을 통한 개선사항 지속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발굴 및 추진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병행 추진(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산 도선점과 장안·평택 도선점은 대산항과 평택항 입·출항 선박의 해상교통 병목구간으로 해상교통 위험이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산 도선점을 이동하여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 대산항·평택항 도선사회 등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및 계획수립 및 시행
지 자 체	<p>충청 남도</p> <p>【 보령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봉산항 선착장 미정비구간 보강 추진 ○ 학성항 접안시설 파손구간 보강 추진
	<p>전라 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3 ~ 4월 :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 병행 수립 ○ '16. 4 ~ 12월 : 선박항로 지장물 제거 및 지도 단속 ○ '16. 4 ~ 12월 : 선박항로 양식장 및 각망 설치자 지도 교육
	<p>경상 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구항 항만시설 보수 및 증대에 따른 정박지 확장 검토 ○ 지방관리항 항만수역 내 장기 정박 금지
	<p>경상 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점검을 통한 정박지 및 정박선박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제한속력(10노트 이하) 준수 지도 및 어로행위 단속 - 정박선박 야간식별등(정박 등) 점등 여부 확인 등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 항만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 불황 등 장기계류선박 증가 및 항만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 * 봉래동물양장, 동삼·청학안벽, 4·5 물양장 / '15(6회) → '16(12회) * 계류현황, 출입항로, 장기계류·방치선박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소방선 통항로 확보 등
공 공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 / 용역금액 : '15. 2 ~ '16. 12 / 400백만원 - 정밀점검(양곡부두 외 9개 시설), 수중조사 및 방충재 파손현황 조사,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16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15. 3 ~ '16. 12 / 2,000백만원 - 공사위치 : 울산항 2~8부두, 자동차부두, 염포부두 등 13개소 - 공사내용 : 항만시설물 단면복구 및 단면보강 1식, 블록파손 및 이격보수 1식, 기초세굴 및 피복석 유실보수 1식, 기타공사 1식 ○ 내진성능보강공사(1차분) : '15. 6 ~ '1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실시: 울산항 3부두, 울산항 5부두, 울산항 6부두 ○ 내진성능보강공사(2차분) : '16. 1 ~ '1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 3부두, 온산항 1부두, 장생포부두, 달포부두 ○ 울산항 항만조명 LED교체공사 ○ 기타 유지보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충재, 차막이, 모서리 보호공, 야적장 및 도로파손 보수 등
여수 광양 항만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련 공사 의견 제출 ○ 해역이용협의 관련 공사 의견 제출 ○ 유관기관(여수청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유지

나. 장기 정박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감수보존 등 장기 정박선박은 승무원 부족, 기상악화 대비 미흡 및 유지보수 미비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큰 실정

□ 추진계획

- 장기 정박선박의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지방청·지자체의 순찰선 활용 및 관제실과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상악화 대비 상태, 항해당직체제 유지, 닻 끌림 상태 등 점검
-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관계기관 회의 반기별 개최)
- 통항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을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지자체 관할해역 내 점·사용 허가 시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통해 통항 위험요소의 사전 검토 및 정박선박의 안전조치이행 유도

<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지자체의 순찰선 활용 및 관제실과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상악화 대비 상태, 항해당직체제 유지, 닻 끌림 상태 등 점검 ○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관계기관 회의 반기별 개최) * 기상악화 대비 필수 승선원, 정박당직 등 안전대책 수립 지시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침몰선박의 인양업체인 세주기업의 재정악화 및 고철비용 하락으로 인양작업이 지연될 경우 2016년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대집행 절차에 따라 인양비 우선 지급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류 선박 및 부실선박에 대한 실시간보고를 통하여 수역시설 위해요소를 사전제거하고 이를 통해 통항안정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선신고 수리 시 해상안전조치 이행 유도(신고 수리처) ○ 정박지내 장기 정박 선박의 정박준수수칙 내용 확인(모든 해당처) ○ 연안 수역 장기 정박 선박에 안전정보 제공(해상교통관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 연안 투묘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 ○ 계선 선박(특히 장기정박 선박 및 감수 보존 선박)에 대한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처(항만물류과, 해양수산환경과, 각 해양수산사무소, 해상교통관제센터, YGPA)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구축 운영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수시동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정박선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협의체 회의와 병행하여 실시 ○ 불개항장기항허가 또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시 조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승무정원 준수,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항해당직체제 유지 ○ 항만 내 정박선박 비상연락망 작성 ○ 무단 정박 또는 허가기준 위반선박 단속 요청(연중)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안전 조치* 이행 조건으로 연해수역 정박 허가(항계 내 정박 장소가 없는 경우로 한정) *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제5호 관련 별표 4. 정박 선박의 준수수칙 적용 ○ 허가 시 해상안전 조치 준수 약속서 징구 및 교육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Port-MIS 등을 통해 장기 정박선박 모니터링 강화 ○ 장기 정박선박 관리상태(근무자 재선여부, 비상연락망 등)를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철저한 대비 요청 ○ 선박통항이 많은 수역에 정박할 경우 이동 명령 등 조치 ○ 정박선박 지속 증가 등 필요시 관련기관과 대책회의 개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상정보 사전 확인 ○ 기상악화 예상 시, 정박선박 재배치 등 사전 안전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정박선박은 항만물류과 및 해양수산환경과(개항질서)와 협조 체제 유지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항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관할 해역 이용허가 시 통항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통한 해상안전조치 이행 유도 ○ 장기재박선박의 침수·오염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박선박 중 안전에 취약한 선박을 대상으로 직접 승선하여 선원 재선 및 기관사용 가능여부 등 확인 - 기상악화 대비 피항계획 등 자체 안전관리방안 마련·비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태풍내습 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여부 현장점검 강화 ○ 감수보존선박 처분접수 시 계선신고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대기 가능 장소 지정, 필수선원 승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조건으로 계선신고 수리

다.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한 투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항만의 입출항 항로, 정박지 내 저수심 구간 존재로 대형 선박 입출항 시 우회운항 등 사고 위험성 상존

□ 추진계획

- 항만의 선박 진입 항로와 정박지에 대한 준설작업 추진
 -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항로, 접안시설 인근 해역 등 선박통항 해역에 대한 준설 적기 시행
 - 계획수심 미달구역 발생 우려 시 항로의 적정수심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 준설구간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항만 이용자, 전문가 등과의 협의하여 준설 우선 대상구역 설정

< 지방해양수산청·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 해양 수산 청	부산청	○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준설 공사 추진(1,163만 ^m 등 / '14.12. ~ '16.12.) ○ 부산항 신항 항로확장 준설 설계 추진('15. 4. ~ '16. 2.)
	인천청	○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 추진 (1,607만 ^m /'16. 1~'18. 4)
	여수청	○ 「광양항 제3항로 준설공사」 추진 - 사업기간 / 사업비 : '15년~'16년 / 약 167억원 * 사업내용 : 준설 80만 ^m (항로폭 480m, 계획수심 22m)
	마산청	○ 가포 B 준설토 투기장 호안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 제2항로 준설토 투기를 위하여 기존 가포 B지역 준설토 투기장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포항청	○ 포항신항 2부두 준설공사 예산 요구
군산청	○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 : 항로준설 약 5백만 ^{m³} (289억원, 10개월) ○ 유지준설 : 유지준설 약 40만 ^{m³} (65억원, 8개월) ○ 준설작업 착수 전 관련 업체에 사업 추진방법 및 기간 등을 사전 협의하여 진행 - 준설 시행사(작업선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등
목포청	○ 목포신항 유지준설공사 시행('15. 11. ~ '16. 4. / 6개월) - 준설면적: 22만 ^{m²} / 준설량: 1,020천 ^{m³}
평택청	○ 계획수심 미달구역 발생 시 항로의 적정수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가능하도록 '16년도 예산 확보
울산청	○ '16년 사업추진, 준공을 위한 사업비(6,100백만원) 지급 ○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대산청	○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계속) - 총 사업 규모(준설 362만 ^{m³}), 사업비(861억원), 기간('10.12.~'16.5.) * 사설 수역시설임에 따라 사용자가 추진(비관리청 항만공사, 비귀속)
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 내 유지준설이 가장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인천항 이용자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사의 재정여건 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대상 구역 순으로 유지준설 시행
	울산항만공사 ○ 공사시행 : '16. 5. ~ '16. 12. - 공사위치 : 울산본항 1~6부두 및 자동차부두 일원 - 공사량 : 유지준설 약 53만 ^{m³}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 등 적기 제거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지방청	협업기관	
------	---------------	------	--

가. 불법어로 합동단속 및 계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항만수역 내 불법 어구설치 및 어로행위로 입·출항 대형선박과 어선 간 충돌 위험성 상존 등 안전통항에 위협요소로 작용

□ 추진계획

-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어로 행위 단속 및 어업인에 대한 계도활동 지속 시행
- 관공선 등을 활용한 집중단속 실시 및 새벽·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순찰강화로 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

< '16년도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 불법 어로행위 특별 합동단속(4, 10월 및 필요시) -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항로상 선박통항 장애물 수거 등 - 어촌계 방문 및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인천청	○ 개항질서 특별 단속 기간 중(상·하반기) 불법어로행위 합동단속 실시 -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인천해경과 협업 실시 ○ 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활동으로 어업인 대상 계도·홍보 실시 ○ 인천어업정보통신국과의 협의채널 구축 및 불법어로차단 방안 모색
	여수청	○ 선박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로 단속 및 지도 - 항계부근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장·어구 신속히 제거 - 불법 낚시어선 또는 다이버를 고용한 불법어로 단속·지도 ○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협의채널 구축 - 특정해역 및 항계부근에서의 불법어로 예방을 위한 협의채널 구성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박 항로에 대한 불법어로행위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해만 항로는 항계밖에 다수 지정되어 있어, 순찰선의 즉각적인 대응 불가 등 단속 취약 지역임 - 항계박 항로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로 불법 어구 등 위해 요소 제거 및 계도 효과 배양(월 1회) * 필요시 장기정박선 단속 등과 병행하여 추진(창원해경, 경남도와 협의) ○ 유관기관 합동 불법 어로행위 단속시스템(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과 불법 어로 행위 단속 시스템을 구축(상호협력 체결 등)하여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 근절 추진 - 긴밀한 상호협력체제 유지로 기존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 정보 공유 ○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추진 * 필요에 따라 개항질서 단속과 병행 추진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선 순찰 : 동해·묵호항(1일 1회) / 삼척, 옥계항(유관기관 요청 시) ○ 취약시간대(새벽 및 공휴일) 적극적인 단속 실시 ○ 수협 등 관련 업·단체를 통한 항계내 불법 어로행위 금지사항에 대한 법질서 준수 계도·홍보 지속 실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 합동단속 및 계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 상·하반기 연 2회 - 불법조업 집중단속, 어구 실명제 이행여부 확인 및 대어민 계도 - 지자체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및 불법어로 사전 차단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순찰선 운영) 강화 및 불법 어구 제거 ○ 유관기관 합동 단속·협조체제 구축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개항질서 확립 추진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합동단속, 비상출동 지원 등 공조체계 유지(상반기 : 5월중, 하반기 : 11월중) ○ 순찰선 해상순찰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홍보 및 예방순찰, 고질적인 불법어구 단호한 단속 및 제거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질서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근절을 도모하고 불법 어구설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 관할지역 홍보·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인 항내 불법어구 설치 등에 대한 단속 및 적기 제거를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해경함정, 울산시 어업지도선 합동단속 및 비상출동 지원 등 공조체제 유지 ○ 불법어로 방지 등 개항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 항만순찰선의 일일 항내순찰 강화로 어구·어망 제거 및 안내방송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개항질서 특별단속기간 운영(2회/상·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선 및 해경정 합동단속, 비상출동 체제 유지 - 해양경비안전서, 지자체 어선 담당자와 협의체제 상시 유지 ○ 불법어로 활동 단속 및 계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 집중단속, 어구 실명제 이행여부 확인 및 대어민 계도 - 지방수산청과 지자체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및 불법어로 사전 차단 ○ 청항선의 운항해역과 기간을 지속적 확대(폐그물 방치예방 홍보)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실시 : '16. 1. ~ 12 ○ 어업지도선 배치 및 안전조업 지도 : '16. 1. ~ 12 ○ '16년 불법어업 단속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16. 3. ○ '16년 어선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통보 : '16. 4. ○ 상반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현지대책반 운영 : '16. 4. ~ 7. ○ 산란기 불법어업 지도·단속 : '16. 5. ○ 하반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현지대책반 운영 : '16. 9. ~ 10. ○ 성육기 불법어업 지도·단속 : '16. 10.
지자체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질서 확립 추진 계획에 따라 구·군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해상 및 육상 병행 단속실시 : 어업지도선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지도선 합동 단속, 비상 출동시 해경함정 지원 등 공조유지 ○ 새벽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중점 단속 실시 ○ 수산자원관리선 및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자율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발견시 신고 또는 수시 계도·홍보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구는 반드시 철거한다는 정부의 의지와 지속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한 불법어구 강제집행 추진 ○ 사전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 이행 불법어구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p>【 보령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구 철거 등 지속적인 불법어업단속 실시 ○ 주요 항포구 및 공유수면 방치선박 제거 <hr/> <p>【 당진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지도·단속 실시(연중) ○ 상·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및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 및 계도 <hr/> <p>【 서산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지도·단속 실시(연중) ○ 상·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및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시·군 자체 단속 및 군산해경, 서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 실시(어업지도선 4척, 전라북도·군산·고창·부안) - 무허가 어업 및 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 - 조업금지구역, 조업기간 위반 행위 -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 범칙어획물을 소지 및 판매하는 행위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단속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목표 : 180건 - 단속방법 : 도·시군 합동단속 매월 10일 이상 실시 - 산란기와 성육기 전국 일제단속 참여 : 5, 10월(60일간) - 업종별·어종별·시기별로 특성에 맞는 테마단속 추진 - 해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단속 - 우범해역은 해상과 연계한 육상단속과 휴일, 야간 단속 ○ 도 주관 합동단속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해역) 현안 불법어업에 대한 대처 철저 - 특정지역 또는 해역에 국한된 불법어업이나 업종간 갈등 및 대립 등은 종합대책을 강구 특별단속 등 적극 대처 - 범칙어획물 유통, 불법어구 적재 등 육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상습·고의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매월 합동단속시 우범해역 중심 순회 및 지도·단속 - 필요시 유관기관(해양수산부, 해경, 지자체 등) 합동단속 - 불법조업을 못하도록 타 시·도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에 난립한 정치성 불법어업 정비 및 어구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해역별로 불법어업자 색출 및 시설물 철거 병행 - 불법시설물이 완전 정비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실시 - 불법시설물 자율철거 유도 - 무주물 등은 강제 철거(시군에서 담당검사 사전지휘 조치) ○ 새우조망 어업질서 확립 및 변형 조업행위 근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조업구역·금지기간 및 막대길이 변형조업 등 불법 조업 집중단속 ⇒ 매월 1회 이상 합동 및 순회단속 - 발생초기 강력한 대처로 불법어업 확산을 방지 - 새우조망 어업인 교육 및 홍보강화로 불법조업 사전 예방 ○ 월별 불법어업 합동단속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회(2주) 합동단속 실시(5월·10월 60일간 실시)
경상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설명회, 워크숍시 관계자 및 어업인 교육(연중) ○ 매월 1일 「어선 안전의날」 주요 항·포구에서 어선기관 등 주요설비 자체점검 생활 정착 및 불법어업지도 홍보 실시 ○ 수산관련 협회 안전의식 고취 교육 실시(연중) ○ 성어기 주요 어장 출어선 해양사고 안전홍보 등 ○ 어업지도선을 통한 해상 안전의식 고취 해상 캠페인 실시
지 자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지도·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육상단속 강화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장, 횃집, 어시장, 대형마트 판매, 수산물 포획금지 기간, 체장, 체중 위반행위 중점 단속 ○ 정치성구획어업 불법행위 일제정비 : 4~5월,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류 예정해역 불법어구 자율정비 유도 및 강제 철거 -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의 치어 채포행위 강력단속 병행 ○ 산란·성육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 5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등 산란기 정부주관 합동단속 실시, 언론매체 홍보 등 - 종묘방류, 수산자원 보호수면 등 어업지도선 집중 배치 ○ 낚시어선 안점점검 및 지도 : 5.1~5.31(1개월), 시·군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의 설비기준 등 준수사항 중점 점검 <p style="text-align: center;">【 사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근절지도 및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반기별) ○ 어업인 교육을 통한 불법어로 행위 근절 유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p>- 어업인 교육 실시 : '16. 1 ~ 12</p> <hr/> <p>【 거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교육 및 지도 홍보('16. 10월, 5일간, 전어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장소 선정 후 집합교육 및 불법어업 추방결의 대회 ○ 불법어업 실태조사('16. 2. ~ 12. / 우심 해역, 항포구, 위판장 등 조사 및 자진 철거 지도) ○ 불법어업지도·단속('16. 1월부터 연중 / 자체 및 도 합동단속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지도 단속반 편성 : 반장(어업자원담당), 반원(7명) <hr/> <p>【 고성군 /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불법어로행위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행위 단속 취약 시간대에 단속강화 - 주기적인 순찰로 불법어로행위 및 해양사고 사전 예방 ○ 수협, 해경, 어업관리단과 협조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활동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어업지도선 239호 신규건조로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 철저히 추진 <hr/> <p>【 창원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지도·홍보를 위한 어업인 교육(분기별·수협별) ○ 불법어구 적재, 폐그물 투기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육상·해상) <hr/> <p>【 통영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어업 중점 단속(무허가 통발,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등) ○ 불법 정치성구획어업 특별 지도·단속(불법 어구 강제 철거 등) ○ 수산종묘 방류해역 중점 관리(순찰강화, 어로행위 단속) ○ 체장미달 어린고기 및 금어기 수산동식물 유통·판매행위 육·해상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불법어업 단속 실시(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및 기상악화 시 육상단속 병행 ○ 불법어업 단속과 병행하여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나. 항행장애물 제거 수립 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 통항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으로부터 유실(遺失)되거나 불법 투기된 항해장애물의 적기 제거 필요

□ 추진계획

- 순찰선 운항, 관제실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항행장애물 조기 발견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신속 제거 추진
-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항행장애물 실태조사 및 제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 역량 강화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운항, 관제실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항행장애물 조기 발견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신속 제거 추진 - 불법 항행 장애물의 설치 억제를 위한 사전 순찰 강화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항행장애물 실태조사 및 제거 ○ 도선사, 해경, 항만 의무선, 청경 등과 정보 공유체제 운영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단속 활동 중 식별된 항행장애물의 적기 제거(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1호(신항), 인천902호(남·북항, 연안항), 해양3호(인천 내항) ○ 규모가 큰 항행장애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청항선과 합동 제거 실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인천항만공사 협조·지원 요청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원발생 및 비상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장애물 제거 계획 수립 : '16. 1분기 - 관할수역 내 부유물이나 침물선박 발생 시 본부에서 즉시 예산배정 예정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 장애물 제거 계획 수립 - 불법 항행 장애물 실태조사 및 제거를 위한 수시 계획 수립 - '바닷가 대청소의 날'로 지정·운영 : 매월 넷째주 수요일 -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참여 업·단체와 함께 바닷가 청소 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 및 항계 내 장애물 제거 및 침몰물 제거(필요시 등부표 설치) ○ 무단 정박선박 및 항내 공사작업 관리로 안전한 통항로 확보 - 항로 인근 무단정박선박 과태료 부과 및 이동 명령 - 작업선 공사작업 시 주변 선박 통항상태 점검 - 통항로 설치 어구 등 장애물 수시 수거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항행 장애물 설치 억제를 위한 사전 순찰 강화 ○ 장애물 파악 후 합리적인 제거계획 수립 - 장애물 종류, 소유권, 위험도, 존재 원인, 제거 방안 등 검토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항행 장애물 실태 조사 및 제거를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 ○ 도선사, 해경, 항만 역무선, 청경 등과 정보 공유체제 운영 ○ 불법 항행 장애물 설치 억제를 위한 사전 순찰항해 강화 ○ 항행 장애물 현황 접수 시 안내방송(VTS) 및 긴급 처리계획 수립

다. 로프·폐기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 추진기의 폐로프 감김 사고 등 바다 쓰레기로 인한 운항저해 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부유·침적 쓰레기의 적기 제거 필요

□ 추진계획

- 항만과 연근해에 있는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을 확대('15년 34억→'16년 53억)하고, 다국적 유입 쓰레기의 신속 처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연안대청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 해양 정화 추진
 - 연근해 주요 해역·항만의 침적쓰레기 수거로 선박운항 안전 도모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참여 강화
 -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16.9), 해양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진행 등을 통한 해양쓰레기 인식 증진

<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 해양 수산 청	부산청	○ 북항, 신항, 감천항 등 주요 항구별 청항선 4척 고정 배치, 상시 순찰 및 해양 부유쓰레기 발생시 즉시 제거
	인천청	○ 효율적인 청항선(3척) 운영을 통해 로프, 폐그물 등 적기 제거 * 사업구역 : 인천항 항계내의 해상구역 및 경인항 ○ 항만과 연안구역의 개별 정화사업을 시행하여 각종 해양쓰레기 제거 -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실시 ○ 인천항 육상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천항만공사, 항계 밖의 해양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토록 조치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사랑 실천의 날 실시(매월 1회) 및 청항선 전담 배치 ○ 각종 해양정화 행사시 적극 지원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식 해양쓰레기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공단 위탁 청방선을 활용하여 항만내 부유식 해양쓰레기 수거(청방선 시기별 탄력적 운영) - 청방선 운항 불가 구역(마산 구항, 신마산어촌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육상 순찰 및 해양쓰레기 수거(시기별 순찰 주기 탄력 운영) - 우기철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유지 * 시민네트워크, 합포만살리기, 바다살리기 등 해양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 운항을 통하여 동해·묵호항, 삼척항, 옥계항 청항 작업 실시 - 원목, 폐타이어, 로프 등 해상부유물 수거 ○ 충분한 예산 배정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적극적인 행정단속·지도로 관행적인 위반행위 근절 ○ 어민 대상 질서유지 및 환경보호 의식 확립 -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폐어구, 폐선박 무단 방치 근절 교육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프, 폐그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 ‘항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수시 바닷가 쓰레기 청소 실시 ○ 청항선의 운항해역과 기간을 지속적 확대, 폐그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와 적극 협조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 1연안(45개 업·단체) 가꾸기 운동 활성화 : 월 1회 ○ 해안가 쓰레기 및 항만내 발생 폐기물 수거처리 : 수시 ○ 민·관·군 합동 해양정화 활동 : 년 1회 ○ 항계내 수중침적 폐기물 인양 : 연 4회 ○ 방파제 등 항만친수시설 폐기물 수거 처리 : 주 4회 ○ 청항선(경북939호)에 의한 해양부유폐기물 수거 : 115회 * 청항선 운영 협약(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관리공단)체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에 위탁 처리 운영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량/예산액 : 100톤/약 25,000천원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시행('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생포항내 면적(566천㎡)의 70.8%(401천㎡) 오염되어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필요 : 2년차 오염퇴적물 수거사업 시행(63억) ○ 해양환경정화 활동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지역 업·단체(55개사)의 자율적 해안 정화활동 지원을 위한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추진(수시)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방파제, 용연, 처용리 일원)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민·관 합동 해안정화 활동 실시(분기 1회) - 바다 속 수중폐기물 정화활동 실시(연중, 유관기관 합동)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요청 시) - 폐기물의 위치·분포·종류·양 등에 따라 폐기물 전문수거업체 투입, 폐기물 수거·처리장비 및 수거봉투 등 지원
	<p>대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추진(4회/약 32톤) - 바다사랑 관심 제고를 위해 타과의 직원 참여 독려 - 항만 내 배후부지 및 호안 등 수상구역 내 쓰레기 수거·처리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 운항을 통한 로프·폐그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홍보 ○ 청항선 운항을 통한 항내 해상부유 쓰레기 적기 제거 ○ 청항선 운항을 통한 항내 유류오염사고 예방 홍보·지도 ○ 관리부실 선박 등 항내 미관 저해 선박 이동조치 및 해양 오염 미연에 방지
지자체	<p>울산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장애물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게 제거 명령 지시 등 - 어항시설 불법 점용 및 장기 방치선박 : 신속처리(사법 및 행정조치) ○ 해양폐기물 정화 지속 추진 - 분야별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 추진 : 연중(구·군별) - 민·관 합동 해안정화 활동 추진 : 스킨스쿠버 동호회 협조 - 어항 내 청항 작업요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협조
	<p>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80톤(안산 40, 화성 40) ○ 사업비 : 80백만 원(국비 40, 도비 6, 시비34) - 안산시 : 40백만 원(국비 20, 도비 3, 시비 17) - 화성시 : 40백만 원(국비 20, 도비 3, 시비 17)
	<p>충청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에 위탁하여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한 해양폐기물 구매 ○ 항포구 내 해양폐기물을 적재할 선상 집하장 설치 ○ 항포구와 도서지역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어업인 등 대상 사전예방 교육 및 지역 마을 중심 자율 수거 ○ 해양환경도우미, 이동식 집하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 <p>【 보령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에 위탁하여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구매 추진 ○ 해양 침체어망 및 폐어앵커자재 수거사업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포구와 도서지역에 방치된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p>【 당진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포구 내 해양폐기물을 적재할 선상 집하장 설치 ○ 항포구와 도서지역에 방치된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p>【 서산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포구 내 해양폐기물을 적재할 선상 집하장 설치 ○ 항포구와 도서지역에 방치된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900톤(군산 450, 부안 450) - 사업비 : 600백만원 (국비 300, 시군비 300) ○ 사업내용 : 허가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폐어구, 로프, 비닐 등)수매 위탁처리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가 쓰레기 및 항만 내 발생 폐기물 수거처리 : 수시 ○ 민·관·군 합동 해양 정화 활동 : 년 1회 ○ 항계내 수중침적 폐기물 인양 : 반기 1회 ○ 방파제 등 항만친수시설 폐기물 공공근로 실시 : 월 1회 ○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수거사업 : 150회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및 연안 해역 보전 관리(4,43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 정화 사업,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p>【 사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 125백만원/70톤 ○ '1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80백만원/30톤 ○ '16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 : 100백만원/72톤 ○ '16년 어업폐기물처리사업 : 42백만원/100톤 <p>【 거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식 해양쓰레기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정화·정비업체 위탁 정화선 활용 항내 부유 쓰레기 수거 - 우기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유지 ○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면, 장목면 내 일원 연근해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 사등면 가조도 일원 바닷가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자발적 수거유도 및 해양환경보전 인식 제고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p>【 고성군 /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된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포구 등 방치된 폐어망, 어구 등 폐기물전문 처리업체 전량 위탁처리 - 연안 유·무인도서 등 우심지역 어업지도선 이용 주기적인 예찰 및 해양쓰레기 수거(시기별 예찰 주기 탄력 운영) - 장마, 태풍 발생 대비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 체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공동체, 수산경영인연합회, 어촌계, 해양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 도서·벽지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위탁(군수협)처리 - '1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대상 지역 수요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hr/> <p>【 남해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초 해수부 및 경남도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남해군에서 사업장소를 선정 후 사업 시행함으로써 어선 및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도모 <hr/> <p>【 창원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어업인 교육(분기별, 수협별 시행) ○ 폐그물, 페로프 등 해양쓰레기 상시 제거 <hr/> <p>【 통영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체결 및 시행('16. 2.~3.) ○ 해양집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설계, 시행('16. 3~) ○ 강구안 해양쓰레기 폐기물 위탁 처리 : 375톤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프·폐기물 등 인양쓰레기 수매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약 180톤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100) ○ 해양·해안 체계적 정화 관리시스템 구축(~'18년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20,034백만원(국비 9,780, 도비 10,254) ○ 「해양환경미화원」 상시 운영 ○ 해양쓰레기 관리 인력확보 및 해양쓰레기 처리장(매립장)·중간 집하장 등 시설 확충

라. 침몰선·방치폐선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침몰·방치된 선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선박 통항위해요소 제거 및 해양오염 예방 필요

□ 추진계획

- 침몰선박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위해도 평가 및 저감대책 시행을 위해 침몰선박 관리 시스템 지속 운영
 - 지방해양수산청, 국민안전처 등이 보유한 침몰선박정보 종합관리
- 해역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에서 방치폐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신속한 제거 추진

<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부산항 내 방치폐선 실태를 조사하여 선박조사서 및 선박처리서 등 기록 관리 ○ 소유자 확인된 방치선박을 대상으로 제거명령,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은 고시 후 직권제거 조치 등 신속한 처리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분기별 방치선박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점검을 통해 소유자 확인·미확인 선박, 장기 방치 우려 선박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선박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치방안 마련 ○ 영종대교 동측 끝단/호도 최 동측/작약도 등대/석탄부두 남단/남항한일·대우 시멘트 돌핀 남단의 부두 끝단은 인천항만공사 이 외 항계내는 인천청, 항계외는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 정기(연 4회) 및 수시점검, 취약지구 중점 점검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 방치폐선 등 장애물 발생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발생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현장 실태조사(년 2회) - 방치폐선 적기 제거, 발생 대비 100% 제거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 일제 점검(반기 1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확인 선박은 우선제거 명령, 불응 시 고발 조치 및 직권 제거 - 소유자 미확인 선박은 공고 후 행정대집행 실시 ○ 침몰선박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해경)와 공조하여 해양오염 발생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시 예산 확보하여 제거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방치폐선 실태 조사로 선박조사서 및 선박처리서 등 기록 관리 ○ 방치폐선 등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은 제거명령 -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은 공고 후 행정대집행 실시(직권제거 조치)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방치선박 일제점검 실시 : 4회(매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방치선박의 신속제거 추진 -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 일제 점검 실시 : 2회(상반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의 현지 확인 및 전수조사 후 유형별로 구분, 관리 - 점검결과에 의거 방치선박조사서, 방치선박처리서 등 기록 및 관리 철저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은 우선 제거 명령하고, 불응 시 고발 조치 ○ 해상 및 육상 순찰시 방치선박 수시 확인·점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당진항 내 지역별 방치선박 현장 확인 및 유형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과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 - 장기방치 우려 방치선박과 즉시처리 가능 방치선박 - 톤급별 및 재질별 방치선박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내 방치된 폐어선 등 일제점검 실시(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반을 구성하여 육상 및 해상현장 확인 -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여부 전수조사, 현장확인 등 현장조사 후 유형별 관리 ○ 방치선박 발견 시 소유자를 확인하여 선박 제거 지시 및 미 확인 선박 행정대집행 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어민회 등 불법 방치선박 제보 및 발생금지 당부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방치선박 관리 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1분기) ○ 대산항 수상구역 내 주기적(분기별) 점검을 통한 방치선박 제거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남항 내 실태조사(분기) 실시하여, 방치폐선 발견 시 폐선조사서 작성 ○ 방치폐선 등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확인된 경우 선박관리 지시(제거명령) 및 관리계획서 징구,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은 고시 후 직권제거 조치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구 철거 등 지속적인 불법어업단속 실시 ○ 주요 항포구 및 공유수면 방치선박 제거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을 해체 처리 (30백만 원, 국비 15, 도비 6, 시·군비 9)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방치폐선 등 장애물 발생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발생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현장 실태조사(분기별) - 방치폐선 적기 제거, 발생 대비 100% 제거 추진 - 침몰 방치폐선 특별처리비 지원
	<p>【 사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전수조사 실시 : 2회 ○ 방치폐선 발생 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속한 해체처리 확행 ○ 장기 정박선에 의한 해난사고 예방 <p>【 거제시 / 고성군 /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 내 방치폐선 등 장애물 발생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발생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현장 실태조사(분기별) - 방치폐선 적기 제거, 발생 대비 100% 제거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 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일제 합동점검 실시(반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 10척 처리 목표 ○ 소유가 확인 방치선박 제거명령서 송부(자진처리 유도) ○ 소유자 미상(행방불명)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방치선박 제거

중점 4-4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부산시	협업기관	-
------	------------	------	---

가. 선박교통안전 취약지역 VTS 시설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관제 사각지역인 경인·태안 연안과 진도연안에 연안 VTS 및 레이더 시스템 확충으로 운항선박 안전 확보
- 경인연안 VTS 설치공사('15.9~'17.12/152억), 태안연안 VTS 설계('15.9~'16.4/5억) 및 진도연안 레이더 설계('15.9~'15.11/2억) 착수
- * '15년 12월 현재 전국에 18개 VTS센터(항만 15, 연안 3) 운영 중

□ 추진계획

- (경인연안 VTS 구축) 센터 1개소(인천 영종도), 레이더 사이트 3개소(덕적도, 소청도, 소연평도) 및 부대시설 설치 공사 실시
- * 설치 공사 : '15.9월~'17.12월(152억)
- (태안연안 VTS 구축)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기존 대산항 센터 리모델링, 레이더 사이트 3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 추진
- * 설계 : '15.9월~'16.4월(5억) / 공사 : '16년 상반기~'17년말(98억)
- (관제 사각지역 해소) 진도·완도 연안 관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레이더 사이트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 추진
- * 설계 : '15.9월~'16.12월(2억) / 공사 : '16년초~'16년말(48억)

나. 최적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VTS 시설 현대화

□ 배경 및 필요성

- 제주·부산·울산·마산 VTS센터에 설치되어 내구연한(10년)이 경과한 레이더, 통신장치 등 관제시스템 연차 개량
- 제주항 VTS 레이더 2식, 운영시스템 3식, 무선중계기 2식, VHF-DX 1식 등 노후 시스템 개량 완료('14.8.1~'15.8.17/32억)

□ 추진계획

- (부산항) VTS 레이더 2식, 선박추적시스템 2식, 원격지제어시스템 2식 등 관제시스템 개량 공사('14.12~'16.1/21억)
- (울산항) VTS 레이더 2식, 선박추적시스템 3식, 메인서버 1식 및 VHF 무선통신장치 등 개량 공사('15.8~'16.8/27억)
- (마산항) VTS 관제시스템 메인서버 2식, CCTV 4식, 기상장비 1식 등 개량 공사('15.6~'16.5/32억)

다.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운영

□ 추진현황

-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구축 : 자갈치시장 건물 4층
 - 사업기간 : '11년~'15년('15. 8월 14일 준공)
 - 사업규모 : 면적(110.6㎡), 장비(레이다, CCTV 등 17종)
 - 총사업비 : 715백만원[시스템 구축(635백만원), 설계비(80백만원)]

□ 추진계획

- 해상안전센터 운영
 - 안전사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선박 위치 추적 실시
 - 사고 발생 시 긴급상황 처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 센터운영 관련기록 및 정보관리, 기타 시설물 관리 철저
- 해상안전관리센터 규정 재정
 - 센터운영 : 운영시간, 정보제공, 항행 안전방송 및 긴급조치 등
 - 센터복무 : 임무, 자격, 근무방법 및 기준, 상황처리, 기록보존 등
 - 센터시설관리 : 정비계획, 예비품, 내용연수, 예방점검, 지도점검 등

중점 4-5 e-Nav 체계 해양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국민안전처
------	-----	------	-------

가. 한국형 e-Navigation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전체 해양사고의 82%에 달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e-Navigation* 도입 추진('19년 시행)
- *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ICT를 융·복합하여 각종 해양안전정보를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허베이스피리트호('07), 세월호('14) 등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형 e-Nav 구축'을 해사안전 주요 사업으로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 ▶ “한국형 e-Navigation 전략” 수립('13.11, 경제관계장관회의)
- ▶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14.1~11)
 -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4.11.14 / 사업기간 : '16~'20, 사업비 : 1,308억원)
- ▶ “창조경제 대표사례로 e-Nav 적극 추진” VIP 지시('14.2, 해수부 업무보고)
- ▶ '한국형 e-Nav 구축 사업' 공청회('15.3) 및 e-Nav 포럼 창립('15.4)
- ▶ '한국형 e-Nav 전략이행계획' 관계부처 의견수렴('15.4.2~6.2)
- ▶ '한국형 e-Nav 전략이행계획' 수립('15.7.13) 및 국무회의 상정·의결('15.7.28)
- ▶ 세계최고수준기술 지원 대상으로 선정(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15.12)

□ 추진계획

- ‘한국형 e-Navigation 사업단*’을 구성('16.3)하고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수립('16.4)

* 사업단장, 사무국, 총괄기관 및 핵심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해상무선통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16.5)

* 국내 무선통신 연구반 참여 및 국제무선통신회의 관련 정기 협의회 개최하고 미래부와 협업하여 국내·외 무선통신회의에 공통된 의견 제안

- 한국형 e-Nav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및 디지털 해상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상세 설계('16.6)

- 국내 특정 항만과 해역에 LTE-M 시범망 구축('16.12)

* 한국형 e-Nav 서비스 사전 검증 및 재난안전망과의 연계 등을 위해 일부 항만/해역에서 추진하며, 향후 e-Nav 개발 기술의 테스트베드 환경으로 활용

- e-Nav 운영에 필요한 해사데이터 교환기술과 해사클라우드*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국제표준기술 개발 추진(~'16.12)

* 선박-육상 간 통신매체나 데이터형태 등에 상관없이 원활하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통신을 연결해주는 정보교환장치

나. 'e-Navigation' 전략 기반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고도화

□ 추진배경

- e-Navigation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

* 선박의 위치, 등록, 검사, 심사, 사업자 정보 및 선박보안경보 등 각종 해사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국민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

□ 추진계획

- 해사안전정보 빅데이터의 안정적 활용 및 신뢰성 제고('16.상)
 - 시스템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선박위치정보(위성정보, AIS 정보, 어선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선박위치정보, 승선원정보, 여객선운항정보 등 각종 해사안전 정보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상에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 콘솔기능 업그레이드
- 항적데이터베이스 재설계 및 데이터 이관, 응용프로그램 개선('16.하)
 - 해사안전정보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e-Navigation 상용화 지원을 위해 항적데이터베이스 재설계 및 데이터 이관, 응용프로그램 개선

중점 4-6 미래형 표지정보 제공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위성항법 신호(GPS, Galileo, GLONASS 등)의 보정 시스템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해양, 항공, 국방 등 위성항법 적용분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위성기반 전파항법보정시스템(SBAS) 개발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3.8), 연구기간/총 투자비: '14.~'21.(8년간) / 1,280억 원

- 위성항법시스템(GNSS) 다원화 체제에 적극 대응하고, 위성항법 보정시스템(NDGPS)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 추진계획

- 내륙 DGPS 기준국을 SBAS(Satellite-Based Augmented System) 지상 기준국 인프라로 공동 활용 추진

* 연구기간/연구비: '15.~'17.(3년간) / 68억원('15, 11.25억원)

- 중국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Beidou) 이용기술 개발 및 항만 PNT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모니터링 기술 개발 추진

* 연구기간/연구비: '12.12.~'15.10.(3년간) / 23억 원('15, 8억 원)

- 소형선박 등에서 간편하게 DGP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정정보 연산장치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추진

* 연구기간/연구비: '14.12.~'16.12.(2년간) / 4억 원

나.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기술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GPS 전파교란* 발생 시 대응수단 전무

*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선박, 항공, 통신 등 GPS 피해발생('10.8, '11.3, '12.4~5)

- 현재 GPS 전파교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은 eLoran이 유일하므로 백업시스템 구축 필요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국내기술 개발방침 결정('15.7.29, 장관)

□ 추진계획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기술개발 추진

- 연구기간/사업비 : '16~'19 / 120억('16년 예산 7억 확보)

- 사업내용 : 송신기 도입·개발, 중앙제어국 운영 S/W 개발, eLoran 보정국, ASF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기술개발 기획연구완료('15.10, 0.7억원)

다. 등대시설을 활용한 해양·기상정보 제공('날Sea Net'운영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항해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해양기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G2C*서비스 제공

* G2C(Government to Customer, 정부가 국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추진계획

- 기상관측장비 추가 설치 완료('16.12)
 - "날Sea Net" 서비스 확대 및 체계적인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을 위해 추진한 추가 설치 사업 완료
- * '07~'15년까지 76개소 기설치(95억), '16년 6개소(동해4, 울산2) 설치예정(5억)
- 해양기상신호표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16~'17)
 -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체계 확보 및 실시간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차년도/15억)

라. 항로표지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선박안전 확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 선박 항행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항로표지 정보와 더불어 조류 및 기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신뢰성 있는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16년 항로표지 개발 시행계획 수립 : '15.12.~'16.1.
- '16년 항로표지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 추진 : '16.1.~12.
- 사업 시행결과 평가 및 개선책 마련 : '16.12.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리항 방파제 등대 설치 ○ 해운대 잠제를 표시하기 위한 '잠제등표(2)' 및 '이동항등표' 설치 ○ 문동 및 동암항조사등 설치 ○ 낙동항하구 위험수로 등주 유지보수 : '16.3~'16.8. ○ 부산항 주요 항로표지 재배치 기본조사 : '16.4.~'16.10. <p>【 제주해양관리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림항 부근 암초를 표시하기 위한 '비양도서방등표' 설치 ○ 월령항방파제등대 설치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흥수도 암반지역에 통항안전을 위한 '타구 봉도 등표' 설치 ○ 소규모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도모를 위해 진두항방파제등대 설치 ○ 부도 조류신호 전용부이 설치 ○ 노후된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8건)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선 통항 안전을 위한 등표(간여, 오지여, 부근여, 소침도) 및 써래여등주 설치 ○ 죽포항방파제등대 설치 ○ 노후 등표(여자만두령여, 신강서) 및 등명기(거문도등대) 개량 ○ 효율적인 항로표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위해요소인 간출암(상양지)을 표시하기 위한 등표설치 ○ 소형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등대설치(지석, 해간도, 연기항)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시설(해양기상신호표지) 확충 ○ 노후 항로표지시설 개량(유·무인표지 대수선, 유·무인표지 대수선, 대진등대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 위해요소인 간출암 및 노출암을 표시하기 위한 등표 설치 (외조도동방, 위도서방, 비안도) ○ 노후 항로표지시설 정비 및 기능개선(격포항등표) ○ 지역(어촌계) 민원해결 및 해상 암초에 등표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송대여, 주여, 비안도서방, 무녀도남단)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항·포구 및 해상 간출암상 항로표지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3기(송이도항방파제등대, 감곽여·효지도동방등표) 【 진도소 】 ○ 소규모 항·포구 및 해상 간출암상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3기(신전항방파제등대, 사후도·황간도동방등표) - 개량 2기(해수서등표, 까막섬등표) ○ 강조류 해역에 해상교통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조류신호소 설치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항·포구 방파제등대 설치(구만2리, 월포리등대) ○ 등대박물관(해양관 및 수상전시장) 리모델링 ○ 노후 항로표지시설 안전진단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어항 통항선박 안전확보를 위한 궁평항방파제등대 설치 ○ 효율적인 항로표지 정비를 위해 누후된 '부표정비선' 대체 건조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어항 통항선박 안전확보를 위한 어물항방파제등대 설치 ○ 항로표지 관리 효율성을 위해 항로표지 집약관리시스템·해양기상 신호표지·항로표지용 AIS가 연계된 관리운영시스템 구축('15 ~ '16) ○ 노후 항로표지 기능강화를 위한 유무인표지 대수선, 표지선 수리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어항 통항선박 안전확보를 위한 등대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지도 및 삼시도방파제등대 ○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

중점 4-7 정밀도 높은 해도 제작 보급

주관기관	국립해양조사원	협업기관	-
------	---------	------	---

가. 연안 해역에 대한 기본·정밀조사

☐ 현황 및 문제점

- 영해내측해역 32천km²에 대하여 1단계 연안해역기본조사를 '12년 완료, 2단계 연안해역정밀조사를 '13년부터 집중 추진 중

☐ 추진목표

- 연안해역 정밀해저지형 조사(수심, 해저저질, 항해위험물 등) 실시, 대축척 해도제작 지원 및 최신정보 제공으로 선박 안전항해 지원
- 나주군도 부근, 비인만 부근, 여수 동부 등 총 1,200km² 연안해역 정밀조사

☐ 추진계획

- 소형선박 안전항해 지원 및 연안관리 등 국가해양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안해역 정밀조사 추진('16.3~'16.11)
- 연안해역 재질분류 및 국가기본정보 확보를 위한 초분광센서(Hyper Spectral Sensor)조사('16.5~'16.12)

나. 주요 항만해역에 대한 정밀수로측량

□ 현황 및 문제점

- 무역항(31개항), 연안항(29개항) 총 60개항에 대한 주기적 조사 실시
 - 항만의 중요도와 예측 변화 가능성에 따라 1~8년 주기의 우선 순위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나, 재조사 주기가 길어 최신 자료의 확보방안 필요

□ 추진계획

- 울산항, 목포항, 군산외항 등 7개 항만해역의 진입항로 및 항내 수심 변화가 심한 지역에 대해 주기적 정밀조사
 - 항만해역의 안전항해 위해요소 파악 및 지형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해저지형, 해저지질 등의 정밀수로측량('16.3~'16.11)

다. 항해안전을 위한 최신 해도 제작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의 법정 비치물인 해도의 최신화를 통한 해상교통안전 확보
 - 우리나라 해도는 종이해도 381종, 전자해도 1028셀('15년11월 기준)

* 선박안전법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 추진계획

- 종이·전자해도 유지관리 및 대축척 신간해도 제작
 - 종이해도 381종, 전자해도 1028셀에 대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 정밀한 수로정보 제공을 위한 대축척 신간해도 제작

라. 최신 항해안전정보 지속 제공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조사원에 간행한 해도, 수로서지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 매주 항행통보를 간행하여 선박회사 등에 배포하고, 긴급사항은 항행경보로 발령하여 유·무선 통신으로 전파

□ 추진계획

- 해도 등 수로도서지의 수정사항 및 해상 안전정보를 선박 등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항행통보 간행 및 항행경보 발령
- 매주 1회 국·영문 항행통보 간행, 배포 및 인터넷 서비스 시행
- 해상사격훈련, 표류물, 침몰·좌초 등 긴급사항 발생시 선박회사 등 관련기관에 스마트폰 어플, Fax 등을 통해 항행경보 전파
- 최신 정보를 반영한 수로서지 간행 및 업데이트
- 한국연안 항로지, 등대표, 조석표 등 수로서지 11종 간행

일반 4-1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개발 운영

주관기관	해수부, 지방청	협업기관	-
------	----------	------	---

가. 계류시설 개발시 선박·승하선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 계류시설 개발시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승하선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항만 계류시설 계획 시 해사안전 관련 관계자 의견청취 및 반영
- 항만 계류시설 개발 후 반영된 안전조치의 지속 지도·점검
- 평택·당진항 화물차 휴게소 조성 등 항만 편의시설 보완

* 조성공사 실시('15. 9 ~ '16. 6), 조성공사 준공('16. 하반기)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응어항구, 방파제 등 주변 안전펜스 시설 보수 및 확충, 구멍부환 추가 설치 - 시설물 확충, 구멍부환 등 설치 지역 현장 조사 실시('16.3) ○ 연안사고 위험지역 중점 안전점검 실시(반기별) - 사고취약 지역(방파제, 호안) 등 주안점에 맞춰 실질적 점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시설 개발 및 운영 시 선박·승하선자에 대한 안전성 및 편의성 검토 강화 ○ 항만 계류시설 계획시 해사안전 관련 관계자 의견청취 및 반영 ○ 항만 계류시설 개발후 반영된 시설물의 미비점 지속 보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계류시설의 상시 점검체제 유지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 지속 검토·반영 ○ 항만 계류시설 계획 수립시 해사안전 관련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청취 및 반영 ○ 항만 계류시설 개발 후 반영된 안전조치계획 지속 지도·점검 및 추가적인 안전조치사항 지속 발굴

나. 내항여객선 기항지 집안시설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열악한 내항여객선 기항지의 집안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승·하선과 선박의 접·이안 안전성 확보
- 여객선 기항지 집안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 '13년 4개소(30억원), '14년 8개소(33억원), '15년 6개소(31억원)

□ 추진계획

- 여객선 기항지 집안시설의 신설 또는 보강 등 개선사업을 통해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지속추진

일반 4-3 해양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

주관기관	기상청	협업기관	
------	-----	------	--

가. 연안해역에 해양 이상현상 감시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기상해일(봄, 서해) · 이안류(여름, 서·남·동해) · 너울(가을 · 겨울철, 동해) 등 해양 위험 기상현상으로 갑작스런 수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감시체계 구축 필요
- 장주기파 관측 네트워크 확충(연안방재관측시스템: '15년 현재 18개소)
- 기상해일의 원인인 대기요란 모니터링 대상 지점 확대(AWS: '14년 3개소 → '15년 89개소)
- 너울 스펙트럼 관측을 위한 해양기상부이 확충(해양기상부이: '14년 11개소 → '15년 17개소)
- 해상 안개 감시를 위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정 관측 자료 공유('15년 7개 지점 수집 테스트)

□ 추진계획

- 해양사고를 야기하는 위험기상 현상의 조기에측 및 분석체계 구축
- 해상안개 등 해양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관측망 공동 활용 추진
- 해양사고를 야기하는 위험기상 현상의 조기에측 및 분석체계 구축
- 해양에서의 위험현상(기상해일, 이안류, 폭풍해일, 너울 등) 감지 · 대응을 위해 조기감시 및 예측능력 개선 추진

- 유관기관*에 해양위험기상 사전발생 정보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협 등

○ 해상안개 등 해양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관측망 공동 활용 추진

- 해양수산부 시정 자료(13개 지점) 수집 예정 추진

나. 해양기상 관측망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에서의 위험 기상 현상 실시간 관측을 위한 해양관측망 인프라 확대 및 유지 관리
- '15년 해양기상부이(6개소), 선박기상관측시스템(2개소), 파고부이(5개소) 등 총 13개 장비 설치 완료

관측장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해양기상부이	5	5	5	5	5	7(2)	8(1)	8	9(1)	9	11(2)	11	17(6)
선박기상관측시스템	-	-	-	1	1	1	1	1	1	3(2)	8(5)	10(2)	12(2)
등표기상관측장비	5	6(1)	7(1)	7	8(1)	8	9(1)	9	9	9	9	9	9
파랑계	1	2(1)	2	2	5(3)	6(1)	6	6	6	6	6	6	6
파고부이	-	-	-	-	-	-	-	10(10)	20(10)	30(10)	38(8)	43(5)	48(5)
표류부이*	-	-	-	-	-	-	-	-	-	(7)	(10)	(10)	(14)
연안방재 관측시스템	-	-	-	-	-	-	-	6(6)	11(5)	15(4)	17(2)	18(1)	18
항만기상관측장비	-	-	-	-	-	-	-	-	1(1)	2(1)	2	2	2
기상관측선	2000호	1	1	1	1	1	1	1	기상 1호	1	1	1	1
해양기상기지	-	1	1	1	1	1	1	1	1	1	1	1	1

※ ()는 당해 연도 설치, * 소모성 관측 기기

□ 추진계획

- 해양기상부이 1대 교체 및 파고부이 4대·표류부이 20대 도입
-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연해·근해 및 광해역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양기상관측망 인프라 구축
 - 먼바다 관측 자료 확보 및 유류 확산·태풍 진로 추적 등 위험 기상 목표 관측을 위한 표류부이 운영(20대)
 - 평수구역 및 연안바다 등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해양기상 관측 자료 생산·지원을 위한 파고부이 확충(4개소)
 - 노후 해양기상부이 1개소(포항) 교체

다. 해양기상관측 전용선박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태풍 등 위험기상 목표 관측을 통한 위험기상 대응 능력 강화 및 다양한 연구 목적의 관측 수행을 통한 해양기상 서비스 제고
- 기상관측선(기상1호) 운영을 통해 해양위험기상의 현장관측 추진 중

* 운항일수 : '12년 162일 → '13년 164일 → '14년 199일 → '15년 172일

□ 추진계획

- 위험기상 현상 및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 수행
 - 여름철 집중호우 및 강수량량 예보개선을 위한 현장 관측
 - 태풍 진로감시 및 예보능력 향상을 위해 표류부이 투하

- 계절별 위험기상 관측, 여름철 종합관측 수행, 예보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등에 최대 편성하고, 특정관리해역 등 기상, 해상특성 관련 조사
 - (봄·가을) 황사 관측 및 특정관리해역 해양기상 관측, 파랑예측 모델검증 관측 등
 - (여름) 집중호우, 강수량량 예보개선을 위한 관측 및 태풍진로 추적에 위한 표류부이 투하, 파랑예측모델검증 관측 등
 - (겨울) 겨울철 해상풍 및 파랑관측(동해지역), 파랑예측모델검증 관측 등
- 위험기상 발생 예상 해역 집중 감시
 - 위험기상 감시를 우선하는 운항계획 변경을 통해 탄력적인 관측 업무 수행
- 해양기상관측장비 장기 관측공백 발생 우려 시 관측지원

라. 해양기상 예측 신뢰성 증진 및 예보 신속 전달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위험기상 예측·예보 정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기상해일 도달시간 산정 알고리즘 개발 및 기상해일 예측모델 시험을 통한 관계기관 지원(3월, 국민안전처, 한국수력원자력) 및 기압 변동 모니터링('14년 3개소 → '15년 89개소)
 - 연안·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안류 예측 서비스 해역 확대 및 부처 간 융합 정보 제공(6월, '14년 3개소 → '15년 4개소)

□ 추진계획

- 해양기상 모델 정확도 개선을 통한 예측 신뢰도 제고 및 위험 해양기상 현상에 이해증진을 통한 조기대응 역량 강화
- 해양기상 모델 정확도 개선
 - 원해역에 대한 모델 검증 체계 구축 및 파랑예보 개선을 위한 상세 검증 체계 구축
 - 해양 관측자료 및 예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형효과 진단
 - 파랑모델의 먼바다 예측력 진단을 위한 표류부이 주기적 투하
- 해운, 수산, 수색 등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기후정보 실시간 지원(수협,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 풍랑-너울 구분 예측 정보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방지 지원 체계 강화(풍랑-너울을 분리 예보 시스템 운영)
 - 고해상도 대기-해양 접합 예측모델을 통한 기상해일 예측 정보 유관기관 지원(3~5월, 국민안전처·한국수력원자력)
 - 이안류 예보-감시시스템 연동을 통한 부처 간 융합정보 생산 및 제공(6~9월, 해운대·양양·중문·대천해수욕장, 국민안전처·국립해양조사원)

일반 4-4 어장표지 표준화 및 항로표지 식별성 강화

주관기관	지자체	협업기관	-
------	-----	------	---

□ 현황 및 문제점

- 어장표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예산은 없으나 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확보
- 정부지원 부표(고밀도, 친환경)지원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 어업인의 사업신청 저조
- 어장구역의 어장표지로 업종간 분쟁 방지 및 불법어업근절
- 어장이용개발 계획 수립으로 승인된 어장에 대하여 어장표지

□ 추진계획

<인천시>

- 군·구별 실정에 맞는 어장표지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어업면허 시 어장표지 설치 이행 확인 : '16. 2. ~ 12.
- 면허어장에 대한 어장표지 설치 강화로 선박 안전사고 예방
- 국고 보조사업인 고밀도부표 지원사업과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에 대해 어업인 참여 홍보

<울산시>

- 면허어업의 어장 실명 표지
- 어업권 현황 : 85건 /1,316ha

- 어업권 종류 : 마을어업 20건, 정치어업 6건, 양식어업 59건
- 표지방법 : 어장구역의 바깥부분(모서리마다), 표지 표준화추진
- 미 실시 어장에 대한 어업인 지도 및 이행 적극 독려
- 어선어업 어구실명제 추진 독려
- 표지방법 : 어구틀 양쪽에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

일반 4-5 해수유동 모니터링 등 해양관측 시스템 확대

주관기관	국립해양조사원, 울산항만공사	협업기관	-
------	--------------------	------	---

가. 실시간 해양관측 및 정보제공(국립해양조사원)

□ 추진현황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117개소)을 구축하여 관리·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관측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실시간 해양현상 모니터링
 - 해양과학기지(이어도), 조위관측소(50개소), 해양관측부이(29), 해수유동관측소(33개소), 해양관측소(4개소)
- 국가해양관측망에서 실시간으로 해양관측을 실시하고, 생산되는 해양관측자료를 대국민 서비스

□ 추진계획

-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지속적인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해양현상을 모니터링
 - 가거초,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인수, 해수유동관측소(평택·포항항), 해양관측부이(경포대), 신설·이설·재건축 예정인 조위관측소 설계(6개소)
 - 국가해양관측망 종합개선계획(‘14.8)에 따라 해양관측소(1개소) 폐지
- 국가해양관측망(119개소)의 관리·운영 및 관측자료 종합분석을 통한 해양정보 서비스 강화

나. 실시간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울산신항 남북방파제 축조 등으로 변화된 울산항 주변의 해수흐름, 기상상태 실시간 파악 필요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항만 운영 효율성 증진하고자 함

□ 추진계획

- 해수유동관측결과 실시간 제공 및 관측결과보고서를 울산항 이용자에게 배포(분기별)
- 시스템 정기점검, 층별 해수유동관측 인양 및 정비(분기별)
- 항만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수유동 관측 장치 재설치 및 정보 제공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16. 1. ~ '16. 12월 (12개월)
- 총사업비 : 99백만원
- 주요내용 : 울산 신항의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유지 및 운영

5. 국제협력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 IMO 대표부 설치, 전담부서 확충으로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A그룹 8연임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대응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중점 5-2)

* 대표부 설치('16.12), 전담부서 신설('16.11)

☐ IMO 모의 경진대회 개최, 국제해사학회 창립 등 전문성 제고와 미래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중점 5-2)

* 경진대회 개최('16.9), 국제해사학회 창립('16.10)

☐ IMO 기술협력 자금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 지원으로 해양분야 글로벌리더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중점 5-3)

*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등 10여개 75만 달러 지원 및 개도국(파나마, 태국, 자메이카) 해사안전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지원('16.5, 약 8억원)

☐ 제5차 항로표지관리 기술위원회 및 AIS 워크숍 개최로 국제 항로표지협회(IALA)에서의 아국의 역할을 강화 하겠습니다.(중점 5-5)

* 제5차 ARM('16.10.) 기술위원회, AtoN AIS 워크숍('16.10.)

☐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개최, 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 대응을 통해 해양환경 분야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겠습니다.(중점 5-6)

* 국제포럼('16. 하반기 / IMO, 미국 코스트가드 등 200여명 참여 예정)

☐ “My Life-Jacket 캠페인”, 교재개발, 전문강사양성 등 민간중심 안전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중점 5-7)

☐ 해양안전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등 대국민 해양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중점 5-8)

* 제작('16.6~8), 여객선 터미널, 지하철·야구장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중점 5-1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능력 제고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IMO*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회원국 감사제도를 '16.1월부터 강제화할 예정으로 체계적인 대비 필요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추진계획

- IMO 회원국감사 대비 훈령 마련을 통한 내부준비 강화
 - 강제협약이행코드(III Code)* 의무사항 분석을 통해 '(가칭) IMO 회원국감사 수감을 위한 규정' 마련('16.6)

* IMO 회원국 감사 시 감사관이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로 아국은 '19년 수감예정

- IMO 감사관 양성교육에 직원 파견 및 관련 회의에 주도적 참여

- IMO 강제협약이행코드(III Code)와 해양안전 품질관리시스템 (ISO9001)을 연계*한 중간 인증심사 수감('16.3)

* ISO 9001 업무프로세스, 심사점검표 등에 강제협약이행코드 감사사항 도입

중점 5-2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해운·조선 강국, 사무총장 배출국 위상에 걸맞는 IMO 대응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인 IMO 사무총장 당선 및 A그룹 8연임을 계기로 현행 IMO 대응체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적인 국내·외 대응체제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현지대응 및 국제기준 제정 주도를 위한 IMO 대표부 설치('16.12)
 - 전담공사 및 안전·환경·법률 담당으로 구성된 대표부 신설
- IMO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해수부 내 전담부서(국제해사과) 신설추진('16.11)
 - IMO 주도적 대응, IMO 기술기준의 산업화 지원 등 업무수행

나. 국제해사기구 대응 전략의제 개발 및 협업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아국 해양안전산업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해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업체 참여 및 운영필요

□ 추진계획

- 전략적 IMO 의제개발 논의를 위한 IMO 국제해사협회의 활성화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해사학회 창립('16.10)
- IMO 정책연구과제 제안, 국제회의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지정에 따른 활동지원, 해사분야 국제지식 공유를 위한 학회 지원 등 실시

다. 국제해사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

□ 배경 및 필요성

- 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양성 필요

□ 추진계획

- 전국 대학생 대상 IMO 모의경진대회 개최로(예선 및 본선, '16.9) 젊은 인재들의 해사분야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행사의 내실화, 관심 및 참여도 제고

라. 해사산업계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전파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적인 해사안전, 해양환경 관련 동향을 적기에 해운·조선 업계에 전파하여 해사산업계의 대외경쟁력 유지·강화 필요

□ 추진계획

- 해사안전분야 국제 업무 발표회 개최(연 2회)
- IMO와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해운·조선 등 해사산업계에 전파

- 해사정보 제공 채널 다각화로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
 - IMO 및 국제해사 동향 전파(주간), 해양안전 소식지 발간(계간) 추진

마. '국제유류오염손해 배·보상 기금' 관련 체계적 대응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정유·수산·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기반 구축을 통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차질없는 배·보상 추진

□ 추진계획

- 국제기금의 배·보상정책 논의를 선도하고 후속 조치방안을 전문 검토해 나갈 협업체계 구축·운영
 - 기금 납부자인 정유업계 대상 설명회로 관심·참여 제고(3월)
 - * 보상체계 및 정유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관련 사고·보상 사례 등) 중심
 - 전문가그룹 구성(3월) 후 국제기금회의(연 2회)와 연계 대응
 - * 선주·화주·수산·환경·보험·손해사정·법률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
 - 전문가그룹과 연계한 국제기금 전략대응방안 연구(용역) 수행
 - * 예산 / 기간 : 50백만원, '16.3.~11.(9개월)
- 정유사 분담유 제출량 점검(3월) 및 유조선 보장계약 현황조사(11월)로 유류오염 배보상체계 운용·관리의 사각지대 사전 예방

중점 5-3 양 · 다자간 교류 및 기술협력 공고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양 · 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와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해양안전 · 환경 · 보안 등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주변국, 주요 해사국 및 아 · 태 지역 협력체 등을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로 우호세력 구축 및 국적선 안전확보 도모 필요

□ 추진계획

- 주변국 및 주요 해운국 등과의 양자회의 개최
 - 주변국(中 · 日 · 싱) 및 주요 해운국(호 · EU) 등과의 회의를 통해 IMO 현안*의 공동대응과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등 추진
- * e-Navigation, 극지운항선박안전 기준,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등
-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 해사안전정책 선도
 - 아 · 태지역 해사안전기관장회의(APHoMSA)의 주도적 참여로 새로운 기술협력사업 발굴

	구분	차수	장소	일정
양자회의	한 · 중국	17차	중국	'16.5
	한 · 일본	19차	일본	'16.10
	한 · EU	4차	런던	'16.12
	한 · 호주	6차	뉴질랜드	'16.3
	한 · 싱가포르	5차	싱가포르	'16.7
다자회의	아 · 태 해사안전기관장회의	17차	뉴질랜드	'16.3

나. 해사안전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IMO 사무총장 배출 및 IMO A그룹 8연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해사분야 글로벌 리더 위상에 맞는 역할 수행 필요

* '03~'15년간 676만달러 기부(年 50만달러), 총 97개의 사업을 선정·시행

□ 추진계획

- IMO 기술협력 자금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사업 지원
 -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및 기타 한국·IMO 협의를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추진(약 10여개 75만 달러)
- 개도국 해사안전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지원('16.5, 약 8억원)
 - (파나마) 선박교통 통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태국) 선박 검사·협약 이행 시스템
 - (자메이카) 교육·훈련 센터 구축

중점 5-4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지속 전개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외교부, 국방부
------	-----	------	----------

가. 국제기구와의 해적퇴치 협력강화

□ 추진현황

- 국제해사기구(IMO) 및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회의시 외교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해적관련 의제 등 적극 대응

* CGPCS(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 공통의 접촉창구 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등 62개국, UN/EU 등 21개 국제기구 및 해운업계가 참여·설립('09.1)

** '11년 이후 해적발생 동향은 감소 추세이나, 해적 네트워크는 현재 억압된 상태일 뿐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님에 따라 지속적인 해적피해예방활동 필요 (제18차 CGPCS 전체회의, '15.7)

□ 추진계획

- 국제해사기구(IMO) 및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회의시 해적관련 의제 발굴 및 대응을 통한 해적퇴치·예방활동 지속 전개
-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지침*(BMP) 제작·배포, 무장보안요원 이용 지침 이행 등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추진

* BMP(Best Management Practice) : 소말리아 해적피해예방대응 요령

나.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 추진현황

- ReCAAP(한, 중, 일, 영국, 미국 등 20개국 참여)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의 역량강화
 - * 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협정채택 '04.11, 한국 가입 '06.4.7)
 - ** '15년 ReCAAP 사무국에 재정(운영부담금 : 1.5억원) 및 인력(4급 서기관 1명) 지원, 해적피해 방지 역량강화 워크숍('15.8.4~6) 및 관리자회의 참석('15.10.6~8)

□ 추진계획

-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 지역협력 및 공조체제 강화
 -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등 아시아 지역 해적퇴치를 위한 정보공유, 역량강화, 협력증진 등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연중)
 - * '16년 ReCAAP 사무국에 운영분담금 1.5억원 지속 지원
 - ReCAAP 협정 발효 10주년 및 제10차 관리이사회의('16.3) 참석을 통해 미래발전방안 모색 및 회원국간 국제협력 지속 추진
 - * 일시 / 장소 / 참가 : '16.3.18 / 싱가포르 / 20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

다. 선박위치정보(LRIT) 공유로 구조대응 협조체계 증진

□ 배경 및 필요성

- 해적위협에 대한 초기, 신속대응 체계유지를 위해 해적위험해역에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연중 운영('09.1.~)

□ 추진계획

- 청해부대와 국적선박 위치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상황 대응
 - 청해부대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설치로 해적 출몰해역을 통항하는 국적선박의 위치정보 공유 및 24시간 모니터링 추진(연중)

* 파견함정 시스템 유지보수(1.4억 원), LRIT 위탁·운영(2.5억 원)

라. 해운 업·단체에 해적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업계에서 능동적으로 해적피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적모선 동향, 해적사고 등의 정보를 업·단체에 신속제공 필요

□ 추진계획

- 해적모선 및 해적사고 정보의 실시간 제공 지속 추진
 - UN, IMO, ReCAAP, 국제상공회의소 해적신고센터(IMB PRC)의 해적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선사 및 선박 등에 전파(매분기)
 - GICOMS 앱을 활용, 해적정보 이용자(선사, 선박 등) 접근성 제고

* GICOMS(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and Safety) : 해사안전·해적정보 등 제공

중점 5-5 항로표지 국제 교류협력 확대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추진 배경

- '18년 아국에서 개최될 제19차 IAL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해수부 직원 1명 파견, '14.7~)
- * 80개국 500명 참석, 이사국 선출, 향후 IALA 중·장기 추진전략 결정 등
- '16년 제5차 항로표지관리기술위원회(ARM) 기술위원회 및 AIS 워크숍 개최로 IALA 내 아국의 역할강화 증대

□ 추진계획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내 아국역량 강화
 - 해양수산부와 IALA 국제항로표지 교육기관(WWA) 간 재정지원 MOU 체결에 따라 아국 항로표지 전문가의 WWA 이사 진출
 - ARM 제5차 기술위원회 및 항로표지용 AIS 워크숍 개최
 - * 제5차 ARM('16.10.) 기술위원회, AtoN AIS 워크숍('16.10.)
- 유·무상 협력사업(ODA) 추진으로 개발도상국 지원 강화(계속)
 - KOICA를 통한 항로표지협력사업* 시행 및 발굴된 항로표지 국제 협력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등
 - *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추진
 - ** 캄보디아 항로표지 마스터 플랜수립사업(DEEP 채택, '17~'20, 4백만불)

중점 5-6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주도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전 세계 선박평형수 전문가 참여 국제포럼 개최

□ 추진현황

- 선박평형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사회 이슈 등을 논의하는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개최

* 개최 (3회 : '13, '14, '15), 참석자 : IMO, USCG, ICS 및 동남아 개도국 등 국내·외 선박평형수 전문가 130여명

- IMO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개정사항에 대하여 아국 입장과 대안제시 등을 통해 해양환경분야 영향력 확대

□ 추진계획

-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전문성 제고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도 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 선박평형수 국제협약,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국제기준, 미국 형식승인 동향, 최신 평형수처리기술 등 국제논의 주도

* '15.3 미국 독립시험기관(USCG Independent Laboratory)으로 지정된 한국 선급을 활용하여 미국 형식승인에 대한 최신동향 논의.

** USCG IL은 미국 연방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 연안경비대를 대행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함

나. 해양환경분야 IMO 국제회의 대응 및 양자 협력 강화

□ 추진현황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와 해양오염방지 전문위원회(PPR)에 아국의제 제출, 작업반 참여 등 선박평형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협력 강화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셀프모니터링 지침서'에 대한 한국-독일 공동 의제 제출('15.1.23.)
- * MEPC 68 : '15.5.11~5.15, 런던, 120개 회원국 및 60개 정부·비정부간 기구
- ** PPR 2 : '15.1.19~1.23, 런던, 70개 회원국 및 40개 정부·비정부간 기구
- 한·중 한·일 해사안전정책회담(10.20, 4.30)을 통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

□ 추진계획

- (MEPC)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조기발효 국제협력, 온실가스 감축 선도적 대응 및 지원 등을 통해 해양환경보호 국제사회 선도
- * 국내 연안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분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해운은 IMO 현존선 연료사용량 수집 강제화에 대비, 국제항행 선박의 배출량 계산 및 관리시스템 개발
- (PPR)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중이 블랙카본 대기오염원 저감 기술에 대한 의제 제출 등을 통해 해양환경개선 기술지원 강화
- * 블랙카본(Black Carbon):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s)의 일종으로 만년설 및 북극빙에 부착되어 빙하의 태양빛을 흡수하여 빙하의 해빙을 촉진
- (양자협력) 한·중, 한·일 해사안전정책회담을 통해 MEPC, PPR 등 국제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양국 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중점 5-7 해양·수산 관계자 해사안전 의식 제고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종사자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우수 안전관리 사례 발굴·확산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 * '10년부터 선사·항만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 실습강화를 위한 정원조정(50→20명) 및 교과목 개편, 안전교육 실습평가제 도입 등
- 입·출항이 빈번한 어업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조업현장, 도서지역에서 안전운동 전개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6.9)
 - 우수 안전관리 기법을 발굴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회사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모전 개최
 - 우수사례에 대해 사례집 발간, 전문지 게재 등 전방위 홍보 추진
- 국가지도선을 활용하여 해양사고예방 지원 및 홍보(어업관리단)
 - 승선조사 시 주기관 및 통신장비 등 선박 안전장비의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저해요소 제거 및 정밀검사 권고
 - 해난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 예방활동 전개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1회/월), 노후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점검(분기) 사고예방홍보물 배부(수시), 구명조끼 착용 시연(1회/월), VHF·SSB 무선 설비 활용 안전교육 및 홍보(수시) 등

○ 어업인 간담회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수시, 어업관리단)

- 1인 및 부부 소형 조업선에 대한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 도서지역 간담회 시 안전교육 및 홍보 병행

* 안전점검을 통한 어업인의 애로·고충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선원 대상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해양수산연수원)

- 선원 법정교육인 안전교육에 대한 실습 평가제 지속 실시

- Good Seamanship 교육 강화를 위해 연수원에서 개설되는 전체 교육과정에 "선원의 의무" 동영상 상영

중점 5-8 대국민 해사안전 생활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교육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	-----	------	---------------------------------------

□ 배경 및 필요성

- 바다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해양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의 내재화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
-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이 찾는 등대를 체험공간으로 탈바꿈시킬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안전실천본부 운영(연중)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을 활용, 시기·대상(일반국민, 종사자 등)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캠페인 전개 및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실시(일정)
- 해양안전 기초 교재 개발·보급('16.8.)
 - 선박 승선, 물놀이, 갯벌탐험 등 바다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안전수칙을 어린이때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용 해양안전 교재 개발
 - *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 등대를 활용한 대국민 해사안전 체험공간 확충
 -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종이 구멍뚫목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 등대 등에서 실시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16.4.26.~29.)
 - 해양안전문화 정착, 안전기술 및 장비 관련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2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를 부산시와 공동개최
- 방문객이 많이 찾는 등대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 등대를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성과 등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체험형 전시공간 마련
 - 특별전시회, 해양안전 교실 및 문화행사, 등대박물관 해양관 리모델링 추진
 - * 해양관 및 수상전시관 리모델링('15.5.~'16.5. 1,225백만원)
-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 * 전시회(해양안전), 음악회, 등대해양캠프 및 문학행사 등 추진
- 해양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한 공익광고(TV, 웹툰 등) 제작 및 홍보(~'16.8)
 - * 지상파 방송, 여객선 터미널, 지하철·야구장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My Life-Jacket 캠페인” 추진, 교재개발, 전문강사양성 등 민간 중심 안전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연중)
 - * 민간 동호회(낚시어선, 레저보트), 어촌계 등을 통한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 유도
-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수칙의 현장이행력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실천본부* 법인화 추진('16.4)
 -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3년 민간 협의체로 창립, 7개 본부기관, 11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해양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활동 수행
- 대국민 해양안전체험 접근성 강화 및 상시 안전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해양안전장비 기초체험관 개설('16.5)
 - * 해양안전실천본부(세종시)에 구명조끼, 조난통신장비 등 해양안전장비 전시공간 마련('16.5) '16년 이후 전국확대(11개 지역본부)

< 지방해양수산청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부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 사무국을 통한 민간주도형 해양안전문화 활동 전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캠페인 및 사진공모전, 홍보달력 제작 등 지원 ○ 부산항 해양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 창구 개설 및 실무협의체 회의 정례화(수시)
	<p>인천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소리 청취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선박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의 날 행사 및 민방위 훈련 시 상영 - 해양안전실천본부 캠페인 행사 다각화
	<p>목포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캠페인 및 소화·구명장비 작동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확립 및 교육 - 국민 안전의식 확립(전광판 활용 안전홍보, 안전홍보물 제작·배포) 활동
	<p>군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전북지역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해사안전실천 전북지역본부 협의회 개최(반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상·하반기 해양안전문화 활동 추진방안 협의 등 - (캠페인) 선박종사자(어업인 포함) 해양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현장 캠페인 실시(반기1회/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포구 및 여객터미널, 해수욕장 등에서 캠페인 실시 - (지원활동) 타 기관(부서) 주관 해양안전 관련행사 및 교육 추진 시 지역본부기관 간 상호 참여 및 지원
	<p>평택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착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의 현장 캠페인 강화 - 선박종사자 및 이용객 대상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등 적극적 홍보 ○ 안전관리 노하우 상호 공유 및 원활한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우리 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 병행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줄이기 안전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民 주도의 해양안전실천 캠페인 개최(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집합교육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현장 캠페인 전개 - (해양안전의 날) 월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테마 선정, 취약요인 중점점검 등의 해양사고예방 홍보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우리 청 SNS·전광판·팝업창 등에 홍보 - (대책홍보) 계절별 안전대책 홍보물 제작·배부(현수막, 포스터) ○ 기상, 해상교통 등 항해안전정보 제공(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 정보, 해사안전정책 추진 현황 및 자료 등 제공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전남동부지역본부 운영(연중) ○ 중학생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래세대에 대한 해양안전실천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안전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 범국민, 해양종사자 대상 해양안전 캠페인 등 실시(매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의 날과 병행 실시 ○ 해양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장비 전시·체험관을 통한 직·간접적 구명장비 교육 - 여객선터미널 전광판 활용하여 해양안전수칙 홍보 활동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종사자 및 대국민 대상 가두캠페인 및 해양안전 체험의 장 제공(필요시) - 문자, SNS, 홈페이지,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해 안전정보 제공 및 관련 종사자(선원, 업체)의 자율적 안전점검 시행 ○ 홍보·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파 ○ 해양 안전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업·단체, 기관간 안전관리 노하우 공유 및 해양 안전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해양안전 특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교육 실시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해양안전 체험학습 확대 추진(년 12회 30명 내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207명 ⇨ ('16) 360명 ○ 안전교육(1시간) 및 해상견학(1시간) 병행 실시

중점 5-9**대국민 해양안전 의식제고를 위한 체험시설 건립**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국무조정실, 경기도, 진도군
------	-----	------	--------------------

□ 배경 및 필요성

- 일반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체험시설 건립
- * 육상 재난안전 교육시설에 비해 해양안전에 특화된 체험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을 위한 대국민 체험시설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경기도)
 - 실시설계,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50억원, 3월)
 - 사업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 및 사업현장 점검으로 사업주관기관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
 - * 체험관 건립 전문성 제고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지원 등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관리·감독·지원체계 확립(해수부)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개요 >

구 분	해양안전체험관
목 적	일반국민의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체험시설
규 모	연면적 9,550㎡
지역(입지)	경기도 안산시
주요 프로그램	해양훈련·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안전 콤플렉스 개념으로 건립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콘텐츠로 구성
사업기간	2015~2018(4년)
총사업비	400억원(국고 3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정액보조 * 사업부지 경기도 안산시 제공
사업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전라남도, 진도군)
 - 실시설계, 부지매입, 건립부지 일부조성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42억원, 3월)
 - 세월호 사고의 추모 및 국민 체험시설 건립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 초기 전문가 자문위원회 참여를 통한 지원 추진

<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개요 >

구 분	국민해양안전관
목 적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희생자 추모, 해양안전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을 위한 해양안전 전문 체험시설 건립
규 모	80,616㎡
지역(입지)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진도항 인근
주 요 프로그램	(추모시설) 세월호 유품, 세월호 축소모형, 사건일지, 추모메모, 추모 리본 등 전시, 기념비, 추모사진, 기타 기념품 등 (체험시설) 인명구조 체험, 소화·방수훈련, 선박 운항체험, 선박 탈출, 선박 재난체험
사업기간	2015~2018(4년)
총사업비	270억원(국고 100%)
사업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일반 5-1 해양사고 조사 심판 국제협력 강화

주관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협업기관	-
------	-----------	------	---

가.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 추진현황

- 최근 국제 해양사고 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과 협력관계 유지 및 아국의 대외영향력 제고를 위해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대응

* 제24차 MAIIF 참석(3명, 9.7~9.11, 터키),
제18차 MAIFA 참석(2명, 8.4~8.6, 싱가포르),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6개국 52명, 6.12),
호주 ATSB 인적요인 사고조사 교육 참가(1명, 11.2~11.6, 호주 캔버라),
영국 해양사고조사국(MAIB)과 파견 연수(10.1, 4개월)

□ 추진계획

-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III) 참석 : 해양사고 교훈사항 등 대응(7월)
- 제19차 MAIFA 참석 : 회원국 활동 및 조사사례 공유 등(3분기)
- 제25차 MAIIF 참석 : 회원국 활동 및 조사사례 공유, IMO 의제 문서 검토 등(8월)
- 해양사고조사관 교육 참가추진(캐나다 TSB, 호주 ATSB 등, 상·하반기/별도 협의)
- 해양사고 조사 및 교육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추진 (미국 NTSB 등, MAIIF회기 중 별도 추진)
- 미국·영국 등 선진 해양사고조사관 파견연수 검토(4분기)

나. 양자협력을 통한 조사협력 강화

□ 추진현황

- 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중국과 해양사고의 원활한 조사협력,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제11차 한·중 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 개최(양국 15명, 10.21, 한국 제주도)
제8차 한·중 해양사고 조사관 교환근무(2명, 11월말)

□ 추진계획

- 제12차 한·중 조사 협력회의 참가('16.상반기, 중국)
 - 양국 간 조사협력 평가, 주요 사고에 대한 의견 교환 등
- 제9차 한·중 해양사고 조사관 교환근무 실시('16.2분기)
 - 양국관련 해양사고 조사협력 강화, 조사코드 이행상황 파악 등
- 미국·호주·싱가폴 등과의 양자협력 협의 추진(연중)

다.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의 이행 정착

□ 추진현황

- 사고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없이 순수 사고원인 도출을 위해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에 따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조사협력 강화

* 원유운반선 우이산호 부두시설 접촉사고('15.1.8.)
화물선 파나막스 블레싱호 · 화물선 하모니 라이즈호 충돌사고('15.2.4.)
화물선 아이펍유안 · 컨테이너선 세튜호 충돌사고('15.9.15.)

□ 추진계획

-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에 아국 조사관 파견(상·하반기/별도 협의)
- 조사코드에 따른 특별조사를 위한 인력 확보 추진(연중)
- IMO 조사코드 대상 사고 발생 시 특별조사부 구성·운영(연중/대상사고 발생시)

일반 5-2

난파물 제거협약(WRC) 비준 및 국내도입 추진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난파물 제거협약* 채택('07.5) 및 발효('15.4)
- * (특징) 체약국 정부는 난파물 제거명령 및 관련비용을 보험자에 직접청구 가능, 선박은 보험가입 및 난파물제거비용 보장증서 소지 의무화
- 협약 체약국은 아직 제한적(한중일 모두 비체약)이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협약 수용방안 모색 필요

□ 추진계획

- (타당성 검토) 협약가입 시 사회적·경제적 편익분석 등 필요성 검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내 수용방안* 모색('16.상)
- * (1안) EEZ·국제항해선박에만 적용 / (2안) 영해·국내항해선박에도 확대 적용
- (비준입법)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협약비준 또는 관계법령(해사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법 등) 입법 추진('16.11. 국회제출)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 해상 특수구조장비 확충으로 조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중점 6-1)

* 수중수색구조 잠수지원정 설계('16.6), 다목적 구조보트 도입(2척)

□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강화로 해양구조 사각지대를 해소 하겠습니다.(중점 6-1)

* 민간구조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16.하), 민간 합동 훈련 실시('16.상·하반기)

□ 위기관리매뉴얼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해양수산 재난환경에 상응하는 현장대응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중점 6-2)

*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 실무·행동매뉴얼 보완, 도상·현장훈련 실시('16.5)

□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매뉴얼 개선, 해양·해안 방제장비 보강 등 해양오염 방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중점 6-3)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대응 계획서 전면 개정('16.상), 방제정 2척건조, 노후방제정 대체(1척), 오일펜스(300M), 유회수기(10대) 등 현대화

□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 매뉴얼 개발, 육상 대응기관과의 협업강화 등 사고대응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중점 6-4)

* 매뉴얼 개발('16.12), 화학사고합동방제센터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해적위험해역 모니터링, 아덴만 함정호송 지원, 해적범 발의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중점 6-5)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16.상), 하위규정 제정('16.하)

중점 6-1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협업기관	-
------	-------	------	---

가. 해상 수색·구조 장비 확충

☐ 추진배경

- 해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특수구조장비의 지속적 확충 필요

☐ 추진계획

- 수중수색구조(심해잠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잠수지원정 도입
 - * 現 설계 중('15.8.~ '16.6.) '17.12. 최종 도입 예정
- 해양사고발생 시 긴급구조를 위한 다목적 구조보트 도입(2척)
- 해상 112 및 항공구조대 임수수행 필수 구조장비 도입
 - * (해상 122) 공기압축기, 구조보트, 스쿠바 장비, 잠수복, 출동차량 등
(항공구조대) 항공구조용 통신기, 구조틀것, 전신 안전벨트, 로프 등
- 표면공급잠수장비, 수중탐색장비 등 심해구조잠수장비 도입

나. 민·관 수난구호 공조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발생 시 동원되는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강화를 통해 광활한 해양에서의 구조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체계적인 민간자원 관리를 통해 신속한 동원 시스템 마련
 - 전문구조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민간자원관리시스템 현황 관리
 - * 전문잠수사, 구난업체, 전문가, 잠수병 치료 전문병원 등 정보 수록
 - 해경안전센터별 민간해양구조대원 참여 확대 및 주기적인 교육·간담회 개최
 - * '14년 1,763척 → '15년 2,271척으로 약 29% 증가
- 민간의 훈련참여 확대를 통한 구조역량 배양 및 팀워크 구축
 - 민·관·군 합동훈련 시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 등 참여
 - * 훈련 동원 시 「수난구호법에」 따른 교육훈련 수당 지급 등 참여율 확대
 - 마을행정방송을 이용한 초기대응 강화 및 응급처치법 교육 실시
-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지원강화로 민간구조 활성화 분위기 유도
 - 구조 장비 무상대여, 복제 통일 등 민간구조세력 지원 확대
 - 우수대원에 대한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및 감사장 수여로 사기 진작

다. 해양 응급의료체계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도서지역 및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관리 필요
- 경비함정 ↔ 병원 간 응급의료 시스템을 연계하여 현장에서 즉시성 있는 응급의료 제공 및 응급구조사 양성 추진

□ 추진계획

- 신조 경비함정(3척 / 5002함, 3013함, 3015함)내 응급의료시스템 추가 구축
- 안정적 해양응급의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체계적 유지보수 관리
 - 既 설치된 함정 및 헬기 응급의료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통한 시스템 정기 점검·교육, 장비보수
 - * '08년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15년 현재 함정 139척, 헬기 11대 설치·운영 중
 - 전·후반기 순회 점검 및 운용자 교육 실시 등 원격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응급구조사 양성 및 관리
 - 해경안전교육원 응급구조사(2급) 양성과정(3회, 120명) 운영
 - 해경안전교육원 보수교육과정(2~3회) 개설 및 대한응급구조협회 사이버 위탁교육 과정 실시
 - * 응급구조사 현황 : 1급 응급구조사 48명, 2급 응급구조사 168명 보유

라. 특수구조훈련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대형·특수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심해잠수 등 특수구조 훈련 강화

□ 추진계획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내 전문교육훈련 기능(전술훈련팀) 활용, 구조인력(122구조대, 중특단 등) 교육·훈련 기회 확대

* 훈련대상 : 중특단, 122구조대, 함정 구난사, 항공구조대 등 총 530여명

- 구조잠수 단계별 자체 전문화 과정 운영(특별 교육훈련)

- (초급) 신입·전입 직원 대상 기본 로프·항공구조 및 스쿠버 기법
- (중급) 로프·항공 중급구조, 테크니컬(나이트록스)·표면공급잠수기법
- (고급) 로프·항공 상급과정 및 테크니컬(트라이믹스)·표면공급잠수기법, 잠수감독관 과정

- 해군본부와 협의, 심해잠수 등 해군위탁 교육 훈련 추진

- 심해잠수자격유지과정 등 총 4개 과정 개설

* 심해잠수자격유지, 심해잠수기본, 심해잠수감독관, 표면공급잠수장비 과정

마. 해양긴급신고전화 통합

□ 추진현황

- 다수의 신고번호* 운영으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고번호 통합을 통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 현행 : 범죄·재난 등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20여개 긴급번호 운영 중

□ 추진계획

- 긴급신고 공동 활용체계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치정보조회시스템, 통합연계관리 시스템 통합 구축
- 긴급신고 접수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및 공동관리센터 구축
 - 신고접수→기관연계·공유→지령전파→사건 공동대응이 가능
 - 긴급신고 연계체계 운영 시스템 및 비상접수센터 상황실 설치
- 긴급신고 전화 통합운용에 따른 접수시스템 개선
 - 노후 122 상황관제시스템 전면 교체 및 신고전화 연계를 위한 운영자 선발·교육

중점 6-2 해양사고 위기관리체제 정비

주관기관	해수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항만공사	협업기관	-
------	--------------------------	------	---

가. 대형 해양사고 수습 및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제 정비

□ 추진현황

- 재난 발생 시의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에 관한 교육 동영상 및 재난대응수칙(간단매뉴얼) 작성·배포('15.4)
- 해양 선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임무·역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등 표준·실무매뉴얼 개정('15.10~'16.上)
- 해양재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총괄부서 신설('15.1)

□ 추진계획

- 변화하는 해양수산 재난환경에 대비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지속 개정 추진(연중)
-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 실무·행동매뉴얼 보완
- 위기관리 매뉴얼의 소관부서별 임무·역할, 사고유형별 중앙사고 수습본부 구성 방안 등에 대한 도상·현장훈련 실시('16.5)

나. 기관별 위기관리 체제 유지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각 기관별로 사고 유형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유관기관, 업·단체간 역할 분담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이 필수

□ 추진계획

- 사고 초기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고대응 매뉴얼 개선 등 추진

<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부산청	○ 해양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보완 및 보고체계 상시 점검·교육 ○ 유관기관 및 업·단체 등 비상연락망 최신화
	인천청	○ 유관기관 및 업·단체 등 비상연락망 최신화 ○ 가용자원의 지원체계 확립 및 해양사고 위기대응매뉴얼에 반영
	여수청	○ 자체 해양사고 보고 및 수습요령 보완 - 해양사고 예방 차원 보고체계 상시 점검·교육 ○ 유관기관 및 업·단체 등 비상연락망 최신화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을지훈련 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마산청	○ 해양사고 관련 기관 및 업·단체의 비상연락망 정비 ○ 해양 선박사고(일반선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작성 - 민간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동해청	○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사고수습절차 등을 위해 해양사고 위기대응 현장 매뉴얼의 주기적 정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호·동해항 방파제 일대 경고표지판 및 구명부환 등 안전장비와 안내 경고판 설치 및 * 동해·목호항 일대 방파제 일제 점검을 통한 설치여부 추가 검토('16.3) ○ 낚시객 무단출입 통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통제대책 강구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의 확산을 방지를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 (충돌·좌초) 예방지원을 위한 가용 예인선 확보 및 지원 - (오염)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환경관리공단 방제정 운영 지원 - 관할항만 입항 선박 점검 시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점검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해양사고 위기대응 현장매뉴얼」 보완 및 최신화 ○ 비상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난업체, 예선, 도선사 등 지역 내 민·관 자원 조사 및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반영 ○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활용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 소관 업무별 비상연락체계 현행화(필요시) ○ 관내 사업장 소속 선박 육·해상종사자 비상연락망 정비(반기별) - 해상기상특보 등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사고예방활동 강화 ○ 해양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제·개정(필요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최신화 관리·유지(연중) - 직원들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각 과(소) 및 당직실에 매뉴얼 비치 ○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참가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초기대응 관리지침 활용, 초기대응 철저 - 자체 초기대응 추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유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확립 ○ 유류 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시 수습 반 편성운영 및 신속한 방제로 오염피해 최소화 ○ 해양오염사고 방제장비·물품 및 방제인력 확보 ○ 해양사고 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사건에 대한 기록 유지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위기대응조치와 절차를 구체화·상세화 - 상황발생 후 시간대별 기관별 조치 사항 명시 * (접수) → (상황전파) → (보고) → (구조·구난 초등대응) → (후속조치)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 어업무선국, 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기관 유기체제 구축 ○ 어항시설(방파제) 안전가드라인 설치로 안전사고 미연방지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 오염사고 사전대비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 - (예방) 방제자재 비축, 해양오염방지 지도단속 강화 - (대비) 방제대책 수립 및 방제지원 협조체제 유지 - (대응) 방제인력·자재 최대 활용으로 신속한 방제 실시 - (복구) 사고종료 후 사후관리 대책 강구 ○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연1회 이상)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유관 기관 간 협조체제 확립 - 비상연락망 최신화 등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를 통한 위기 관리체제 사전 정비 및 이행태세 확립 ○ 유류 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 시 수습반 편성운영 및 신속한 방제로 오염피해 최소화 ○ 어선사고 예방 대책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조업지도 - 도·해경·수협으로 구성된 어선안전조업 관계기관 회의 개최(연 6회) - 동절기, 태풍내습기 등 대비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실시(수시) -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 : 10회, 600척 ○ 연·근해어선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실시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최신화 추진(수시) ○ 주기적인 비상연락망 정비 ○ 공사 보유 방제장비 구매(오일펜스, 흡착포, 방제키트, 구명복)

다.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 추진배경

-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선박관련 사업체, 선박 소유자, 어업인 등 육·해상 분야의 민간자원 활용 필요

□ 추진계획

- 민·관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채널 다양화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민·관 합동 결함선박 감시체제 운영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 지방해양수산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 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좌초) 예방지원을 위한 가용 예인선 확보 및 지원 - (오염)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환경관리공단 방제정 운영 지원 ○ 여객선 안전사고 대비 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을지훈련 시행 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구난업체, 예선, 도선사 등 지역 내 민·관 가용자원 일제조사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 자원 활용위한 공조체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좌초) 예방지원을 위한 가용 예인선 확보 및 지원 - (오염)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환경관리공단 방제정 운영 지원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기관리체제 구축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동해청	○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체계 운용
군산청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해양사고 대응 훈련 시 적극 참여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을지훈련 시행 시 협조체제 구축
포항청	○ 해양사고 발생 시 자원동원을 위한 민간자원 조사 - 관내 보유 예선, 방제선 구난구조선 및 동원인력현황 등 파악
평택청	○ 항만종사자의 신고를 통한 결함선박 조기발견 및 효과적 점검 시행 - 결함선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스티커 제작·배포 등 적극적 홍보
울산청	○ 민·관 합동 결함선박감시체제 운영(연중) - 항만종사자 등의 취약선박 조기 발견으로 사고요인 사전 차단
대산청	○ 주요 해양사고별 민간자원 활용 공조체제 유지 - 예방지원을 위한 가용 예인선 확보 및 지원 -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환경관리공단 방제정 운영 지원 - 사고 선박에 대한 신속한 감항능력 평가(검사기관 합동)
목포청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현장·도상훈련 실시 및 협조체제 구축

라.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최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한 대형재난 발생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종합적 재난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 관련정보들을 단순연계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現 시스템으로는 돌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에 한계
- 재난 全 과정(예방→대비→대응→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여객선 사고대응 지원시스템 구축('16.상)
 - 여객선 발권현황 및 선박 운항정보(평형수, 기울기, 화재경보 등) 등을 연계하여 비상 시 신속한 승객대피 및 구조활동 지원 등
- 위성연계 광역선박정보 수집시스템 구축('16.상)
 - 연안 AIS 기지국 수신정보와 위성기반 AIS 위치정보 연계를 통한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탐지범위 확장 및 선박사고 대응능력 강화
- 항만 위험화물 재난대응 지원시스템 구축('16.상)
 - 위험물 취급항만에 설치된 CCTV에 대한 통합연계망 구축공유 및 위험물정보 제공 등

중점 6-3 친환경적인 방제시스템 구축 및 방제역량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
------	------------------------------	------	---

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

□ 추진현황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행동매뉴얼 개정('14.9/'15.3)
 - * 위기단계별 판단기준과 대응내용 명시,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사항, 위기경보 수준별 주관기관의 주요 조치내용 신설 등
-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및 국가긴급방제계획 분석 등 공단 사고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기획연구 추진 ('14. 9. ~ '15. 2.)

□ 추진계획

-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기본방제 계획서 및 지사 방제대응계획서 전면개정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방안 개선

나. 다양한 방제정 확보, 비축기지 운영 등 해양·해안 방제장비 보강

□ 현황 및 문제점

- 보유 방제장비 노후에 따른 대체·확보 시급 및 방제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방제지원을 위한 장비 미흡

* '15년말 기준 방제기자재 노후율은 32% 차지(전체 유회수기 중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유회수기 비율)

□ 추진계획

<국민안전처>

-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HNS 방제정 및 노후 방제정 대체 확보
 - 신규 유류 방제정 2척 건조(2년/3년차 사업), 신규 HNS 방제정 1척 건조(2년/3년차 사업), 노후 방제8호정(군산) 대체 진행(3년/3년차 사업)
- 항공방제장비 및 노후 유회수기 교체 등 방제장비 현대화
 - 항공운송용 방제장비(자동팽창식 오일펜스 300m, 봉쇄장비 1set) 확보 배치
 - 노후 유회수기 10대 대체(총 86대 중 25대 노후, 연차적 교체)
- 방제자원 전진배치를 위한 긴급방제지원센터 신축(목포, 15~16년)
-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소모성 방제자재 구매·비축(비축기지)
 - H/S호 사고와 같은 대형오염사고 초기 7일간 사용가능한 방제기자재 확보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오염사고 시 효율적인 방제장비 운영 및 대응을 위한 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부산, 목포, 평택)
- 어촌계·어항 등에서 오염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제창고 설치 추진
- 예방선 및 방제선 건조 추진
 - 2,500마력급 예방선 1척('16~'17년), 5,200마력급 예방선 2척('16~'17년), 500톤급 전문방제선 1척('16~'17년), 10톤급 방제작업선 2척, 50톤급 전문방제선 2척
- 주요 방제기자재 확보

장비명	수 량	비 고
유회수기	706.4kl/h	6.4kl/h급 1대, 20kl/h급 6대, 50kl/h급 5대, 66kl/h급 5대
오일펜스	5,920m	고형식B형 : 3,220m 신속전장형 : 1,500m 자동팽창식 오일붐(C형) : 300m 자동팽창식 오일붐(이중코일 C형) : 600m 자동팽창식 오일붐(이중코일 B형) : 300m
유흡착재	5,300kg	붐형 : 2,800kg, 매트형 : 2,500kg
고압세척기	4대	일체형 : 2대 / 분리형 2대
자갈세척기	3대	모래 겸용(자체 R&D 상용품)
유이송펌프	3대	-
멀티파워팩	1대	-
발전기	7대	대용량 1대 / 포터블 6대
방제장비용 드론	1대	-
보관시설(컨테이너)	7동	40ft 7동

다.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배경 및 필요성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통합방제시스템의 선진화로 효율적 해양오염사고 대응

□ 추진계획

- 중·대형오염사고 시 효율적 방제대응을 위한 방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개최방제사례별 전략 공유 등)
-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방제훈련 및 전문방제교육 과정 실시

라. 과학적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해안특성에 따른 방제기술 부족 및 해안오염평가방법 부재로 이해 당사자간 불신과 갈등 초래
-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학적인 해안방제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속초·동해안전서 관할 해안의 방제특성 정보, 방제자원 등 D/B 구축('16.12) 및 조사해안에 대한 '해안사전평가정보집' 작성
- 안전서·지자체별 해안오염평가팀 구성 및 교육 실시
 - 안전서·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역전문가, NGO 등 합동 구성
 - 안전서, 해안방제 책임기관(지자체·항만청·해군 등)대상 교육 실시

중점 6-4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체계 구축

주관기관	해수부, 국민안전처, 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
------	-------------------------	------	---

가.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관리기술 개발 및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울산 한양에이스호('15.1.11.) 및 중국 텐진항('15.8.12.) 위험위해물질(HNS) 유출사고로 국내 해양 HNS 사고 발생시 국가 대비·대응력 등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 HNS(위험유해물질)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 추진계획

<국민안전처>

- HNS 사고대응 매뉴얼 개발 추진
 - 프랑스(Cedre) “화학물질별 대응매뉴얼(황산)”번역·제작(12월)
- HNS 사고시 육상 대응기관과의 협업 강화
 - ‘화학사고합동방제센터’와 해양시설 HNS 사고 공동대응(연중)
 - 협업강화를 위한 유해물질 정보 교류 회의 등 추진(연중)
 - 해상 화학사고대응 전문가 발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연중)

<해양환경관리공단>

- 「HNS 사고관리기술 개발」 연구사업 지속 추진('15년~)
 - (사고 대비) 사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해역별 사고 위험평가 및 위험도지도 개발, 사고대응 전문가양성 체계 구축 및 교육 교재 개발, 관련법령 및 매뉴얼 정비 등
 - (사고 대응) HNS 대응 정보 DB 구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HNS 대기·해양 확산 예측 및 위험구역 설정 기술 개발
 - (사후 관리) 해저 침강 처리,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HNS 사고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HNS 사고대응 유관기관 협업 및 HNS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HNS 사고사례분석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나. HNS 전문요원 양성 및 물질별 지원체제 구축**□ 추진배경**

- HNS 사고발생 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 및 위탁교육 실시로 사고현장 실행력 확보
- 관련 교육과정의 지속적 개발과 주기적 훈련 등을 통한 민간 방제전문가 양성 및 인적 방제자원 확대
- HNS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부족

□ 추진계획

<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서별 HNS 사고대응 민·관 합동훈련 실시(6월)
- HNS방제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가 양성 등 사고대응 전문성 확보
 - HNS 전문방제 교육과정 개설(방제실무자 과정 1회, 관리자 과정 1회)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한 토론·실습형 교육 실시
 - * 개인보호복, 양압식호흡기, 유해화학물질 검지기 등 HNS 방제실습용 기자재 확충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교육 확대 운영(연중)
 - ‘해양오염 방제대응 경진대회’ 개최 및 대응요원의 사고수습 역량 평가를 통한 사고대응 전문성향상 유도(12월)

<해양환경관리공단>

- 공단 HNS 전문과정 자체 개설 및 운영(교육원)
 - 2016년 HNS방제실무자과정(1회) 개설(기존 2일 → 3일, 종합실습 반영)
 -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HNS방제 실습용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 시행
- 국내 HNS 방제 전문기관 교육과정 수료

다. HNS 사고대응장비·자재 보강

□ 추진배경

- HNS의 유출 및 HNS 운송선박의 충돌·화재 발생 등 다양한 사고유형에 대비한 방제장비 확보 필요

* 마리타임메이지호('13.12.29.) → 일반소화품 사용으로 화재진압효과 미흡

* 머스크쿠네호('14.10.15.) → 불산누출 시 중화약품 미보유로 소방방재청에서 실시

□ 추진계획

- HNS 사고대응 전용방제선 및 장비구매 추진

- 300톤급 HNS 전문 방제정 건조(기간 : '15~'17)

- HNS 화재사고 대비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4대 구입·비치(8월)

- HNS 소화약품 및 개인 보호장비 확충

- HNS용 내알콜 소화약품 30톤 및 화학보호복 16벌 확보(8월)

- 경비함정 등 승조원 1,000명에게 개인별 화학마스크 보급(8월)

중점 6-5

해적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유지·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국방부
------	-----	------	-----

가. 해적피해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민관군 합동 예방활동 강화

□ 추진현황

- 아덴만 함정호송 지원, 위험해역 운항선박 24시간 위치추적, 민관군 합동 해상훈련 실시 등 정부지원 대책 추진

* '15.2월(왕건함), '15.6월(충무공이순신함), '15.10월(최영함)

- 선사 및 선박에 대한 위험해역 통항계획 수립, 통항보고 등 IMO가 승인한 해적피해 예방지침을 이행하도록 권고

* 민관군 합동 해적피해예방대책 마련 워크숍('15.9), 선사설명회 개최('15.5) 등

□ 추진계획

-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시체제 유지·강화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운영(연중)
 - 민·관·군 합동대책반을 운영(연 2회)하고, 해운선사·선박에 대해 해적사고 발생동향 및 예방대책 등 해적관련 정보 제공(분기별)
 - 해적대응 관련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사설명회 개최(연 2회)를 통해 선사의 자구능력 제고

나. 해적피해 예방 대응 근거 규정 마련

□ 추진현황

- 해적법* 발의(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14.11.3.) 및 상임위 상정('15.2.9.)을 통해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합법화 및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근거 마련

* 제명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해적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하위규정* 제정 추진('16.하)

* 해적행위 피해방지와 대응, 선원 교육훈련 범위, 해상특수경비업 허가 조건 및 적격성 심사 등 세부 규정 마련

- 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해적피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해적피해예방 종합대책(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16.상)

* 해적행위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 및 임무 부여,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 방안 수립, 해적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전파·보고 등

중점 6-6 선박 보안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보안사고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계 정비

☐ 추진현황

- 테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배포('15.7)
- 국제행사의 안정적 개최 지원을 위해 선박 등에 대한 보안등급 상향 및 대테러 비상대책반 가동(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5.7)

☐ 추진계획

- 24시간 빈틈없는 보안체계 구축으로 선박 및 항만이용자를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테러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16.상)
- 각종 국제행사 대비 보안활동 강화(보안등급 상향, 대테러 비상대책반 가동 등) 추진(연중 수시)

나. 선박 보안심사원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국통제 및 관련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보안심사원에 대한 지속적 역량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선사 및 선박의 보안관리체제 심사업무 담당자(보안심사원)에 대한 전문교육(신규자 교육, 보수 교육 등) 실시('16.상)

다. 회사·선박 보안책임자 교육·훈련 및 선박보안확보 능력개발 지원

☐ 추진배경

- 선사 및 선박의 보안책임자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선사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 보안책임자의 보안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교육 지속 시행(연중, 해양수산연수원·한국선급)
- 선사보안 관련 국내외 정보공유 및 선박 보안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보안훈련 실시('16.12)

일반 6-1 해양오염에 대한 민간 대응기반 강화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
------	-------------------	------	---

가. 자원봉사자 및 민간 방제업체 교육시스템 구축(해양환경관리공단)

☐ 추진배경

- 민간 방제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가 방제자원 확대
- 전문 방제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 주요 정유사 실무자 대상 방제교육 추진(1회 이상)
- 방제 관련 유관기관 대상 방제교육 추진(3회 이상)
 - 한국농어촌공사(1회), 한국수력원자력(1회), 공무원(1회 이상)
- 자원봉사관리자과정 개설(1회) 및 교육이수자 활용 증대
 - 관할 지자체, 항만청, 해경 등에 교육이수자 현황 통보
 - 향후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교육이수자 우선 방제작업 투입
-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 실습형 교육 실시

나. 민간 방제세력과 협력체제 강화(국민안전처)

□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지역어민을 방제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촌계 중심으로 “자율방제대” 창설('10.7)
 - 관련단체(자원봉사)의 참여를 위해 “국민방제대”로 확대 운영('14. 1)
- '15년도 어촌계·봉사단체를 대상으로 8개 방제대 추가 등록
 - 총 51개(어촌계 47, 봉사단체 4), 인원 764명, 선박 246척
 - * '14년 43개(인원 665명, 선박 220척) 대비 99명(15%), 선박 26척(12%) 증가
- 오염사고 발생 시 해경 장비와 방제업체, 구난업체 등 민간 방제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사전 협약체결 추진
 - 총 90개사(장비책임지원 36, 파공봉쇄 27, 적재유 이적 27)

□ 추진계획

- 민간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방제대 지정 및 지원 강화
 - 오염사고 다발·취약해역을 중심으로 방제대 확대 지정·운영
 - 방제대원 초동방제를 위한 방제자재 전진 배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위주의 순회 교육·훈련 실시
 - 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제(조끼, 모자 등) 지급 및 포상 등
- 민간 방제·급유업체 및 구난업체 등과 협력 활성화
 - 기름이적, 파공부위 봉쇄 등 우수 활동업체와 사전 협약 체결
 - 협약체결업체 보유 선박, 장비, 자재 및 비상연락망 등 D/B화

다. 퇴직한 방제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 추진배경

- 방제전문성 및 경험을 겸비한 퇴직직원을 전문방제교육 등에 강사로 활용

☐ 추진계획

- 방제경험 등이 우수한 퇴직자(또는 공로연수자)를 방제관련 교육 과정 강사로 적극 활용
- 해안오염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관리 등 방제작업 참여 추진

일반 6-2	방제전문 교육 · 훈련 강화
--------	------------------------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협업기관	-
------	-------	------	---

□ 추진현황

-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현장 방제기술 체득 및 팀워크 강화
 - * 합동훈련(해상, 해안, HNS) 65회, 도상훈련 17회, 기술훈련 458회('15.10월)
- 방제요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 전문성 제고
 - * 내 · 외 전문기관 위탁 및 해경안전교육원 교육(14회 214명)
 - ** 전 방제요원 대상 방제장비 정비·운용기술교육(14회 235명)

□ 추진계획

- 해역특성과 사고상황에 맞는 실전형 방제훈련 실시
 - 제6차 NOWPAP 한 · 중 합동방제훈련 실시
 - * '16.5월, 중국 위해항 인근 해상, 방제정 1척 참가 합동훈련 및 공개행사 등
 - 대규모 해양오염 대비 민 · 관 · 군 합동방제 현장훈련 내실화
 - * 해상방제 · 해안방제 · HNS대응훈련(서별 년1회), 불시훈련(지방본부별 년2회)
 - 방제대책본부 운영 및 방제전략 수립 도상훈련 강화
 - * 방제대책본부 운영 · 방제전략 수립훈련(서별 년1회)
 - 해양오염 사고 응급 초동조치 기술훈련 강화
 - * 오일펜스 설치훈련(월1회), 선체파공 봉쇄훈련(분기1회), 방제자재 항공운송 훈련(반기 1회)

- 해양오염 방제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방제요원 수준별 현장중심의 맞춤형 방제교육 실시
 - * 교육원, 방제전문과정(Lv1~3) 및 소형방제작업정 운용과정 운영
 - 방제장비 성능 향상을 위한 정비기술 교육
 - 선진 해양오염 방제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 연수교육 추진

일반 6-3 해양시설 유류오염 대응체계 구축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협업기관	-
------	-------	------	---

□ 현황 및 문제점

- 오염사고의 복합·다양화에 따라 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의 자체 방제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나,
- 사업장 비상대응체제의 척도인 오염비상계획서가 검인·비치 의무만 있어 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 요구

□ 추진계획

- 사업장의 해양오염사고 자체 대비·대응역량 강화 지원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표준서식 개발·보급
 - * 오염사고 초기 현장작업자가 신속·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제시
 -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운용 적정성 집중 점검
 - * 비상계획서에 따른 오염사고 대비·대응 태세 점검(연 1~2회)
 -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 사업장 자체 사고대응역량 확인·개선 유도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제도 및 미 이행 시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 선박·시설의 주요설비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검인 의무화
 - * 선박·시설 자체 방제교육·훈련 등 미이행 시 처벌규정 신설

V

투 자 계 획

V. 투자계획

□ '16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전체 투입예산은 약 6,112억원

- 해수부 2,687억원(43%), 지방자치단체 2,474억원(40.4%), 공공기관* 703억원(11.5%), 국민안전처 246억원(4.0%) 등

*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상교통 환경 구축사업(추진과제 4)에 전체예산의 55% 소요

- '추진과제 1' 선박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 815억원
- '추진과제 2' 선박안전성 강화 : 734억원
- '추진과제 3'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307억원
- '추진과제 4' 스마트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 3,371억원
- '추진과제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122억원
- '추진과제 6'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 765억원

【 과제별, 기관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진 과제 1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 3	추진 과제 4	추진 과제 5	추진 과제 6	합계
합계	81,154	73,406	30,743	337,163	12,228	76,543	611,237
해양 수산부	75,838	53,247	28,726	93,233	12,228	5,497	268,769
지방 자치단체	5162	19,904	-	222350	-	-	247,416
공공 기관	100	255	1765	6,914	-	61,349	70,383
국민 안전처	54	-	252	14,666	-	9,697	24,669

붙임 1

과제별 소요예산

□ (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단위: 백만 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1-1. 인전과실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내실화		264
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해수부, 지방청	22
나. 종사자 안전의식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사고조사 전문성 제고	중앙해심	242
다. 해양사고 관련자 징계 집행유예 직무교육 시행	중앙해심	-
중점 1-2. 중소형 선박 해기사 면허취득 요건 개선		-
나. 예인선 항해사에 대한 교육 강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중점 1-4. 우수선원 고용여건 개선		1,256
가. 내항선박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확대	해수부	-
나.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1,256
중점 1-5. 선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77,182
가. 선원복지 증진 및 선원 취업 지원	해수부	5,782
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시행	중앙해심	100
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수부, 지자체	71,300
중점 1-6. 외국인 선원의 근로 여건 향상		-
가. 외국인 선원 권인보호, 직무환경 개선 및 안전교육 시행	해수부	-
중점 1-7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486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해수부, 지자체	486
중점 1-8 해사 전문인력 양성		1,912
가. 우수 고급 해기사의 양성 확대	해수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12
나.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 해외진출 지원	해수부	200
다. 새로운 운항시스템 및 운항기술을 습득한 해기사 양성 지속 추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00
일반 1-3.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교육체계 확립		54
가. 수상레저기구 조종교육 내용 및 시설 정비	국민안전처	54
합 계		81,154

□ (추진과제 2) 선박 안전성 강화

(단위: 백만 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2-1. 중·소형 유조선 안전 제고		—
가. 유탱커 등의 화재대비 안전성 강화	해수부	—
중점 2-2. 어선 안전관련 항해·통신장비 설치 확대		440.2
가. 어선 안전관련 항해·통신장비 설치 확대	해수부, 지자체	440.2
중점 2-4. 체계적 해양안전 기술개발 추진		24,858
가. 해양안전 기술개발 과제 지속 발굴추진	해수부	24,858
나.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	해수부	—
다. 구명조끼 관리방법 강화 및 구체화	해수부	—
중점 2-6. 노후선박의 안전검사 강화		20,159
가. 선령 25년 이상 국제여객선 반기별 특별점검 실시	해수부	—
나. 노후선박(어선)에 대한 검사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다. 선박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255
라. 노후어선 감축 및 장비개량 지원 사업 추진	지자체	19,904
중점 2-7.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가. 외국 선급과 정부대행검사 대행협정 체결	해수부	—
나. 북극항로 진출 국적선박의 안전운항 지원	해수부	—
다. 레저선박 우수사업장 지정 및 건조·검사기준 선진화 추진	해수부	—
라. 선박용물건 검사제도의 관리 강화	해수부	—
중점 2-8. 안전취약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건조 자금 지원		16,094
가. 내항선박의 신조자금 지원체제 구축	해수부	16,094
일반 2-5. 소형어선의 생존성 강화		—
가. 소형어선의 생존성 강화	해수부	—
일반 2-7. 여객 이용시설 등에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 강화		11,855
가. 사회약자의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이용편의 증진	해수부	11,855
합 계		73,406

□ (추진과제 3)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단위: 백만 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3-1.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		—
가.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해수부	—
나. 사고선사·선박 수시심사 실시	해수부, 지방청	—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업체 역량강화		—
안전관리대행업체 역량 강화	해수부	—
중점 3-3. 내항 여객선 및 시운전 선박 안전운항 관리 강화		—
가. 내항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강화	해수부	—
나. 신조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지방청	—
중점 3-6. 지자체 등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		25,471
가. 지자체 관할 항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해수부, 지자체	25,281
나. 해양사고방지 및 전문 연구기능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190
중점 3-7 항만국통제[PSC] 강화 및 국적선 안전관리 우수국가 유지		114
가. 국적선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	해수부, 지방청	—
나. 국내입항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해수부, 지방청	114
다.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	제주단	—
중점 3-8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2,400
가. '15년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의 정책 환류	해수부	—
나. 선박통항안전 위해요소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	해수부	2,400
일반 3-1. 선박검사의 관리체계 강화[취약선박별 사고관리체계 구축]		—
선박검사의 관리체계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일반 3-2.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182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민안전처	182
일반 3-4.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
일반 3-5. 항만내 선박급유선 등의 자체 안전관리 체제 확립		2
가.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및 적정성 검토 규정 마련	해수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
나. 항만공사 시행사에 의한 해양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지방청	2
일반 3-6.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1,134
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
나.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국민안전처	70
다.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160
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929
일반 3-8. 경인아라뱃길 통항선박 관리 강화		1,415
가. 경인아라뱃길 안전운항 전담조직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
나.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 안전환경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
다. 갑문안전시설, 방충재, 조명시설 개선 및 보강설치	한국수자원공사	1,415
합 계		30,743

□ (추진과제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단위: 백만 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4-1. 항만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13,685
가. 개항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운영	해수부, 지자체 지방청,	13,685
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개선	국민안전처	-
중점 4-2. 선박 통항 위해요소 발굴·개선		222,350
가. 선박교통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체제 구축	지자체, 지방청, 항만공사	84,798
나. 장기 정박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지자체, 지방청	-
다.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한 투자 강화	지자체, 지방청 항만공사	137,552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 등 적기 제거		40,888
가. 불법어로 합동 단속 및 계도 강화	해수부, 지자체, 지방청	6,163
나. 항행장애물 처리	지방청	-
다. 로프·페그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해수부, 지자체, 지방청	34,505
라. 침몰선·방치폐선 관리강화	해수부, 지자체, 지방청, 항만공사	220
중점 4-4.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14,666
가.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국민안전처, 부산시	14,666
중점 4-5. e-Nav 체계 해양안전정보시스템 구축		8,820
가. 한국형 e-Navigation 체계 구축	해수부	8,500
나. e-Navigation 전략 기반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수부	320
중점 4-6. 미래형 표지정보 제공		4,400
가. 다목적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기준국 기술개발	해수부	1,700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나.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개발	해수부	700
다. 등대시설을 활용한 해양·기상정보 제공	해수부	2,000
중점 4-7. 정밀도 높은 해도 제작 보급		17,140
가. 연안 해역에 대한 기본·정밀조사	국립해양조사원	9,600
나. 주요 항만해역에 대한 정밀수로측량	국립해양조사원	2,000
다. 항해안전을 위한 최신 해도 제작	국립해양조사원	5,200
라. 최신 항해안전정보 지속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340
일반 4-1.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개발 운영		3,100
가. 계류시설 개발시 선박·승하선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강화	해수부	-
나. 내항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해수부	3,100
일반 4-2. 해양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		6,815
가. 연안 해역에 해양 이상현상 감시 체계 구축	기상청	300
나.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기상청	4,743
다. 해양기상관측 전용선박 운영	기상청	1,692
라. 해양기상 예측 신뢰성 증진 및 예보 신속 전달	기상청	80
일반 4-4. 어장표지 표준화 및 항로표지 식별성 강화		-
어장표지 등의 표준화 추진	지자체	-
일반 4-5. 해수유동 모니터링 등 해양관측 시스템 확대		99
가. 실시간 해양관측 및 정보제공	국립해양조사원	5,200
나. 실시간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운영	울산항만공사	99
합 계		337,163

□ (추진과제 5)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단위: 백만 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5-1.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능력 제고		-
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능력 제고	해수부	-
중점 5-2.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50
가. 해운·조선 강국, 사무총장 배출국 위상에 걸맞는 IMO 대응기반 구축	해수부	-
나. 국제해사기구 대응 전략의제 개발 및 협업체계 강화	해수부	-
다. 국제해사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	해수부	-
라. 해사산업계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전파	해수부	-
마. '국제유류오염손해 배보상 기금' 관련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해수부	50
중점 5-3. 양·다자간 교류 및 기술협력 공고화		-
가. 양·다자간 교류 및 기술협력 공고화	해수부	-
중점 5-4.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지속 전개		406
가. 국제기구와의 해적퇴치 협력강화	해수부	-
나. 아시아해적방지협정(ReCAAP)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해수부	150
다. 선박위치정보(LRIT) 공유로 구조대응 협조체계 증진	해수부	256
다. 해운 업·단체에 해적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해수부	-
중점 5-5. 항로표지 국제 교류협력 확대		-
항로표지 국제 교류협력 확대	해수부	-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5-6.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주도		—
가. 전 세계 선박평형수 전문가 참여 국제포럼 개최	해수부	—
나. 해양환경분야 IMO 국제회의 대응 및 양자 협력 강화	해수부	—
중점 5-7 해양수산 관계자 해사안전의식 제고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	해수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중점 5-8 대국민 해사안전 생활화		2,347
대국민 해사안전 생활화	해수부, 지자체	2,347
중점 5-9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제고를 위한 체험시설 건립		9,252
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해수부, 지자체	5,000
나.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해수부, 지자체	4,252
일반 5-1. 해양사고 조사 심판 국제협력 강화		173
가.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중해심	101
나. 양자협력을 통한 조사협력 강화	중해심	12
다.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의 이행 정착	중해심	60
일반 5-2. 난파물 제거협약(WRC) 비준 및 국내도입 추진		—
난파물 제거협약(WRC) 비준 및 국내도입 추진	해수부	—
합 계		12,228

□ (추진과제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단위: 백만 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6-1. 해양사고 수색 구난 능력 제고		8,304
가. 해상 수색 구조 장비 확충	국민안전처	6,478
나. 민·관 수난구조 공조체계 강화	국민안전처	313
다. 해양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처	1,448
라. 특수구조훈련 강화	국민안전처	65
마. 해양긴급신고전화 통합	국민안전처	-
중점 6-2. 해양사고 위기관리체제 정비		20
가. 대형 해양사고 수습 및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제 정비	해수부	-
나. 기관별 위기관리 체제 유지관리	해수부, 지자체	20
다. 민간자원 활용도 강화	해수부	-
라.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3,500
중점 6-3. 친환경적인 방제시스템 구축 및 방제역량 강화		61,550
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	해양환경관리공단	48
나. 다양한 방제정 확보, 비축기지 운영 등 해양·해안 방제장비 보강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안전처	61,257
다.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해양환경관리공단	15
라. 과학적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230
중점 6-4.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체계 구축		2,359
가.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관리기술 개발 및 대응 체계 구축	해수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안전처	1,837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나. HNS 전문요원 양성 및 물질별 지원체제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민안전처	29
다. HNS 사고대응장비·자재 보강	국민안전처	493
중점 6-5. 해적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유지강화		140
가. 해적피해 방지·대응을 위한 민관군 합동 예방활동 강화	해수부	140
나. 해적피해 예방 대응 근거규정 마련	해수부	-
중점 6-6. 선박 보안관리 강화		-
가. 보안사고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계 정비	해수부	-
나. 선박 보안심사원 역량 강화	해수부	-
다. 회사·선박 보안책임자 교육·훈련 및 선박보안확보 능력개발 지원	해수부	-
일반 6-1. 해양오염에 대한 민간 대응기반 강화		196
가. 자원봉사자 및 민간 방제업체 교육시스템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18
나. 민간 방제세력과 협력체제 강화	국민안전처	170
다. 퇴직한 방제 전문인력 재교육을 통해 활용	해양환경관리공단	8
일반 6-2. 방제전문 교육·훈련 강화		500
방제전문 교육·훈련 강화	국민안전처	500
일반 6-3. 해양시설 유류오염 대응체계 구축		-
해양시설 유류오염 대응체계 구축	국민안전처	-
합 계		76,543

붙임 2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I 배 경

- 해양이용 욕구 증대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추세*에 있어 대형인명사고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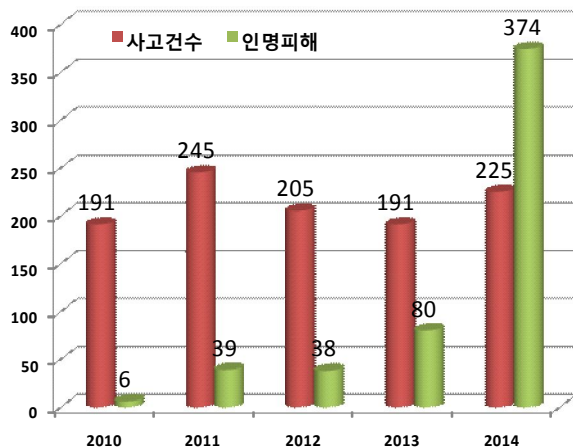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405만명이 다중이용선박 이용(평균 3.3% 증가)

【 다중(多衆) 이용선박의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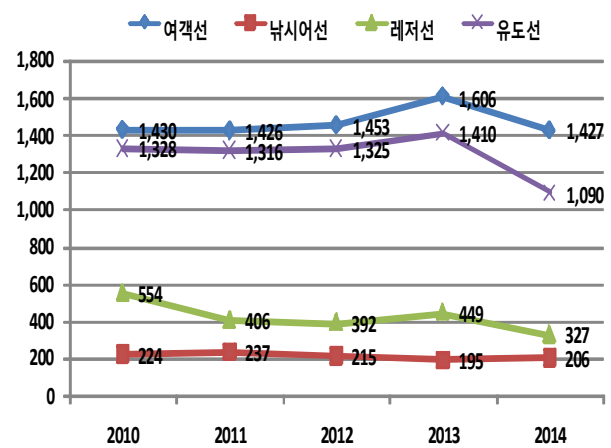
- ▶ 선원 등을 제외한 13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승객 등으로 승선하는 선박(여객선, 유·도선, 통선, 낚시어선, 요트·보터보트 등 레저선박)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사고('14.9.30) 등으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최근 5년간 1,057건의 다중이용선박 사고가 발생(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는 537명, 세월호 304명 포함)



【 연도별 해양사고(건) 및 인명피해(명) 현황 】



【 다중이용선박 이용현황(만명) 】

- 선종별 사업특성을 반영한 개별법령*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선종간 안전관리 불균형 초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 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 다중이용선박 이용관련 대형 인명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통일된 안전관리 기준의 마련 및 이행 필요

II 현 황

□ (등록) 전국적으로 약 2,600여척의 다중이용선박 등록·신고

【 다중이용선박 등록·신고 현황 】

(단위 : 척)

구 분	합 계	여객선	유도선 (해수면)	통 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20톤↑	20톤↓
등록척수	26,116	168	1,999 (506)	245	4,381	834	18,489
13인이상	2,596	168	402 (304)	113	1,266	423	224
관련규정		해운법	유·도선 사업법	항만운송 사업법	낚시관리 및육성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 (운항) 여객선 이외는, 영세한 규모와 부정기적 영업형태로 운항

- (여객선) 정기적인 해상항로를 주로 주간에 운항하며 여객과 화물 운송, 전국적으로 95개 항로, 168척이 운항중
- (유도선) 관광, 유락 또는 근거리를 왕복운항하며 여객 또는 여객·화물에 특정 서비스 또는 수송 서비스를 제공(연 천만 명 이상 이용)
- (통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주로 항만구역(31개 무역항 등)에서 선원, 작업인력 및 선용품 등을 운송하며, 평수구역을 운항
- (낚시어선)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낚시인을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 할 수 있도록 승선 서비스 제공, 어한기 부업으로 영업을 허용
- (레저선박) 취미, 오락 등 활동에 사용되며, 전국에 산재된 다수의 영업장(성수기 기준 해수면 414개소, 내수면 560개소)을 기반으로 운항

☞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교통수단, 레저활동 및 해상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수면과 내수면에 걸쳐 다양하게 운항

* 최근 해양이용 및 해양레저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의 이용 수요와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III 문제점

- (안전관리)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미흡
 - (선원자격) 13인 이상 승객이 승선하는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승무기준^{*}(자격·인원) 적용
 - * 여객선·유도선·레저선박은 2명 승선(6급 항해사 1명, 소형선박조종사 1명), 기타선은 1명 승선(소형선박조종사 1명) 기준 적용
 - (승선정원) 선종에 따라 승선인원 산정방법이 상이^{*}하고, 일부 선박의 경우 선원과 승객의 구분 없이 최대승선인원만을 산정
 - * 톤수에 의한 승선정원 산정(톤수*2+3)시 면적에 의한 산정방식 대비 약 1.3배 과다산정
 -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설비기준 등에 따라 항행구역이 정해지나, 낚시어선, 레저선박의 경우 별도의 기준 적용
- (설비기준)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라 서로 다른 안전기준을 적용
 - * 구명·조난발신설비 등의 탑재 및 구조설비 기준이 선종별로 상이
- (관리체계) 선박 유형별 사업면허 및 안전관리체계의 다원화로 통일성 있는 안전정책의 추진과 관리에 난맥
 - * 안전관리 기관과 책임이 선종별 사업법령에 따라 해수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안전관리 체계의 일관성 결여
- (안전의식) 장기간에 걸친 일상적·관행적 운항으로 선주·선박 운항자 및 이용객의 안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안전여건) 육상에 비해 작은 내수시장 규모 및 열악한 통신 환경으로 인한 소형 선박용 안전설비 기술개발 투자 미흡
 - * 해양수산 R&D 예산 총 5,911억원 중 3% 차지('15년 해양안전분야 R&D 예산 178 억원)

☞ 선종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및 설비 기준, 열악한 운항 여건, 운항자·이용객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IV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

【 정 책 목 표 】

- ▶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인명사고 최소화
- ▶ 연안해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및 해양 안전문화 혁신
- ▶ 유관기관간 협업강화를 통한 선박안전관리 체계 혁신

개선분야	세부 추진과제
1. 안전관리 기본요건 개선 및 제도 혁신	1-1. 승선정원 산정방식 개선 1-2. 승무기준 강화 1-3.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1-4. 입·출항 신고제도 실효성 확보 1-5. 운항가능해역 및 영업시간 개선 1-6. 사고이력 관리를 통한 면허기준 강화
2. 인명안전 우선의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 적용	2-1. 구명설비 탑재기준 강화 2-2. 복원성 등 선박설비기준 2-3.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 및 작동 의무화 2-4. 자동 조난신호발신장치 개발 및 장착 추진 2-5. 구명조끼 상시 착용 대상 확대 2-6. 선박안전검사 강화
3. 보다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3-1. 안전한 선박운항여건 조성 3-2. 양식장, 폐기물 등 항행 위해요소 제거 3-3. 선박안전점검 실효성·전문성 제고 3-4. 해양안전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3-5. 내수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역량 강화 3-6. 승객보험·보상기준 현실화
4.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화	4-1. 해양안전 문화 확산 4-2.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4-3. 승무원, 승객 대상 안전의식 제고 4-4. 범국민 해양안전 의식제고 기반시설 확충

V 세부 추진계획

1 안전관리 기본요건 개선 및 제도 혁신

◆ 승선정원 산정방식 개선, 안전관리 승무원 탑승, 입출항 신고 제도 실효성 확보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제도 혁신

1-1. 인명안전 위주로 승선정원 산정방식 개선

○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 산정방식을 현행 톤수기준의 간이계산 방식에서 승객안전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개선 검토

* 낚시어선의 구조, 선형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 승선인원 산정기준 개발 및 적용

○ 제도적으로 선원과 승객(선원이 아닌 자)을 분리*하여 안전관리 주체와 피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관리 책임 부여

* 최대승선인원 = 선원 + 승객(선원이 아닌 자)

- 안전관리 주체인 선원에게 출항전 안전교육, 비상시 대응 등 책임을 부여하고, 승객에게는 안전수칙 준수의무 부여

1-2. 승객 안전관리 개선

○ 먼바다(평수구역 초과) 운항시, 승객 관리자 승선 추진

1-3.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 승객 안전관리, 해상교통항법 등 인명안전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교과 중심으로 기존 교육과정 개편

* 교육시간 확대(4시간 이상) 및 시청각 교육교재 개발

○ 선박점검 및 검사시 선박안전점검관 등에 의한 1 : 1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눈높이 교육교재* 제작·배포

* 선박안전운항 지침, 승객안전관리 수칙, 구명장비 활용법 등

1-4. 입·출항 신고제도 실효성 확보

- 선종별로 상이하게 시행중인 다중이용선박의 입·출항 신고 절차 및 체계 개선추진
 - 입출항 신고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승선명부 작성 및 입·출항 신고 의무화, 위반시 처벌강화 및 관계부처 합동 불시 현장점검 정례화 등 제도 실효성 확보
 - * 해수부,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
 - 승선명부 부실작성 관행개선을 위해 승객이 직접 명부를 작성하고, 선장이 승객의 신분을 확인토록 의무 부과

1-5. 운항가능해역 및 영업시간 개선

- 야간운항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특별안전관리* 실시
 - * 입출항 신고 시스템(향후개발 예정)을 활용한 야간운항 신고, 선박위치 발신장치의 작동 여부 관계기관 불시 합동점검 등
-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의 운항해역을 선박의 설비 및 구조 등에 따라 현실성 있게 조정
 - * 용역결과, 운항 및 영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항행구역의 설정 검토

1-6. 사고이력 관리를 통한 면허 발급기준 강화

- 다중이용선박 사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및 면허발급시 사고 이력·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 시행
 - * 내항여객선 사업자 선정시 안전관리 및 사고이력 평가 시행중('15.7~)

2 인명안전 우선의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 적용

◆ 안전·구명 설비, 선박위치발신 장치 및 선박 구조기준 등을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하여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성 제고

2-1.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설비 탑재기준 통일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구명뗏목, 구명조끼, 구명부환, 자기 발연신호 등) 탑재기준 통일 적용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개별법상 안전설비 기준 개정
- 구명뗏목 등 선박의 선형·톤수·항행구역에 따라 탑재여부가 결정되는 설비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 병행
 - * 소형선박용 구명뗏목 연구개발('13.9~'15.9, 3억원) 결과에 따른 시제품 개발 추진

2-2. 복원성 기준, 육상용 기관 사용제한 등 설비기준 강화

- 소형선의 선형, 선박의 크기, 고중량 낚시장비·화물 등의 선적·고정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 복원성 기준 검토 및 적용
- 중고 수입 레저선박의 경우 기존 복원성 자료 검증 및 국내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등 제도개선
- 전체 해양사고의 약 24%를 차지('15년 상반기)하는 어선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 낚시어선의 육상용 기관사용 제한
 - * 낚시어선의 8.8%(110척)가 육상용(자동차, 중장비) 중고기관을 사용 중
 - ** 신규 등록 선박 및 기존선의 기관 교체시 적용(기존선 경과규정 설정)

2-3.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 및 작동

-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등과의 충돌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구조 지원을 위해 AIS 장착 및 작동 추진
 - *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53%(678척)은 AIS 설치중

2-4. 자동 조난신호발신장치 개발 및 탑재 추진

- 선박 침몰시 신속한 조난신호 발신을 위한 자동 조난신호발신 장비(자동발신기능) 개발 및 탑재 추진
 - * 소형선박용 자동 조난신호발신 장치 개발을 위한 R&D 추진
- 소형선박의 특성에 맞는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 장비 개발 및 보급·시스템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 * 기술개발 시 조난신호 오작동을 저감, 소형 선박 탑재가능 여부 반영

2-5. 구명조끼 상시착용 대상 확대

- 승객의 외부 갑판상 활동시 및 좌석착석이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 * 레저선박 외에는 타선종의 상시 착용의무 규정 없음(낙시어선의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법령은 국회 계류중)
- 구명조끼의 편의성 개선을 통해 상시착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착용·관리 기준 개정추진

2-6. 선박안전검사 강화

- 다중이용선박의 운항안전성 제고를 위해 검사주기와 기준의 통일화 및 운항실태를 고려한 검사항목의 합리적 조정 실시
-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설비 및 선체상태 등에 대한 검사항목* 등 추가 검토(비사업용 레저선박 별도시행)
 - * (현행) 안전설비 기준 충족여부 → (개선) 선체상태 검사 등 추가
- 안전설비 유지·관리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 및 지자체 합동 불시점검 정례화
 - * 다중이용선박 안전제고 T/F와 연계,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실시

3] 보다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 다중이용선박의 주요항로인 연안해역 항행위해요소 제거, 선박의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등 안전한 선박운항환경 조성

3-1. 해상교통환경 평가·개선을 통한 안전한 선박운항여건 조성

- 연안해역 주요 선박 통항로, 사고다발해역, 통항 밀집해역의 해상교통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 '15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연안해역, 인천·여수광양·울산) 결과의 이행 및 '16년 용역(대산·평택당진·부산 등 정밀 안전성 평가) 추진(24억원)
- 항행장애물 제거, 항로 중심, 신규항로 개설, 정박지 조정 등 항만 및 연안해역 선박통항여건 개선 추진

3-2. 양식장, 폐그물 등 항행 장애요소 제거활동 강화

- 연안해역 항해안전도 제고를 위해 양식장의 지정해역 준수, 폐그물 등 해양 부유물 제거사업 추진 및 어민계몽 실시
 - * 폐그물 등 사고현황 : '12년(208건) → '13년(149건) → '14년(144건) / 침몰 2건, 인명사상 3명
 - ** 침적폐어구 현황(추정) : ('13년) 140천톤 → ('17년) 270천톤 → ('20년) 370천톤
- 폐그물 등에 대한 생애주기형 관리제도 도입,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시 다중이용선박 통항해역 우선시행 추진

3-3. 선박 안전점검·검사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

- 분산된 안전관리기준의 통일 적용, 기관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지침* 개발
 - * 입출항신고, 승무기준, 교육·훈련, 안전관리 제도 및 구명설비, 선박구조 기준 등
- 선박검사 내실화를 위한 검사인력 충원 협의
 - 안전관리 업무증가에 따른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충원으로 검사 실효성 제고
 - * 현) 선박안전기술공단외 검사원 1인당 연평균 294척 선박검사

3-4 해양안전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전자해도, 선박위치발신장치 및 자동조난신호 발신장치 등 모바일 기반 소형선박용 통합 항해·통신 장비 개발
 - * 측심기(어탐기), 초단파 통신장치, 레이더, GPS 플로터, AIS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합한 단일 단말기 개발 추진
- 페어망·페어구에 의한 추진기 로프 감김사고 예방장치 등 항행안전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을 통한 연안 최대 100km 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환경(LTE-M) 구축
 - *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ICT를 융·복합하여 각종 해양안전정보를 선박과 육상간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16~'20, 1,308억원 투자)
- 사고취약선박 원격 모니터링, 최적항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LTE-M을 이용한 선박재난통신 및 안전운항 지원체계 구축

3-5. 내수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구멍뗂목 등 해수면 적용 안전설비의 일부를 완화적용하는 대신 필수적인 안전설비(구멍조끼, 부기)의 탑재·관리 의무 강화
 - * 해수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해수역이 정온하고, 침몰·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은 내수면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설비 차등적용
- 지자체 등의 점검역량 강화를 위한 해기전문인력 보강, 전문 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보강 등 추진
 - *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 위임 기관의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제도도입 독려(지자체 등)

3-6. 승객 보험·보상 기준의 합리적 개선

- 승객 피해시 실효성 있는 보상범위를 도출하고, 관계법령 개선으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범위 준용기준 상향 검토)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상 보상범위 실효성 검토 및 항만운송사업법의 다중이용선박(통선 등)의 보상보험 규정 신설 추진(비사업용 레저선박 제외)

4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화

◆ 다중이용선박 운항자 및 이용자 대상 맞춤형 안전캠페인 추진 등
범바다 해양안전문화 확산방안 추진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4-1. 소형 다중이용선박 기초안전수칙 준수 확산

- 선박종사자 및 선주 대상 의식제고 및 비상대응역량 교육 강화
 - 소형 다중이용선박 선주 안전교육 확대, 선박검사 및 안전점검시 기본안전수칙, 비상 대응요령 등의 현장 안전교육 실시 강화
 - 선박복원성 시뮬레이터, 연안해역의 해상교통류 영상 정보자료 및 지역별·선종별 분석자료 등 시청각 교재 개발

○ 범국민 대상 기초 안전수칙 캠페인 추진

- 공중파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해양안전 공익광고 제작·방송
- 낚시객 등 반복적 해양활동 수행자 대상, 안전장비 상시착용 유도를 위한 'My Life-jacket' 캠페인 추진

* 농수산 홈쇼핑, 한국낚시방송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 홍보 실시

○ 소형선 운항자를 위한 '선박운항 필수안전수칙' 제작배포

- 필수적 기초안전수칙을 선박에 상시부착 가능토록 제작·배포 (7만부)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

* 필수안전수칙의 반복적인 숙지를 통해 최소한의 운항안전 준수 계도

○ 다중이용선박 운항자 대상 해양안전 메시지(SMS) 전송체계 구축

- 선박소유자, 선장, 안전관리자 휴대전화로 필수 해양안전 정보 (기상악화, 계절별 안전정보 등) 문자메시지(SMS) 전송

* 소형선(어선 등) 선장 및 안전관리자 약 8만여명중 6만6천여명의 전화번호 기 확보

** 소형선의 경우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 문자메시지 안전정보 전송이 가장 효과적

4-2.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 해수부, 안전처, 지자체 등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선박 안전제고 T/F*' 운영 정례화

* 해양수산부(여객선, 낚시어선), 국민안전처(유·도선, 레저선박), 지자체(내수면 유·도선), 선박검사기관, 선종별 유관단체 등

- 혁신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세부이행대책 수립, 기술기준 마련,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 상시협업 체계 구축

4-3. 승무원, 승객 대상 안전의식 제고

- 출항전 승객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등 기본안전수칙 및 비상시 대응요령 교육 의무화

* 항공기 이용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중이용선박에 도입하되, 선박의 형태와 운항특성을 고려 안내방송 등 현실적 방안마련

-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강화, 자긍심 제고 및 비상시 승무원 식별을 위해 승무원 제복 착용 추진

4-4. 범국민 해양안전의식제고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 기반시설 확충

- 해양안전체험관에 다중이용선박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 선박 안전·구조장비 교육, 선박운항체험, 선박탈출, 해양생존 훈련 등

- 대국민 해양안전체험 접근성 강화 및 상시 안전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해양안전장비 기초체험관 개설

* 해양안전실천본부(세종시)에 구명조끼, 조난통신장비 등 해양안전장비 전시 공간 마련('16.10) '16년 이후 전국확대(11개 지역본부)

- 안전대책 강화에 따른 추가 안전설비 설치 지원 여부 검토

* 낚시어선의 경우, 휴어기 어업종사자 생계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안전설비기준 강화시 어민반발 예상

VI 향후계획

□ 추진방안

○ (추진체계) “다중이용선박 안전제고 T/F”를 중심으로 선종별·소관기관 별 안전관리 개선 대책 추진

- * 해양수산부 : 여객선(연안해운과), 낚시어선(수산자원정책과, 어선정책팀), 통선(항만운영과)
- ** 국민안전처 : 유·도선(안전제도과, 해상안전과), 레저선박(수상레저과)
- *** 자치단체 : 내수면 유·도선, 레저선박(시·도지사)

- 소관법령별 개정사항 식별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안전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16년 상반기, 해수부 주관)
- '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에 대책(안) 반영하여 이행상황 추진·환류

○ (제도개선) 대책을 통해 수립된 개선방안을 선종별 개별 사업법*상 안전관리 기준에 반영 및 관련 안전대책에 포함하여 추진

- * 해운법, 유·도선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 전 선종에 공통적용되는 제도개선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정(안) 마련·추진(선박안전법 등)

○ (예산확보) 구명설비 연구개발(R&D),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안전문화 확산 등 주요 예산투입과제는 편성과정에서 추후 협의

□ 추진일정

○ (단기, '16년) 안전관리 제도개선, 기준정비 등 주요 개선과제

- * 다중이용선박 안전설비 개선(구명설비, AIS 등), 승선정원 및 승무기준 개선, 승객대상 사전 안전교육 및 승무원 제복착용 등

○ (중기, '17년) 연구개발, 역량강화 등 예산, 조직 수반과제

- * 해양안전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검사인력 추가확보 등

○ (지속사업) 안전문화 조성, 해상교통환경 개선 등 상시추진 과제

- * 양식장, 폐기물 등 항행위해요소 제거 사업 추진, 해양안전문화 조성 등

참고 1**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개선과제 추진 로드맵**

추진과제	주요내용	조치사항	추진기한	비고
1. 안전관리 기본요건 개선 및 제도 혁신				
1-1. 승선정원 산정방식 개선	· 최대승선인원 산정방식 개선 · 선원과 승객의 구분	제도개선	'16.하반기	단기
1-2. 승객 안전관리를 위한 승무기준 강화	· 안전관리자 추가승선	제도개선	'16.하반기	단기
1-3.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 교육과정 및 시간 개편 · 현장교육강화, 교육교재개발	제도개선 기준정비	'16.하반기	단기
1-4. 입·출항 신고제도 실효성 확보	· 입출항 신고 체계 개선 · 승선명부 작성, 현장점검 강화, 전산시스템 개발	제도개선	'16.하반기	단기
1-5. 운항가능해역 및 영업시간 개선	· 야간영업 특별관리 · 운항해역 조정	제도개선	'16.하반기	단기
1-6. 사고이력 관리를 통한 면허 발급기준 강화	· 면허발급시 사고이력 반영	제도개선	'16.하반기	단기
2. 인명안전 우선의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 적용				
2-1. 구명설비 탑재기준 강화	·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탑재기준 통일 · 구명설비 연구개발	기준정비 연구개발	'16.하반기	단기
2-2. 설비기준 강화	· 선종별 복원성 기준 검토 · 육상용 기관 사용 제한	기준정비	'16.하반기	단기
2-3.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 의무화	· AIS 장착 및 작동 의무화	기준정비	'16.하반기	단기
2-4. 자동 조난신호발신장치 개발 및 운영 추진	· 자동조난신호 발신장치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연구개발 제도개선	'17.하반기	중기
2-5. 구명조끼 상시착용 대상 확대	· 외부 갑판상 활동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개선 기준정비	'16.하반기	단기
2-6. 선박안전검사 강화	· 검사항목, 검사주기 조정 · 합동 안전점검 정례화	제도개선	'16.하반기	단기

3. 보다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3-1. 안전한 선박운항여건 조성	· 해상교통환경 분석·개선 · 용역 추진 및 이행방안 도출	연구용역	'16.하반기	단기
3-2. 항행 장애요소 제거 활동 강화	· 해양부유물 제거사업 · 폐그물 관리제도 도입	제도개선	지속	지속
3-3. 안전점검·검사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 지침 개발·보급 · 검사인력 추가 확보	제도개선	'16.하반기	단기
3-4.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소형선박 항해·통신장비 · 로프 감김사고 예방장치 · e-Navigation 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속	지속
3-5. 내수면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안전설비 탑재·관리 의무 강화 · 지자체 해기전문인력 보강	제도개선	'17.하반기	중기
3-6. 승객 보험·보상 기준의 합리적 개선	· 보상범위 상향조정	법령개정	'16.하반기	단기

4.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화

4-1. 기초안전수칙 준수 확산	· 현장안전교육 강화(선주포함) · 시청각 교육교재 개발 · 공익광고 제작·방송 ·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 · 필수안전수칙 제작·배포 · 해양안전 메시지 전송	제도개선	지속	지속
4-2.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 다중선 T/F 회의 정례화 · 협업체계 구축	제도개선	'16.상반기	단기
4-3. 승무원, 승객 대상 안전의식 제고	· 출항 전 승객교육 의무화 · 승무원 제복착용	제도개선	'16.상반기	단기
4-4. 해양안전의식제고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 기반시설 확충	· 체험프로그램 개발 · 해양안전 기초체험관 개설	제도개선 시설마련	'16.하반기	단기

참고 2

선종별 해양사고 통계(2010~2014)

선박용도	연도	사고 건수 (단위:건)	사고척수 (단위:척)	인명피해 (단위:명)		
				사망	실종	부상
여객선 (내항)	2010	14	15	2	0	0
	2011	19	19	2	0	0
	2012	22	23	0	0	12
	2013	21	24	0	0	41
	2014	43	43	296	8	15
유도선	2010	6	6	0	0	0
	2011	5	6	0	0	7
	2012	10	12	0	0	12
	2013	4	4	0	0	0
	2014	8	9	0	0	2
낙시어선	2010	90	92	0	0	4
	2011	97	103	2	1	22
	2012	100	106	0	0	10
	2013	75	79	0	0	15
	2014	74	79	0	1	40
모터보트+ 요트**	2010	80 (5)	83 (6)	0 (1)	0 (0)	0 (4)
	2011	120 (2)	123 (2)	0 (0)	0 (0)	2 (1)
	2012	72 (2)	78 (2)	0 (0)	1 (0)	3 (2)
	2013	91 (5)	99 (6)	3 (0)	1 (0)	20 (6)
	2014	100 (6)	109 (7)	1 (0)	0 (0)	11 (10)
통선	2010	1	2	0	0	0
	2011	4	7	1	0	2
	2012	1	1	0	0	0
	2013	0	0	0	0	0
	2014	0	0	0	0	0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괄호()안은 수상레저사업용 모터보트, 요트의 사고통계(출처 : 국민안전처)

참고 3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련 제도 비교

구 분	여객선	유도선	통선	낙시어선	레저선박
안전 기준 (구멍뚫목)	구멍뚫목 설치 (연해구역 항해시) * 평수구역 항해시 구멍부기로 완화			구멍 뚫목, 구멍부기 중 선택	
AIS 장착기준	13인 이상 승선선박 의무설치			미설치 (5톤이상 V-Pass 설치)	미설치
EPIRB 설치여부	설치 (연해구역 항해시)			미설치	EPIRB 또는 디지털 선택 호출 장치(DSC)
복원성 기준	국제기준 적용 5개 복원력 평가요소를 모두 적용			완화된 1개의 복원력 평가 요소 적용	3개 복원력 평가요소 적용
구멍조끼 착용의무	착용의무 없음			법안 계류중	수상레저 활동시 착용 의무화
선원기준 (25톤미만 소형선)	2명 (선장, 6급 항해사 / 기관장, 소형선박 조종사)		1명 (소형선박조종사)		1명 (일반, 요트 조종면허)
승선정원 산정기준	침대석 · 좌석 · 의자석의 개수 및 입석의 단위면적(0.3~0.35㎡) 등으로 산출			좌석수 등과 무관 하게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간이산정	침대, 의자석, 좌석의 단위면적 (0.45~0.85㎡) 등으로 산출
교육기준	【직무교육】 여객선 직무교육 (면허시 3일) 여객선 상급·기초교육 (매5년 2일)	【직무교육】 안전교육 (매년 4시간)	-	【직무교육】 안전교육 (매년 4시간)	【면허교육】 면허 발급, 갱신시(7년) 1회
항행구역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평수, 연해, 근해로 구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 관할수역 (타 관할수역 운항가능)	평수, 연해, 근해로 구분
운항시간	개별 사업법에 의거 영업면허 등록시 영업·운항시간 제한				
입출항 신고기관	운항관리실 해상교통관제실	해상교통 관제실	해상교통 관제실	해양경비안전서 (일부민간위탁)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10마일 이상 항해시)
지도감독 기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해양경비 안전본부 지자체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배상 기준	[강제] 상법의 최대 보상한도 175,000SDR(1인 약 2.7억원)		[권고] *법근거 없음	[강제] 1.5억원이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준용)	

참고 4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개선 TF 구성안

	부 처(실·국)	소관부서	담당자
총괄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고준성 事 (044-200-5846) 한승현 主 (044-200-5817)
낙시어선 안전관리	어업자원 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조수정 主 (044-2000-5539)
		어선정책팀	김형덕 事 (044-200-5523)
레저선박 안전관리 (마리나)	해양산업 정책관	해양레저과	최장원 事 (044-200-5255) 최종영 主 (044-200-5257)
레저선박 안전관리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	오정동 경감 (032-835-2951) 김민지 경사 (032-835-2452)
항만내 통선 등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김세희 事 (044-200-5773)
선원교육 등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김태환 事 (044-200-5741)
선박 기술기준 검토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이창용 事 (044-200-5831) 오지설 主 (044-200-5833)
유도선 안전관리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안기영 主 (02-2100-5168)
유도선·레저 선박 등 안전관리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박치영 경감 (032-835-2248) 임조영 경사 (032-835-2449)
해양사고 통계·관리	중앙해양 안전심판원	조사관	강용석 事 (044-200-6122) 김태훈 主 (044-200-6123)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	자치단체 (시·도)	유·도선 수상레저선박 부서	담당자

참고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추진과제	사업내용	예산액				
		2016	2017	2018	2019	2020
1. 안전관리 기본요건 개선 및 제도 혁신						
1-3. 다중이용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교육 위탁	3	3	4	4	5
	교육교재 제작	1	1	1	1	1
1-4. 입·출항 신고제도 실효성 확보	입출항 전산시스템 개발	10	15	3	3	3
1-5. 운항가능해역 및 영업시간 개선	야간운항선박 안전관리 강화		10	15	3	3
2. 인명안전 우선의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 적용						
2-1. 구명설비 탑재기준 강화	소형선박용 구명뗏목 연구개발	3				
2-2. 설비기준 강화	소형선 선박 복원성 개선 연구용역		3			
2-4. 자동 조난신호발신장치 탑재 및 운영 추진	소형선박용 자동 조난발신장치 연구개발		5	10	5	
3. 보다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3-1. 안전한 선박운항여건 조성	선박통항로 안정성 평가 용역	24	10	10	10	10
3-2. 항행 장애요소 제거 활동 강화	폐기물 등 수거사업 실시	200	220	240	250	270
3-3. 안전점검·검사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	안전관리 지침 개발 용역·배포		2	0.5	0.5	0.5
	선박검사인력 충원	2	4	6	9	9
3-4.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소형선박용 통합 항해·통신장비 연구개발		10	30	10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체계 구축	17	43	78	143	93
3-5. 내수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5	15	25	30	40
4.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화						
4-1. 기초안전수칙 준수 확산	시청각 안전교육 교재 개발	2	2	3	3	4
	공익광고 제작·방송		4	5	6	6
	필수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		4	4	4	4
	해양안전 메시지(SMS) 전송체계 구축		1	1	1	1
4-2.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다중이용선박 안전제고 T/F 운영	0.3	0.5	0.5	0.7	0.8
4-4. 해양안전의식제고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 기반시설 확충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50	117	200		
	해양안전장비 기초체험관 구축		1.5	3	0.5	0.5
합계		317.3	471	639	483.7	450.8